



국민계정리뷰

National Accounts Review



- [논고] 삶의 질(quality of life) 관련 우리나라 국민계정통계개선 방안 연구
- [자료] 상세자금순환표를 통해 본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
- [자료]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 관련 국제적 논의내용
- 한국은행 경제통계 안내
- 2023년 4~9월중 통계공표일정

2023년 제1호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한국은행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ok.or.kr>

국민계정리뷰

NATIONAL ACCOUNTS REVIEW

◆ [논고] 삶의 질(quality of life) 관련 우리나라 국민계정통계 개선 방안 연구	1
◆ [자료] 상세자금순환표를 통해 본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	59
◆ [자료]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 관련 국제적 논의내용	80
◆ 한국은행 경제통계 안내	101
◆ 2023년 4~9월중 통계공표일정	114



한국은행
BANK OF KOREA

삶의 질(quality of life) 관련 우리나라 국민계정통계 개선 방안 연구

이상호*, 이광원**

본 연구는 먼저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와 관련하여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 및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0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현행 국민계정통계 국제표준(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2008 SNA) 개정 작업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위성계정을 통해 무급 가사노동, 교육훈련·인적자본·노동, 건강·사회적 여건,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삶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위성계정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중심계정(Core Account)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계정통계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2025 SNA에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위성계정 활용 방안이 포함될 계획임에 따라 각국의 통계작성기관들은 삶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위성계정을 개발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삶의 질 관련 국민계정통계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우리나라 위성계정 작성 현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 서론

II. 기존 논의 내용 및 연구 결과

1. 국외
2. 국내

III. 국민계정 내 삶의 질 정보 반영 관련 국제 논의

1. GDP의 개선을 위한 노력
2. 위성계정에 대한 최근 논의 및 현황
3. 최근 삶의 질 반영 관련 주요 논의 내용

IV. 우리나라 삶의 질 관련 통계(위성계정 등) 개발 현황

1. 위성계정 개발 현황
2. 위성계정 평가

V. 시사점

* 상명대학교 지능·데이터융합학부 교수 (e-mail: sang-ho.yi@smu.ac.kr, phone: 02-2287-6160)

**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 (e-mail: bruce.lee@bok.or.kr, phone: 02-759-4167)

※ 본 연구의 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I. 서론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등 국민계정통계는 1930년대 처음 작성된 이후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해 왔다. 현재는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GDP는 한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경제 분석은 물론 국가 간 발전 정도를 비교하는 잣대로도 쓰이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GDP는 원래 목적이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화폐적 가치'가 가져다 주는 이익의 크기 측정에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총량지표로서 유용성이 확인된 지표이다.

반면 GDP 등 국민계정통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가(leisure)라든가 환경오염과 같은 비경제부문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은 국민계정통계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비판이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은 평균적인 개인의 경제적 후생(economic wellbeing)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유용하지만 소득·부의 분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성장(progress)에 대해서도 제한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표적인 국민계정통계인 GDP의 측정 대상과 범위의 적정성도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특히 국민계정체계 하에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의 포괄범위 및 가치평가 관련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상호, 2020). 이로 인해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에 따른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에 의해 창출되는 효용이 국민계정통계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UN 등 국제기구의 국민계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계정실무그룹(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ISWGNA)은 국민계정통계를 통해 삶의 질과 관련한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계정실무그룹은 2025년을 목표로 국제기준 매뉴얼(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 웰빙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과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지침서(guidance note)를 작성하고 있다. 주요 이슈들로는 소득분위별 가계 분배 통계 편제, 인적자본과 무급 가사노동 포착, 환경과 천연자원 관련 회계처리 등이다. 특히 다양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 개발

1) 이하에서는 국제기준 매뉴얼을 의미할 경우 'SNA'로 표기하고 추상적인 국제기준의 지칭할 때는 '국민계정 체계'라고 표현한다.

을 통해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삶의 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삶의 질 관련 통계 작성 현황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긴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질과 관련한 우리나라 국민계정통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계정체계 하에서 웰빙, 지속가능성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 및 연구 결과들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다. 국민계정통계가 삶의 질 변화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이에 대응하여 UN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은 위성계정 및 대안지표 개발, 미시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특히 ‘Extended GDP’ 접근법에서는 중심계정(Core Accounts)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위성계정을 이용하여 제공하려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Extended GDP 접근법에 기반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위성계정 작성 현황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가계생산 위성계정 (Household Production Satellite Account, HPSA; 통계청), 보건계정 (Health Account, HA; 보건복지부), 환경보호지출계정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ccounts, EPEA; 환경부), 관광 위성계정 (Tourism Satellite Account, TSA;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위성계정 현황을 조사한다. 셋째, 웰빙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우리나라의 관련 통계 작성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삶의 질 측정관련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계정통계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국민계정통계의 한계 및 개선 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 내용과 연구결과를 국내외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국민계정내 삶의 질 정보 반영 관련 최근에 진행되어 온 국제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IV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위성계정 현황 및 특징들을 살펴본다. 끝으로 V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기존 논의 내용 및 연구 결과

국제기구나 연구기관 등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민계정통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예를 들어 OECD BLI(Better Life Index),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참진보지수(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 등 다양한 국민계정통계의 대안 지표들이 개발되었고 일부는 현재까지 공표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 위성계정을 통한 국민계정체계 확장에 관한 2008 SNA²⁾의 내용, 유럽통계전문가회의(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CES)의 위성계정 심층 검토, OECD의 대시보드 및 지표 체계,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포괄적(포용적) 부(Wealth) 등 국제적으로 이미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구 및 개발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1. 국외

가.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 보고서

웰빙을 측정하는 지표로서의 GDP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Joseph Stiglitz, Amartya Sen 및 Jean-Paul Fitoussi가 작성한 “경제성과 및 사회발전측정위원회³⁾”의 보고서(이하, ‘스티글리츠 보고서’)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광의의 자본스톡(산업자본, 환경 및 자원스톡)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면서 생산 측면을 강조하는 GDP를 넘어서는 삶의 질 관련 새로운 지표 개발을 제안하였다(Stiglitz et al., 2009).

스티글리츠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의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처음 다섯 가지는 거시경제 통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 권고사항 1: 물질적 웰빙을 평가할 때 총량 개념의 생산보다 소득과 소비를 먼저 고려
- 권고사항 2: GDP와 가계소득이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가계의 관점을 강조
- 권고사항 3: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부(wealth)는 소득 및 소비와 함께 고려

2) 2008년에 공표된 국민계정 국제매뉴얼로 가장 최신판이다.

3) 위원회의 공식 영문 명칭은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CMEPSP)이다. 경제와 사회에 대한 통계 정보 상황에 만족하지 못했던 프랑스의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Nicholas Sarkozy)의 요청에 의해 2008년 경제학자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를 주축으로 설치되었다.

- 권고사항 4: 평균개념의 소득, 소비, 부는 실제 생활수준과 괴리를 보일 수 있으므로 소득계층별 분배를 더욱 강조
- 권고사항 5: 비시장 활동(non-market activities)으로 확대하여 소득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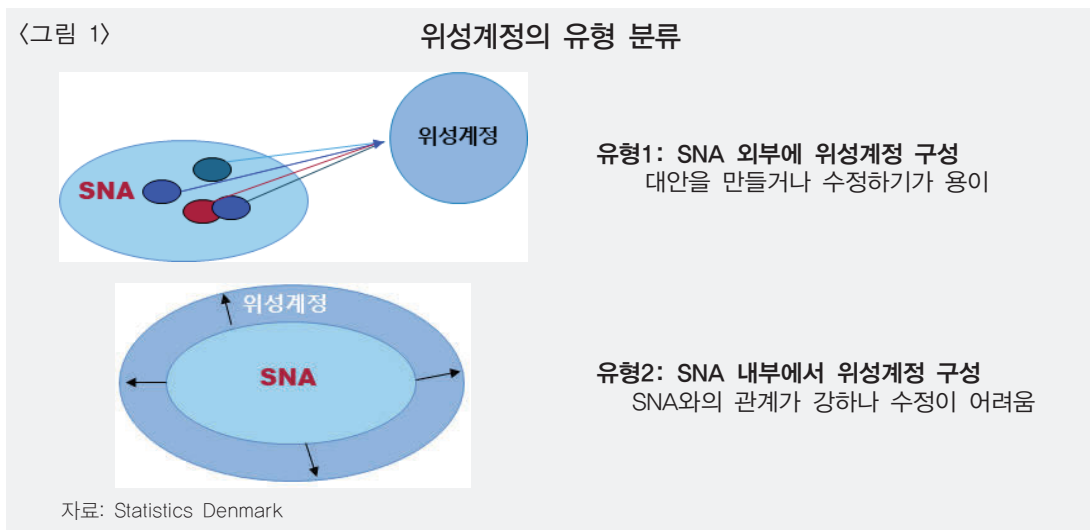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고서에 웰빙 또는 지속가능성을 단일 지표를 통해 포착할 것을 권고하지 않고 웰빙이 다원적인(multi-dimensional) 개념이라고 규정하고 측정을 위해 적절한 지표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총생산에서 가계의 소득과 소비로의 강조 전환 및 GDP와 가계가처분소득(조정) 간 격차 증가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다. 또한 특정 가계 집단이 거시경제 발전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국민계정통계와 적합성을 가지는 가계소득, 소비, 저축 및 부의 분배 통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 위성계정과 기타 확장에 관한 2008 SNA의 내용

국민계정체계는 거시경제학의 경험적 기초를 제공하는 측정 도구로서 이용되었으며 사회에서 경제적 사고(economic thinking)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지배는 경제라는 개념이 정부와 일반대중의 관심사가 되도록 이끌었다(Hoekstra, 2020b). 그 결과 국민계정통계는 중심계정(core account)으로 여겨져 왔다. 사회 발전이나 환경 변화와 같은 것들은 경제 관련 담론에서도 나타나기는 했지만 ‘주변적(peripheral)’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종종 사회 및 환경 영역에서 비용이나 편익을 뜻하는 ‘외부성(externality)’이라는 용어는 핵심이 아닌 주변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져 왔다(Doughnut, 2017). 1993 SNA에서 처음 등장하였지만 자주 언급된 위성계정 개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국민계정체계의 중심계정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1993 SNA는 환경, 관광, 노동 또는 무급 가사노동/돌봄과 같은 영역의 경우 SNA와 유사한 개념과 규칙을 사용하는 위성계정을 허용했다. 다만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1장 E)에 그쳤다.

한편 2008 SNA (제29장)에서는 위성계정과 SNA의 확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계정은 새로운 분류를 도입한다거나, 중심계정과 관련은 있지만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연한 메커니즘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2008 SNA의 강점으로 평가되었다. 2008 SNA는 여러 개념과 계정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통합되고 일관된 계정들을 생성하는 데 있어 엄격한 회계처리를 요구하지만 통계편제자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프레임워크를 변경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였다.

2008 SNA에서는 위성계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2008 SNA 문단 29.5). 즉 ‘주제’ 계정(theme-based accounts)과 ‘확장’ 계정(extended accounts)이 있다.⁴⁾ 이러한 유형의 분류는 위성계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된다. 이와 같이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위성계정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이나 작성 지침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통계 국제사회에서는 ‘주제’ 위성계정과 ‘확장’ 위성계정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은 2008 SNA에 기술된 위성계정의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주제’ 위성계정은 일반적으로 2008 SNA의 핵심 개념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중심계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국민계정체계의 기본 개념을 따르되, 이용자가 보다 직관적이고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계정체계 중심계정의 분류를 재그룹화 또는 재배열한다(UNECE, 2019). 따라서 위성계정에 있는 많은 요소들이 중심계정에 나타나지 않지만 중심계정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주제 위성계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관광위성계정, 문화위성계정 또는 스포츠위성계정 등이 있다. 이러한 계정은 2008 SNA에서 정의한 생산, 소비 및 자산의 경계 내에서 시장가격 평가원칙에 따라 작성되지만 부문(sector) 기반을 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제별 위성계정의 경우 그 범위가 특정 활동 또는 활동 그룹이나 어떤 부문으로 제한되므로 생산의 경계 등의 개념이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확대될 수는 있다(UNECE, 2019).

다음으로 확장 위성계정은 작성 목적 면에서 SNA에 대한 대안적 성격(2008 SNA 문단

4) 완전성을 위해 주제 및 확장된 접근방식을 모두를 반영하는 ‘혼합형’(blended type) 위성계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한다(Statistics Canada, 2020). 그러나 본고에서는 혼합형 계정은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29.6)이 강하지만 이와 같은 위성계정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명칭은 없다.⁵⁾ 여기서는 자산·생산 범위를 확대하거나 천연자원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부(wealth)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몇 가지 대체 개념들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한다(임재영, 2010). 이 유형도 첫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분류의 재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다루려는 분야에 대한 대안적 개념이 강조된다. 확장 위성계정도 중심계정의 개념, 구조 및 통계를 사용하지만 이에 크게 제약 받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기존 개념을 확대하거나 생산, 소비 및 자산 경계를 확장한다는 것이다. 중심계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장경제 외부에서 발생하는 생산활동 및 자산 유형을 포함하거나 국민계정체계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UNECE, 2019). 무급 가사노동과 관련된 위성계정은 2008 SNA의 생산 경계를 확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인적자본과 관련된 위성계정은 2008 SNA의 자산 경계를 확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위성계정에는 물리적 단위 또는 노동시장 투입시간 등과 같은 비화폐 단위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환경경제통합계정통계(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Statistics)는 물리적 단위가 효과적인 분석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이다.

다. 유럽통계전문가회의의 위성계정 검토 자료

최근 들어 상세한 통계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관광, 가사노동 등 경제의 특정 부문에 관한 위성계정을 작성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제별 위성계정과 관련하여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침을 개발한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8년 2월 유럽통계전문가회의(CES) 사무국은 위성계정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년 후 2019년 2월 CES는 캐나다 통계청이 작성한 보고서⁶⁾를 토대로, 위성계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UNECE, 2019). 보고서에서는 위성계정의 목적, 유형, 국별 작성 관행 등에 대해 소개하고 다양한 위성계정에 대한 국제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1월 국민계정 자문전문가그룹(Advisory Expert Group, AEG)과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웰빙과 지속가능성 포착 목적의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성계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확장된 계정에서 웰빙 및 지속가능성 통계 작성을 통해 국민계정체계 중심계정과 위성계정 간의 일관된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UNECE, 2019).

5) 웰빙 계정, 가계 계정, 생태계 계정과 같은 하위 그룹 또는 개별 계정에 대한 공통 명칭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계정 그룹을 설명하는 공통 명칭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다.

6) 이 보고서는 2018년 OECD, Eurostat, UNECE, UNSD, IMF의 지원을 받아 캐나다 통계청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위성계정에 관한 글로벌 국가 서베이를 기반으로 한다.

분배의 측정을 포함한 물질적 웰빙과 보다 광범위한 이슈인 웰빙 및 지속가능성 간 명확한 연결을 제공함으로써 2008 SNA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웰빙 및 지속가능성은 현재의 국민계정체계를 무급 가사노동,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s, SEEA)⁷⁾, 건강 및 교육 등 중심계정에서 포착되지 않는 개념과 결합함으로써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국민계정 자문전문가그룹은 웰빙 및 지속가능성의 지표와 중심계정의 통합을 촉진하고 다른 통계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용어와 통합된 개념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캐나다 통계청이 작성한 심층 검토 보고서에서는 국민계정실무그룹의 주도로 확장된 일련의 ‘경제, 사회 및 환경 계정’을 제안하는 지침서를 준비하여 UN통계위원회(UN Steering Committee, UNSC)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하였다. 그것은 2008 SNA의 무급 가사활동, 환경과 관련한 외부효과,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측정을 포함한 웰빙 및 지속가능성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⁸⁾ CES 사무국은 위성계정 작성지침서 개발, 모범사례 공유를 촉진하는 플랫폼 개발,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이 회원국들이 합의한 확장계정의 구현을 촉진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라. 대시보드 및 지표 체계

1990년대 초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는 지표 ‘대시보드(dashboard)’의 도입이었다. 이러한 발전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열린 제1차 지구정상회의(First Earth Summit)에 의해 촉진되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미래세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문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리우데자네이루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중시하였다. 지구정상회의에서의 합의사항 중 하나는 이러한 현상을 측정하기로 한 것이었다.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SD)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측정하기 위해 단일지표가 아닌 지표세트(indicator set)의 작성방안을 제안하였다(UN, 1996). 그 목표는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지표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지표의 작성은 결국 중단되었지만, 전 세계 정부와 국제기구의 지표세트 사용을 촉진하였다(Hoekstra, 2019). UN 지속가능발전 프로세스는 가

7) 이하에서는 국제기준 매뉴얼을 의미할 경우 ‘SEEA’로 표기하고 추상적인 국제기준의 지칭할 때는 ‘환경경제통합계정’이라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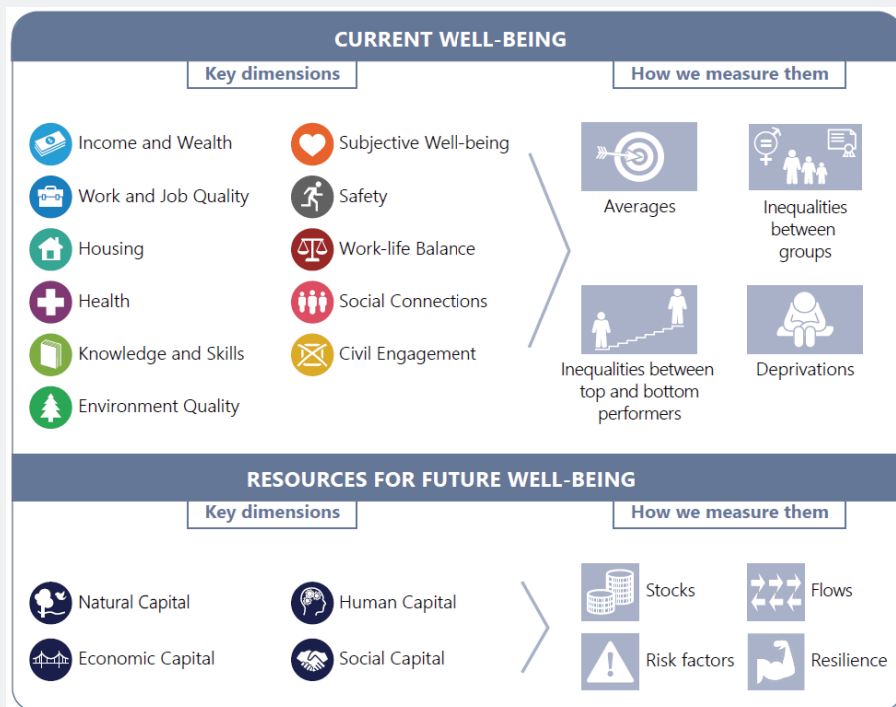
8) <https://statswiki.unecce.org/display/SAOI/Satellite+Accounts+-+Online+Inventory+Home>

장 영향력있는 'Beyond GDP' 이니셔티브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표 대시보드 방식은 스티글리츠 보고서의 권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OECD의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Better Life Initiative, BLI)에 따른 「How's Life?」 보고서이다. OECD는 2011년부터 회원국 통계청의 협조를 얻어 작성하고 있다. 이 지표는 대안 GDP의 하나로서 시작된 것으로 처음에는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37개국 대상 총 11개 영역에 대하여 점수 산출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 방식의 특징은 웰빙을 다차원 구조로 개념화하고 현재의 웰빙과 시간에 걸친 미래의 웰빙(지속가능성)을 구별하며 현재의 웰빙은 '삶의 질'과 '물질적 조건'을 분리하되 둘 다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웰빙의 측정 체계에서 현재 웰빙의 11개 영역은 건강 상태에서부터 일·가정 양립, 교육·기술, 환경, 개인안전, 주관적 웰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물질적 조건은 세 가지 특정 차원(소득·재산, 일자리·소득, 주거)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스티글리츠 보고서에서처럼 OECD의 측정 체계에서도 미래의 웰빙, 즉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인 네 가지 자원(자연자본, 인간자본, 경제자본 및 사회자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20).

<그림 2>

OECD의 웰빙 체계



자료: OECD, 2020

현재의 웰빙과 미래의 웰빙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현재의 웰빙이 미래 웰빙의 지속가능성 기반을 만들고, 미래의 웰빙이 다시 현재의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김상민·김현호, 2019). 「How's Life?」 보고서에 따라, 현재의 웰빙에 해당하는 11개 영역(domain)에 대해서 BLI (Better Life Index; 더 나은 삶의 질 지수)가 작성되고 있다. 11개 영역은 다시 25개의 하위 측면으로 구분되고 다시 48부문으로 세분되어서 지표들이 산출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성·연령·교육 등 특성별 불평등 지표들을 산출함으로써 각 국가의 부문별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OECD, 2020). 최근에 OECD는 후술하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년 UN 제70차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SDGs는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상호 연결된 광범위한 17개 목표들은 인류 공동의 목표로 경제, 사회 및 환경 분야에 있어서 세계 정책의 통합을 추구한다. 구체적인 지표 체계는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 이행을 위한 후속 및 검토 메커니즘으로서 회원국의 진행 상황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2017년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SDGs에는 17개 목표 이외에 169개의 관련 세부 목표 그리고 관련된 232개 하위 지표들을 포함한다.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 목표의 진행 상황 평가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지수’(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dex, SDG Index)가 수록되어 있다.



UN과 회원국 간 정치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17개의 목표와 이와 관련있는 지표들은 세계 많은 지역의 정책 목표 설정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와 미래의 웰빙 측정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국민계정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바. 포괄적 또는 포용적 부

포괄적 부 측정지표(measures of comprehensive wealth)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웰빙과 관련된 경제지표를 보완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부의 측정지표는 생산자본과 금융자본의 전통적인 국부 개념을 확장하여 자연자본과 인적자본도 포함한다. 신뢰, 협력, 시민참여와 같은 사회자본은 미래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비화폐적 지표이기 때문에 측정에서는 제외되었다. 사회자본에 화폐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개념과 척도의 개발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UN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이 큐슈 대학 및 기타 협력기관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2018년 포괄적 부의 보고서」(2018 Inclusive Wealth Report)와 World Bank이 발간한 「2018년 국제 부의 변화,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 보고서」(The Changing Wealth of Nations 2018,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는 포괄적인 부의 측정치를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개발 수준이 다른 여러 국가에 대한 부의 측정 개념 적용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한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해 제고와 관련하여 부와 부의 구성이 현재 소득의 측정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포괄적 부의 개념에 따라 World Bank는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⁹⁾ 연례보고 지표의 하나로써 ‘조정 국민순저축(Adjusted Net Savings, ANS)’을 2011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조정 국민순저축은 국민순저축에서 생산자본의 감가상각, 하층토 자산과 목재 자원의 고갈, 인간건강에 대한 대기오염 피해의 비용을 차감하고, 인적자본을 위한 교육비 지출을 더하여 측정된다. 이는 기존의 국민순저축(국민총저축-고정자본소모)에 인적자본 조정을 위해 공공 교육비 지출을 저축으로 추가하고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피해 및 천연 자원 고갈을 차감한 개념이다(김영태·박진호, 2012). 이 지표도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LI)’처럼 UN의 SDGs를 염두에 두고 개선된 바 있다. 즉 SDGs과 관련된 지표들을 더

9) WDI는 1978년 이후 발표되었으며 1960년부터 2016년까지 1,400여 개의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여 작성되고 있다(World Bank, 2017). 최근에는 빈곤, 사람, 환경, 경제, 정부와 시장, 글로벌 연결성에 해당하는 총 6개 영역의 국가별 지표를 비교하고 있다.

많이 포함하도록 변경되었다.

사. 경제적 웰빙을 위한 확장된 통계체계

2015년 IARIW¹⁰-OECD의 공동 컨퍼런스에서는 ‘국민계정의 미래: SNA는 어디로?’라는 주제로 정보화 시대속에서 국민계정체계가 논리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 바놀리(André Vanoli)는 ‘광범위한 정보 시스템 관점에서 본 SNA의 미래’라는 논문을 통해 국민계정체계의 포착 범위를 경제, 자연, 사람 및 사회와 같이 네 가지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개념과 방법론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Vanoli, 2017). 바놀리는 이러한 광범위한 화폐 및 물리적(비화폐적) 측정방법 내에서 현행 국민계정체계를 ‘국민경제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Economic Accounts, SNEA)’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바놀리는 전통적인 국민계정체계와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 간 생산과 자산의 경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와 자연의 대체 관계를 ‘미지급 생태 비용’과 ‘생태 부채의 축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¹¹⁾ 현재의 웰빙과 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강조된 사항 중에는 여러 측면이 있는 웰빙을 화폐적 수치로 평가하는데 필요한 동등한 거래가치 개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과 암묵적인 가정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바놀리는 이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통합계정 시스템 구축을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데반(Van de Ven)은 Eurostat Review에 실린 ‘경제적 웰빙 및 지속가능성 측정: 현재와 미래를 위한 실용적 아젠다(Measuring economic wellbeing and sustainability: a practical agenda for the present and the future)’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가계부문을 부각시킴으로써 현행 국민계정체계 내에서의 가사노동 포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Van de Ven, 2019). 즉 가계 부문에 대한 국제 논의 결과와 함께 핵심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현행 국민계정체계를 넘어 무급 가사노동이 경제활동 측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를 구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슈에 대해 다루었다. 반데반은 궁극적으로 국민계정의 전통적인 거시경제체계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계정체계를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무급 가사활동, 환경, 웰빙 및 지속가능성 등 새로운 요소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최근

10) SNA 및 거시경제 측정과 관련된 방법론 연구와 각국의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1947년에 창설된 국제학술 연구단체이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국제 소득 및 부 연구학회).

11) 바놀리에 따르면, 미지급 생태비용(unpaid ecological costs)은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생태계 자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복원하는 비용의 가치를 의미한다. 생태 부채(ecological debt)는 자연에 대한 경제의 부채를 의미한다. 그것의 축적은 미지급 생태비용이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결과이다. 어떤 식으로든 악화된 생태계 자산이 복원될 경우 생태 부채의 재고는 줄어든다.

의 실용주의적 측정에 관한 논쟁과 일맥 상통한다. 또한 반데반은 이미 이용할 수 있는 가계관련 데이터에 대한 강조 외에도 화폐적 가치평가 관련 이용가능한 지침에 근거하여 환경, 건강, 교육 및 시간이용(time use)에 대한 표준 계정을 포함한 접근 방안을 제안하였다.

훅스트라(Rutger Hoekstra)는 2019년 저서인 ‘2030년까지 GDP 대체하기: 웰빙과 지속가능성 공동체를 위한 공통언어를 향하여’에서 전통적 복지경제학 이외의 과학인 환경학, 인구통계학 또는 다른 사회과학 같은 분야를 포괄하는 학제 간 체계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체계는 분배 및 네트워크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계정과 함께 물리적, 공간적, 인구통계학적 및 시간이용 계정을 포함한 경제계정 외에도 다양한 측면의 계정을 포함한다.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논의 확장에 대한 훅스트라의 주장은 통계와 정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다국적 채택에서 GDP의 성공과 사회발전 지표로서 GDP의 한계에 대해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된 개념과 체계가 여러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에 대한 유용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 기타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는 녹색회계(Green Accounting) 지수의 첫 번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1972년 노드하우스와 토빈에 의해 작성되었다(Nordhaus and Tobin, 1972). 이 접근법에 따르면 국민계정체계 경계를 벗어난 환경 및 사회적 ‘외부성’은 화폐가치로 평가되어 전체 거시지표 산출 시 조정된다. 또한 환경 파괴는 거시경제통계의 관련된 항목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여가 시간의 증가는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 경제후생지표는 나중에 지속가능경제후생지수(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ISEW)와 환경경제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참진보지수(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와 같은 녹색회계지표로 발전했다(Daly and Cobb, 1989; Cobb et al, 1995). 참진보지수의 경우 환경문제나 실업을 비용으로 간주하여 화폐가치로 평가한 후 GDP에서 차감 처리한다.^{12) 13)} 이러한 녹색회계에 기초한 사고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대부분 기간에 걸쳐 ‘Beyond-GDP’ 접근법의 개념을 지배했다.

12) 참진보지수는 존 콕과 허먼 데일리(Cobb and Daly, 1989)가 개발한 ‘지속가능한 경제후생지수(ISEW: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를 확장한 것으로 경제적 산출물인 GDP를 기준으로 경제발전을 측정하던 전통적 방식에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까지 고려해 기존 GDP에 대해 24가지 조정 작업을 거친다. 따라서 만일 비용이 편익을 넘어서게 되면 GDP가 성장하더라도 이는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악화된 것으로 본다(Talberth et al., 2007). [Lab2050-08, p.32]

13) 참진보지수는 이를 도출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따라 단일지수 방식만을 발표하거나 단일지수와 대시보드 형식을 함께 제시하기도 한다(이승준 외, 2021).

199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개념에 근거한 지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91년에 도입된 UN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였다. 이 지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야 센(Amartya Sen)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Sen, 1985). 동 지수는 국가 간 사회진보 수준 및 삶의 조건 비교를 위해 GDP 뿐만 아니라 자산·교육여건·기대수명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UN, 2015). 또한 비영리기관인 Social Progress Imperative는 GDP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경제성장 개념 대신 ‘사회성장’ 개념 하에 ‘사회성장지수’(SPI: Social Progress Index)를 개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Porter et al., 2015).

한편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UN SDSN)는 매년 전 세계 150여개 나라의 국민 행복도를 조사하여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UN 행복지수는 소득 수준(1인당 GDP), 사회적 지원(복지), 기대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삶 선택의 자유, 공동체 관용, 부패에 대한 인식 등 6개 항목을 토대로 하여 국가별 행복도를 측정하고 있다.

2. 국내

국내 연구는 주로 GDP 통계의 개선보다는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대안적 지표 개발 및 측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희길·심수진(2014)은 삶의 질 지표 개발을 제안하였는데, 이들이 작성한 지표는 물질과 비물질로 구분된 12개 영역이 있으며 하위 영역인 소득·소비·자산 영역에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 상대적 빈곤율 등의 객관적 지표(57개), 소득만족도와 소비생활만족도와 같은 경제주체의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 24개를 포함하여 총 8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1인당 소비지출, 1인당 가계부채, 환경, 주거, 안전 등), 34개의 소항목(최종가계소비지출, 오락문화비지출, 고용률, 기대수명, 범죄율, 부패지수 등)을 가중평균한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여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요건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행복지수(Economic Happiness Index, EHI)를 작성하여 2007년부터 반기별로 발표하였으나 2017년 제1호 이후 지수 작성을 중단하였다.

통계청은 2012년부터 학계와 함께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 작업을 시작하여

5년 간의 연구를 통해 2017년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삶의 질 종합지수는 소득·소비,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 11개 영역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손종철·임시영(2016)은 디지털경제 및 가계 삶의 질 측정과 관련하여 (i) AirBnB, Uber, e-Bay 등 디지털·공유경제 관련 포착대상 개선, (ii) 가계생산 활동관련 위성계정 작성 가능성, (iii) 생산자본 외에 자원의 소진 및 환경보호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광의의 자본스톡 지속 가능성, (iv) 국민계정(거시)과 가구패널(미시) 자료의 통합을 통한 가계의 소득분포 추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국민계정통계의 단기·중장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III. 국민계정 내 삶의 질 정보 반영 관련 국제 논의

일반적으로 GDP 등 국민계정통계는 경제의 양적 성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개별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국가 간 성과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GDP의 크기가 커지면(경제가 성장하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경제·사회 전반에 우려가 증대된다. 각국 정부나 학계, 연구자들은 국민계정통계의 변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언론 등은 이러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 전파한다. GDP,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등 국민계정의 소득통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양적 경제성장 측정지표로서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계정통계는 환경오염이나 여가, 건강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비판론자들은 GDP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집단적 복지나 환경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공정성과 같은 사회적 목표들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고용없는 성장은 글로벌 현상이 되었으며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훼손,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간의 웰빙 또는 복지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한다. 경제성장에 과도하게 집중한 결과 사회의 진정한 목표와 과제를 놓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Hoekstra, 2020a).

외형적인 경제성장(총량 소득 증가)보다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는 웰빙의 실현이 좀 더 가치있는 목표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학계와 국제기구 등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담론도 형성되어 있다. 즉 화폐가치로 평가된 산출물을 기준으로 한 GDP의 증감만으로는 한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 수준을 충분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적·환경적·문화적 발전 수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 경제로의 전환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측정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많은 작업과 시간이 필요하다. 측정지표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담론과의 중요한 연결 고리이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지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측정지표의 개선 및 개발을 위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논의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1. GDP의 개선을 위한 노력

국민계정통계의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스티글리츠 보고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동 보고서에는 GDP 등 국민계정통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발전 측정지표 개발, 측정 대안에 대한 실행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를 기점으로 ‘삶의 질’을 반영하는 통계 작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 개념의 도입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진 가운데 UN, World Bank,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 또는 ‘후생’ 등을 측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환경, 여가 등의 가치를 정량화하여 국민계정체계 내에 이를 보완하는 ‘확장 GDP(GDP+)’ 방식이다. 둘째, GDP 통계와는 별도로 주관적인 행복, 후생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GDP를 넘어서(Beyond-GDP)’ 방식이다. 셋째는 OECD가 2020년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를 통해 제시한 경제, 사회 및 환경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 삶의 질, 지속가능성 측면을 포괄하여 측정하는 통합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이다.

가. 확장 GDP (Extended GDP)

The Economist誌는 2016년 ‘How to measure prosperity’라는 기사를 통해 GDP가 생활 수준 혹은 물질적 번영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단일 측정단위(single metric)로서 장점이 많지만, 최근 경제적 번영을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생활수준의 질적인 변화, 불평등 수준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후생(welfare)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모호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번영의 효과적 측정을 위해 생산량과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롭고 광범위한 개념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가정내 무급 가사노동(자녀 돌봄 등), 서비스의 질적 변화(의료산업의 생산량 추정에서 수명연장 효과 등) 등이 반영된 ‘Extended GDP’와 같은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것을 촉구하였다.¹⁴⁾

‘Extended GDP’ 개념은 의미상 ‘확장 GDP’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World Bank

14) GDP+ 지표 개발 이외에, GDP가 요약통계(summary statistic)로서 유용성이 높으므로 기초자료의 수집 및 추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한 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흐름(flow)뿐만 아니라 부의 축적(stock)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별적인 부 및 정부의 시설자산과 무형자본(기술, 브랜드, 디자인, 온라인 네트워크 등)까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 추진하고 있는 각국의 국부(wealth of nations)를 측정하는 작업이 있다. World Bank는 모든 생산자본(공장, 도로 등), 천연자원(숲, 물 등),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적자본, 그리고 순외국자산을 한 나라의 포괄적인 부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GDP와 부(wealth)가 일국의 경제적 웰빙에 대한 보다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호 보완적인 지표로 보고 있다(World Bank, 2018).¹⁵⁾ 그리고 UN의 국민계정체계 기반 환경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위성계정 형태로 작성하는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도 확장 GDP 방식의 하나이다.

1990년대의 시점 간 지속가능성(intertemporal sustainability)에 대한 논의는 ‘자본접근법’(capital approach)과 같은 측정 방법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 접근법은 학계와 일부 국제기구에서 선호¹⁶⁾하는데 현재의 복지와 미래의 복지를 구분한다. 미래 복지와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에 남겨진 자산의 양(경제·자연·사회·인적 자본)에 달려 있다. 양(+)의 참저축(Genuine Savings) 또는 조정 국민순저축¹⁷⁾에서의 자본의 증가는 지속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Pearce and Atkinson, 1993; Lange et al, 2017). 모든 자본 스톡에 대한 이러한 화폐적 평가는 World Bank의 ‘포괄적 부’와 UN의 ‘포용적 부지수’(Inclusive Wealth Index) 작성에 사용되어 왔다(Lange et al, 2017; UNEP, 2018). 또한 이 방법은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의 일부인 고갈조정 순부가가치(Depletion-adjusted Net Value Added) 지표의 기초가 되었다.

OECD는 2011년에 국민계정체계내 불균형 측정을 위한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Disparitie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 EG DNA)을 구성하여 국민계정통계의 총량 정보와 미시 통계의 소득분위 정보를 이용하여 국민계정과 정합성을 지닌 가계의 그룹별(5분위) 소득, 소비, 부 등의 분배통계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2020년 3차 시험편제 결과를 발표하였다(이광원, 2021).¹⁸⁾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시장 체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부문에서 기초통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G-20는 DGI (Data Gaps Initiative)

15) World Bank는 2006년 ‘국부는 어디에 있는가?(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에 이어 2011년 및 2018년 ‘국부의 변화(The Changing Wealth of Nation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6)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잘 부합한다. 둘째, 국민계정체계와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와 같은 기존 계정체계와도 연관성이 높다. 셋째, 1990/2000년대 들어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과 같은 장기적인 환경문제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어 세대 간 상충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Hoekstra, 2020a).

17) 조정 국민순저축(ANS: Adjusted Net Savings)은 국민총저축(Gross National Saving)에서 고정자본소모(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자본의 대체가치)를 차감한 국내순저축(Net National Savings)로부터 환경오염이나 파괴 요인들을 제하고 교육지출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조정 국민순저축은 국내순저축 값에서 교육지출을 더하고 에너지 고갈, 광물 고갈, 산림 고갈, 이산화탄소 및 미립자 배출량을 뺀 값이다(World Bank, 2018).

18) OECD는 2013년 및 2015년에도 가계 소득분위별 통계의 시험편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를 통해 각국의 데이터 격차를 파악하고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부 충격에 대한 각국 경제의 취약성 측정 방안의 하나로 가계의 소득, 소비 및 부와 관련한 분배지표 개발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¹⁹⁾

GDP는 사고 파는 재화와 서비스의 화폐적 가치로 측정된다. 소비자의 복지, 행복 또는 효용과 같은 주관적 개념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는다(Nicolaides, 2018). 하지만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제품이나 무료 디지털 서비스 소비는 소비자에게 보다 큰 웰빙 수준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계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Extended GDP 접근법은 다양한 위성계정의 작성을 통해 기존 국민계정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2장에서 다루질 것이다.

나. GDP를 넘어서 (Beyond-GDP)

Beyond-GDP 방식은 삶의 질을 좀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대안’ 지표를 개발하는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GDP의 ‘대안’ 찾기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GDP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된 1970년대 초에 이미 시작되었다(Hoekstra, 2020a,b).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측정 도구들이 제시되고 만들어졌다. II장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이러한 대안으로 녹색계정 개념에서 비롯된 경제후생지표(MEW)와 UN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처럼 단일 숫자로 나타낸 지수가 있다. 또한 OECD의 How's Life?에 기반한 다차원적인 ‘더 나은 삶지수’ (Better Life Index, BLI)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처럼 영역별 지표를 나열하는 대시보드(Dashboard) 형식의 지표도 있다.

<표 1>은 “Beyond-GDP” 측정에 대한 네 가지 방법론적 접근법을 분류한 것이다. 그간 진행되어 왔던 Beyond-GDP 접근법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성은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오히려 ‘Beyond-GDP’가 지향하는 목표(GDP의 대체) 달성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다(Hoekstra, 2020a).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수 대 지표 대시보드’, ‘개념 기반 또는 비개념 기반’

19)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책 입안자와 시장 참여자는 다양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DGI는 2009년 G-20 회의(2009년 4월, 런던)에서 시작된 국제통계개발·개선 사업으로 20여 개의 권고안(과제)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IMF/FSB 주도 하에 국제기구그룹(Inter-Agency Group on Economic and Financial Statistics, IAG), G-20 회원국 및 일부 비회원국(FSB회원국)이 참여 중이다(BIS, ECB, Eurostat, IMF, OECD, UN, World Bank를 ‘국제기구그룹(IAG)’이라 칭한다).

등 두 가지 차원이 있다. World Bank는 자본(capital) 기반의 화폐적 집계를 선호하고 OECD는 개념적 대시보드를 선호하면서 일부 접근법은 국제기구(표에서 대괄호 참조)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UN은 네 가지 방법론에 대해 모두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영향력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HDI²⁰)와 SDGs)는 개념적이지는 않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많은 국제기구 및 국가기관, NGO 및 기업의 지지를 받고 있다.

〈표 1〉

Beyond-GDP 측정 방법론 비교 : 네 가지 범주

	지수 (Index)	지표 대시보드 (Indicator Dashboard)
개념적 기초	경제적 개념 (녹색계정) · 경제후생지표측정(MEW) · 지속가능경제후생지수(ISEW) · 참진보지수(GPI) · 참여축/조정순저축/포괄적자산 [World Bank] · 포괄적부지수 [UN] · 고갈조정 순부가가치 ²¹⁾	경제적 개념 ·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 · 지속가능 개발측정에 대한 유럽 통계 전문가회의(CES) 권고사항 [UN/OECD/EC] ·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OECD] · 삶의 표준 프레임워크 [뉴질랜드] · 웰빙 모니터 [네덜란드]
	웰빙 개념 · 주관적 웰빙 U-지수	웰빙 개념 · 삶의 질 대시보드 [Eurostat] · 국가웰빙측정 대시보드[영국]
	생명물리학적 개념 · 생태발자국	생명물리학적 개념/사회적 플로어 · 행성 경계 [스톡홀름 회복력협회] · 도넛 경제학 [케이트 레이워스]
비 개념적 기초 (이해관계자/수학적 기반)	수학적 지수 · 인간개발지수 [UN] · 지속가능사회지수 · 해피플래닛 지수 · 사회진보지수 · SDG 지수	이해관계자/정치적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UN, 여타 국제기구]

자료 : Hoekstra(2019) 등 참고

다. 통합 접근법(Integrated Approach)

최근 OECD는 경제·사회·환경의 각 영역에서의 성과나 발전을 측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 영역을 통합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시작된 코

20) 인간개발지수는 아마르티아 센의 업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개념적이다. 그러나 가중치인 교육, 건강, 소득은 어떤 이론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Hoekstra, 2019).

21) 이것은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의 녹색계정 지표로 UN, EC, FAO, IMF, OECD 및 World Bank의 협력 결과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이러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GDP 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OECD가 개발·활용하고 있는 웰빙측정체계(How's Life 2020 지표)는 이러한 통합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OECD, 2020). OECD는 그동안 다차원적인 웰빙을 보다 더 잘 포착하기 위한 Beyond-GDP 지표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진단하고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 형태인 대시보드를 고안하고 발전시켰다. OECD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에 기초하여 필요시 우선순위 지표를 선택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OECD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통합접근법에 대한 논의는 2020년도 OECD 각료이사회에서 공식화 되었다. OECD 회원국들은 ‘강하고 탄력적이며,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의 길(The Path to Recovery: Strong, Resilient, Green and Inclusive)’이라는 주제로 열린 연례회의에서 웰빙, 포용,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환경·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GDP(성장), 고용과 같은 전통적 경제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접근법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지표체계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는 성장, 사회, 환경 등 세 가지 측면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개별지표의 해석만으로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가세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충격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정상수준으로의 복원을 위해서는 통합된 접근법의 적용이 긴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앞으로 국민계정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지표 개발 속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OECD가 강조하는 통합 접근법에서는 성장(생산), 웰빙,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 영역의 측정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성장 측정지표로서 GDP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기반한 생산과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크기 때문에 GDP는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디지털 변혁, 가치사슬의 글로벌화, 비시장활동인 무급 가사노동 등 웰빙과 관련이 있는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통합 접근법에서는 국제 통계커뮤니티의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생산계정의 정점에 있는 국민계정통계를 더욱 개선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웰빙(삶의 질) 영역의 경우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Beyond GDP’ 차원의 일환으로 이미 개발·산출되고 있는 ‘지표 대시보드’ 체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웰빙의 측정에도 생산지표인 국민계정통계는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하나의 지표(1인당 소득 증가율)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웰빙 지표는 생산보다는 사람(예: GDP 보다는 가계소득을 중시)을, 투입이나 산출보다는 결과를, 평균보다는 개인 및 가계 전반에

결친 결과의 분포를 더 중시하며, 웰빙의 주관적인 측면(개인 평가 및 경험)까지도 고려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의 웰빙을 위해 경제·사회·환경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인류의 역량(humanity's capacity)을 자산(assets)으로 인식하여 측정한다. 여기서 자산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은 물론 담수·토지 자원과 함께 생물다양성, 생태계, 야생동물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모든 자산의 식별 및 가치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OECD는 실용적인 방안으로 (i) SNA 내에서 토지·광물·에너지 자원, 수자원 등의 천연자원을 포함하여 국별 국민대차대조표의 통계 격차 해소, (ii)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에 기반한 실험 생태계계정을 통한 생태계 자산계정 작성, (iii) 인적·사회 자본 등 다른 유형의 자본 측정기법 개발, (iv) 다양한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에 기초하여 경제체계 내의 위험과 취약성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2. 위성계정에 대한 최근 논의 및 현황

가. 위성계정의 재정립

국민계정 자문전문가그룹과 캐나다 통계청은 2008 SNA에 기술된 위성계정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중심계정(core accounts)은 ‘표준계정’(Standard National Accounts)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민계정 자문전문가그룹 회의에서는 2008 SNA의 큰 틀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국민계정체계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i) 표준계정, (ii) 주제 계정, (iii) 확장된 국민계정(extended national accounts) 등 세 가지 유형의 계정을 정의하였다(AEG,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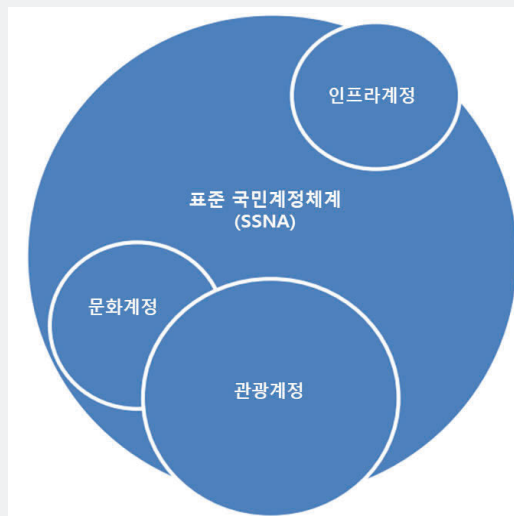
주제 계정(Thematic Accounts)은 표준계정의 범위 안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또한 어떤 주제 계정이 다른 주제 계정과 겹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관광 활동도 문화 활동이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된 주제 계정은 문화와 관련된 주제 계정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표준계정과 주제 위성계정 간의 개념적 관계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확장 국민계정은 표준계정과 웰빙 및 지속가능성 계정의 선택 집합을 모두를 포함한다. 확장 계정들도 주제 계정과 마찬가지로 서로 겹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태계 계정은 생태계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오염의 부정적 영향을 수량화하는 웰빙과 관련된 계정들과 일정 부분 겹칠 수 있다. 확장된 국민계정의 개념도는 <그림 5>와 같다. 특히 최근에는 II장에서 살펴본 이분법적 위성계정 분류와는 달리 확장된 국민계정 개념

으로 광범위한 위성계정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계정 자문전문가그룹과 유럽 경제위원회는 각 국가들이 일련의 계정들을 “공식” 확장체계로 지정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과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계정들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과제라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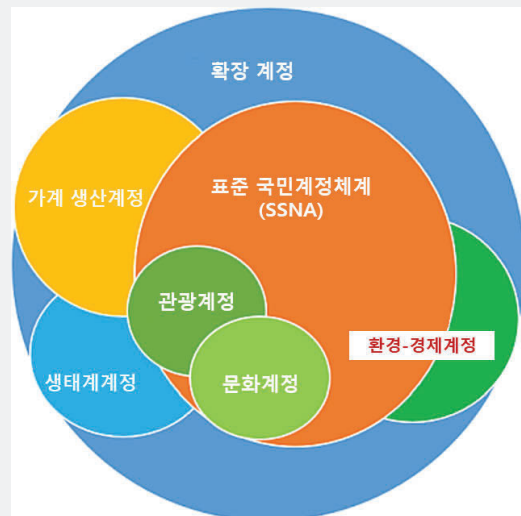
<그림 4>

표준 SNA 및 주제 위성계정



<그림 5>

표준 SNA 및 확장 국민계정



주 : 위 그림들은 최근 논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II장에 소개된 <그림 1>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 UNECE (2019); <https://statswiki.unece.org>

위의 유형 또는 분류 체계에 따른 국별 위성계정 작성사례 서베이 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위성계정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계정의 종류가 식별되어 있다.²²⁾ 총 241개 위성계정 중 대다수가 주제별 계정인 것으로 나타났다.²³⁾

22) 동 서베이를 진행한 캐나다 통계청은 조사된 주제의 범위가 완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주제가 위성계정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분석 목적상 조사대상 목록에 있는 계정들을 모두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23) 식별된 위성계정들은 때로는 주제 계정과 확장 계정이 겹치기도 하지만 이 경우 특정 부문에 초점을 맞춘 계정이라도 ‘확장’ 국민계정으로 분류했다.

〈표 2〉

위성계정에 대한 서베이 결과

구 분	계정 이름	비 고
확장 국민계정 (Extens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 (SEEA, 생태계 계정 포함) • 비영리기관 및 자원봉사 (Non-profit institutions and volunteering) • 인적자본 (Human capital) • 보건계정 (Health accounts) • 무급 가사활동 (Unpaid household activities) • 교육계정 (Education accounts) • 사회보호 (Social protection) • 사회계정행렬 (Social accounting matrices) 	조사기관에서 사전에 조사표에 목록을 적었으며, 조사대상 응답자는 자신들이 생성한 계정 명칭을 선택
주제 계정 (Thema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국민계정 (Distributional national accounts) • 관광계정 (Tourism accounts) • 천연자원계정 (Natural resource accounts) • 문화계정 (Culture accounts)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계정 (Sport and recreation accounts) • 불법/비공식 부문 (Illegal/informal sector) • 농업 (Agriculture) • 디지털경제 (Digital economy) • 교통계정 (Transport accounts) • 해양경제계정 (Ocean coastal economic accounts) • 기술 (Technology) • 교육 및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 무형자본 (Intangible capital) 	상동
주제 계정 (Thema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경제 (Care economy) • 침엽수목재 (Softwood lumber) • 대마초 (Cannabis) • 연금 (Pensions) • 물 (Water) • 바다 (Sea) • 어업 (Fisheries) • 통신 (Telecommunication) • 여행 및 관광 (Travel and tourism) • 예술 및 문화 (Arts and culture) • 야외 레크리에이션 (Outdoor recreation) 	조사에 응한 비영리단체(NPOs)가 식별하여 조사표에 직접 기입 (추가로 파악된 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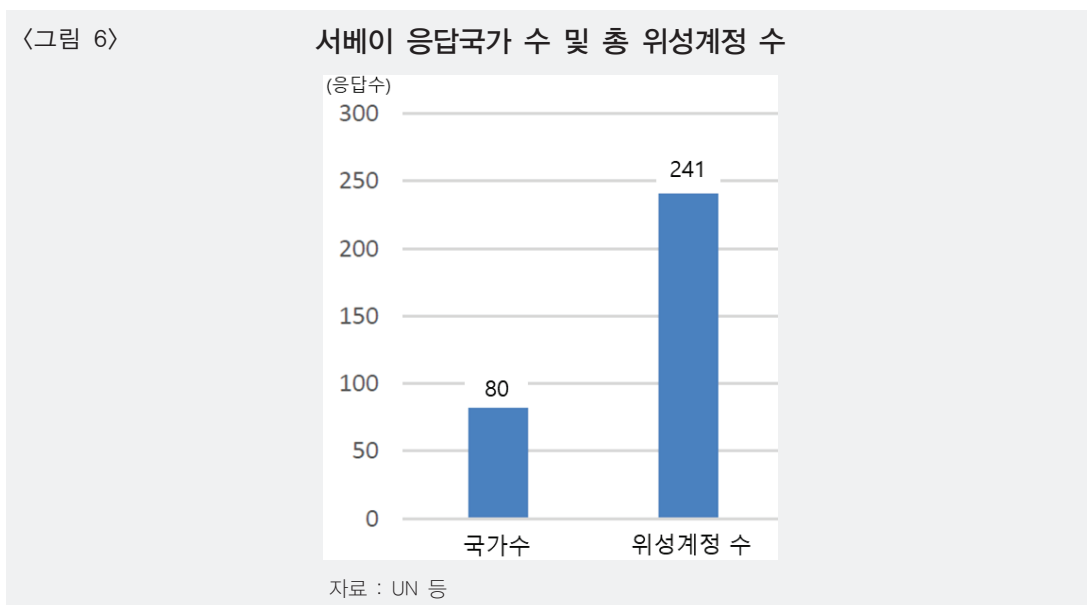
자료 : UNECE, 2019

나. 위성계정 개발 동기

최근 수년 동안 위성계정 개발 수요가 증가한 원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계 이용자가 국민계정체계의 중심계정 개념이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리고 국민계정체계가 새로운 경제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UN, 유럽경제위원회, IMF, OECD, Eurostat 등 국제기구 그룹과 각국 통계당국은 위성계정 편제 사례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했다. 서베이의 실무적 수행 및 분석은 캐나다 통계청이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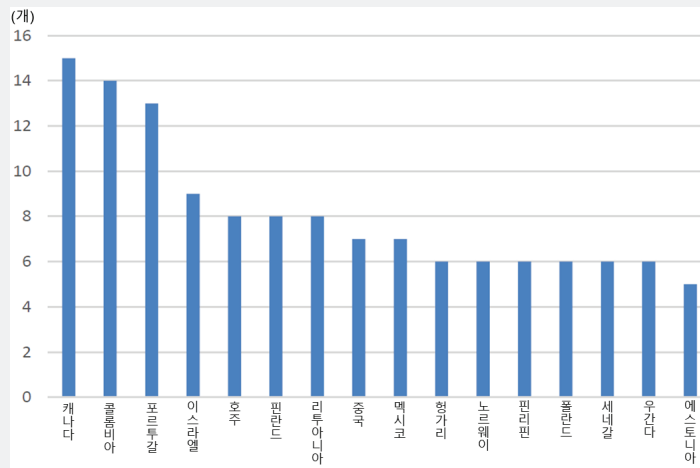
<그림 6>에 그려져 있듯이, 서베이에는 약 80개국이 참여했는데 응답한 국가들의 위성계정수는 총 241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 중인 계정수는 국가별로 1개에서 15개(캐나다)까지 다양했다. 80개국에서 작성되는 위성계정 수는 평균적으로 4개 정도로 파악되었다. 특정 위성계정은 주로 유럽국가들이 많이 작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공통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통합 유럽의 특성으로 설명된다. 유럽 공통 입법에 따른 계정의 예로는 농업 위성계정 또는 환경 위성계정이다. 유럽의 일부 다른 위성계정들은 관광 또는 사회보호 위성계정과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위성계정 편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들은 주로 유럽에 소재해 있는데, 비유럽 국가인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멕시코, 이스라엘 등도 위성계정 작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위성계성 작성 국가 현황 (많은 순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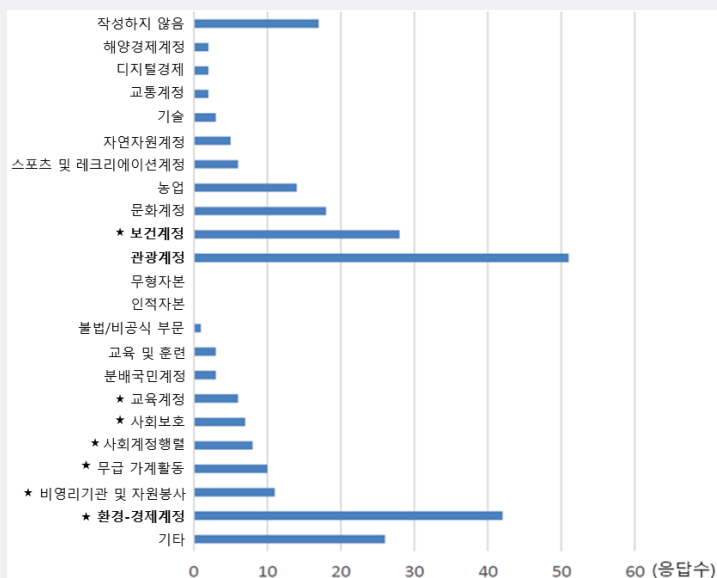


자료 : UN 등

<그림 8>에서 보듯이, 국가 통계기관에서 가장 많이 작성하는 계정은 관광 위성계정이었으며 다음으로 환경경제통합계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 국민계정으로 분류되는 인적 자본 계정과 무급 가사노동 계정과 같이 각각 자산과 생산의 경계 확대를 수반하는 위성 계정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

부문별 위성계성 수 비교



주 : ★ 표시는 확장 (국민)계정임을 나타냄

자료 : UN 등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계 이용자들은 중심계정에서 정확하게 포착하기 힘든 특정 활동이나 부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위성계정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용자가 관광이나 문화 관련 정보를 원할 때 중심계정을 통해서도 일부의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청을 충족시키려면 분석 유형에 맞게 표준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위성계정을 작성할 수밖에 없다.

위성계정 개발의 핵심 동기는 GDP에 대한 특정 부문(sector)의 기여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는 주제 계정과 확장 국민계정 모두에 해당된다. 어떤 산업 혹은 부문이 발전할 경우 많은 통계 이용자들은 중심계정에서 개념적으로 다루지 않는 활동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인적자본의 스톡이 물리적 자본의 스톡보다 더 많은지 또는 고용주의 사내교육 활동을 포함할 때 교육 수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3. 최근 삶의 질 반영 관련 주요 논의 내용²⁴⁾

가. 개요

거시경제의 측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인 국민계정체계는 ‘경제(the economy)’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경계(boundary)’를 제시한다. 이러한 경계는 측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발전’에 대한 담론 형성에도 기여한다. 국민계정체계의 발전을 위한 최근 우선순위는 ‘생산에서 ‘부의 축적’에 이르기까지 제도부문 전체 계정의 정합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가계의 가처분소득, 최종소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계의 물질적 웰빙 관련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

웰빙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경제활동의 부정적 외부성(externalities)을 설명하기 위해 측정 방법을 수정하거나 확장하는 등의 대안에 관한 논의는 본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다. 측정 방법을 보강하고 가계부문에 대한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웰빙 및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계정 자문전문가그룹은 웰빙과 지속가능성의 측정과 관련하여 그간 논의되어 온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AEG, 2020a).

24) 본절의 내용은 AEG(2020a)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요구를 해결하면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 스티글리츠 위원회(경제성과 및 사회발전 측정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Beyond GDP로 이행하여 총생산, 웰빙, 장기 지속가능성 간의 격차의 해소를 권고
- 국제기구(OECD 등)와 국가 차원의 다양한 웰빙 측면을 다루는 지표를 포함한 평가방법의 개발 및 보급
-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포용적 성장정책 제시
- 현재의 국민소득통계 보완 지표로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포괄적 또는 포용적 부의 측정

‘Extended GDP’와 ‘Beyond-GDP’, 그리고 양자의 통합론적 접근법의 등장은 웰빙과 이의 지속가능성이 GDP와 같은 하나의 요약 지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차원적인 복잡한 개념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계정 관련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검토 및 분석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측정체계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 지표들의 장단점과 지향하는 목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계정과 사회 및 환경 통계 간의 연계성을 보다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측정체계가 구상되어 왔다. 2025년 예정된 2008 SNA 개정의 단기과제는 통합 체계로서 국민계정체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범위를 정의하고 이미 이용가능한 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웰빙과 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측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 외에도 최근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진전은 새로운 경제 현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경제적 진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오늘날 생산 측면 집계방식으로는 가계의 웰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가구부문 내에서 소득, 소비 및 부의 양극화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국민계정과 정합성을 가진 분배 통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계정체계의 연구 의제를 논의하는 국민계정실무그룹을 중심으로 2020년 3월 웰빙과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국민계정체계 개정을 위한 전략이 수립되었다.²⁵⁾ 그 전략의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2020~2023년 중 기존 국민계정체계와의 연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명을 위한 지침서(guidance note)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지침서 초안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웰빙과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침서는 아래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현재 진행 중인 2008 SNA 개정 작업 프로그램의 일정과 주요 내용은 이광원(2021)을 참조하였다.

1. 가계의 소득·소비·부의 분배
2. 무급 가사서비스 노동
3. 교육훈련, 인적자본 및 노동
4. 건강 및 사회적 여건
5.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

이 지침서에서 1~4번의 경우 확장 모듈은 화폐적 측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 확립된 현재의 위성계정체계에서 이용가능한 지침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 영역인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의 경우 13개의 특정 이슈가 식별되었고 각 사례에 대한 개별 지침서가 작성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 중 다수는 국민계정체계와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 표준지침 간 조정에 대한 것이며 다른 이슈에서는 두 지침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개선 사항과 관련이 있다.

웰빙 및 지속가능성 측정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체계에 대한 지침은 확장된 국민계정체계의 핵심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앞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적절한 용어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지침은 위성계정에 대한 기존 장의 재작업과 웰빙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장(Chapter)의 추가를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확장된 체계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문(introductory chapter)이 포함되며, 이어서 5개의 영역 각각에서 확장 모듈을 설명하는 장들이 이어진다.

제안된 새로운 모듈은 가능한 한 통합적인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구성요소 간의 연계와 일치된 분류 및 개념을 강조하고 권고 확장이 기존의 국민계정체계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나. 선택적 고려사항

최근 국민계정 자문전문가그룹은 국민계정체계 내 웰빙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실용적인 방법 적용, 확장을 위한 지침 원칙 마련, 커뮤니케이션 확대 및 용어 선택 등 세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AEG, 2020a).

1) 실용적인 방법 적용

장기적인 목표로서 혹스트라가 제안한 것과 같은 ‘가장 중요한 계정체계’ 또는 ‘시스템의 시스템(system of systems)’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화폐 및 물리적 측정 관점에서 경

제,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통계가 통합되고 ‘마이크로-매크로’ 데이터의 연계가 가능하겠지만, 국민계정 자문전문가그룹은 그러한 비전이 2025 SNA 개정에서는 완료될 수 없다고 보았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서 환경, 보건, 교육 및 무급 가사활동과 같은 확장 모듈의 정기적인 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반드시 분기별 또는 연간 기준으로 통계를 편제할 필요는 없으며 구조적으로 보다 중점을 두는 통계는 각국의 필요성(수요)과 기초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3년마다 편제할 수 있다.

2) 확장을 위한 지침 원칙 마련

실용적 방법 적용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의 합리적 범위를 고려하여, 현행 국민계정체계의 확장을 통해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개의 지침 원칙을 수립하였다.

1. 확장은 모든 영역과 지표가 아닌 경제적(물질적)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국한
2. 핵심체계에 필요한 변경은 현재의 주요 적용 방식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함
3. 국민계정체계가 가지는 일관된 통합 체계로서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연결을 식별하고 고유한 요소와 핵심체계 간의 통합 분석을 가능하도록 해야 함
4. 단일 지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식별된 각 영역에서 세부 사항이 생기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
5. 고급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 비화폐적 측정치가 통합될 것
6. 추가된 각 영역의 산출물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므로 확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에 대한 분석적 연계가 허용
7. 각 영역의 확장은 생산뿐만 아니라 소득, 소비 및 부의 축적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필요한 경우 확장된 개념 하에 전체 계정의 순서를 조정
8. 향후 가능한 한 보다 정교하고 최적의 체계 개발을 고려
9. 확장은 분석의 확대를 위해 OECD How's Life? 등 웰빙지표 체계와 대응되도록 해야 함
10. 확장된 체계는 이미 이용가능하고, 광범위한 협의, 테스트 및 실행에 따라 이미 개발된 위성계정체계의 지침을 최대한 활용

3) 커뮤니케이션 확대 및 용어 선택

보다 넓은 체계를 개발할 때 명확한 의사소통이 특히 중요하며 확장적이고 내부적으로 일관된 새로운 거시경제통계의 일부로서 추가 요소의 정당화를 위해 새로운 용어를 선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성 측면에서 계층 구조를 의미하는 ‘핵심’ 또는 ‘중심’ 체계와 비교하여 ‘위성계정’을 지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자문전문가그룹은 이러한 용어들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추가된 각 도메인에서 확장된 계정을 가진 모듈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 국민계정체계 핵심영역에 대한 지침서의 주요 내용

앞 소절에 제시되었던 5개 핵심 영역의 각 이슈는 각 영역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팀에서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는 위성계정 작성 및 개발 등과 관련한 지침서에 반영되었다. 본 소절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각 이슈별 지침서에 담긴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1) 가계의 소득·소비·부의 분배 : 가계분배 계정

국민계정의 총계 개념에 부합한 가계분배(household distributions) 계정의 편제를 위한 지침에서는 OECD/Eurostat, ECB 등에 의해 이미 생산된 작업 결과를 토대로 (i) 가계분배 정보의 중요성, (ii) 작업의 범위(국민계정체계 관련 부분과 연계), (iii) 국민계정체계 항목과의 차이를 포함하여 가계분배와 관련된 구체적인 균형항목, (iv) 가계부문의 세분화된 하위그룹 구분, (v) 분배 결과의 편제 관련 구체적 개념·방법론적 이슈에 대한 상세 검토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가계분배 정보의 중요성)

지침에서는 가계분배 정보의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물질적 웰빙(즉, 소득, 소비 및 부)의 다차원적 측면을 일관되게 제시한다. 또한 계정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적 집계와 일치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다. 이 가계분배 계정은 거시경제 분석과 경제적 웰빙 파악에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가계그룹이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작업의 범위)

가계분배 계정의 작성 범위와 관련하여 시작점은 국민계정체계에 정의된 가계부문인데 가계를 관측단위로 하여 균등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가계 규모와 구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균등화 척도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도출한다. 또한 제도부문 가계는 민간 가계와

구분되며 그러한 구분 결과는 별도로 제시된다. 왜냐하면 제도 가계는 민간 가계와 다르게 행동하고 (균등화) 결과를 민간 가계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소비·부 관련 대체 개념)

국민계정체계에서 정의된 균형항목(balancing items; 부가가치, 처분가능소득, 저축 등)이 출발점을 이루지만 분배 분석에 보다 더 적합한 대체 개념들도 사용된다. 소득, 소비, 부의 대체 개념의 예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income)의 경우 손해보험금과 복권 당첨금을 자본이전으로 취급하는 대체 소득 개념이 제안되었다.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경상이전(current transfer)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개별 수혜자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소비 측면에서는 손해보험료와 복권구매를 소비로 취급하는 대체 소비 개념이 제안되었는데 가계의 관점에 더 잘 부합한다. 또한 내구소비재 구매에 대한 정보는 최종소비지출의 별도 하위 범주로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저축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Wealth)의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포함한 광범위한 부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일부 내구재(요트, 비행기, 자동차 등)는 특정 가계그룹에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석항목(memorandum item)으로 내구 소비재 재고를 두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가계부문 분류)

가계 그룹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통계 편제자는 최소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생활수준별 세분화를 목표로 하여 소득 5분위 그룹, 중위그룹, 그리고 가능하면 상위 10%와 5%, 또한 이상적으로는 상위 1%에 대한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가계를 주된 소득원, 가계 유형, 주거 상태 및 기준인의 연령별로 나누는 대체 분류 방안도 권고되었다.

(구체적 편제 이슈)

지침은 단계별 접근방식을 통해 분배 결과를 편제하는 방안을 제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편제 이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계 간 흐름 및 재고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 직접적인 미시정보가 부족할 경우에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할당(예: 사회적 현물 이전, FISIM, 비관측 및 불법 활동, 투자소득 지출 등)
- 통계 일치기법을 사용하여 다른 데이터 소스를 연결
- 관련 균등화 척도 결정
- 시간 경과에 따른 가계그룹 간의 역학을 추적하여 부의 변화를 기초적 흐름으로 세분

제안된 분배계정 지침에서는 미시 분배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 위하여 결과와 함께 제공되는 메타데이터의 필요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무급 가사노동 : 가계생산 위성계정

무급 가사노동(Unpaid Household Service Work) 측정과 관련하여 수년 동안 그 가치가 경제성장 추정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최근 디지털화 진전으로 인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경제 측정에 있어 무급 가계 활동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다.²⁶⁾

무급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을 보다 더 잘 측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경제성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은 금전적 보상 없이 가구 내 및 가구 간에 수행되는 비시장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현행 국민계정체계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안서는 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를 위한 유럽경제위원회 지침(UNCE, 2017)과 같은 기존의 지침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다양한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무급 가사노동 평가 지침은 제3자 기준²⁷⁾(the third party criterion)을 재검토하고 무급 가사노동을 평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무급 가사서비스가 비공식 의료 및 교육과 같은 국민계정체계의 다른 분야와 어떻게 중복되는지 고려한다. 그리고 무급 가사노동 측정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고 평가 방법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안하고 있다.

(정의 및 개념)

편제 지침에 따르면 무급 가사노동이 제3기준, 즉 시장서비스 공급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제공 가능하다면, 이러한 무급 가사노동은 생산 활동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적 활동의 유형을 식별하고 가치를 할당하기 위해 <표 3>과 같은 무급

26) 예를 들어 무급 서비스를 고려하기 위해 생산 경계를 확장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가구 전체의 경험을 잘 반영하기 위해 여가 시간에 대해서도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무급 가계 서비스를 포함한 확장 GDP를 포착하기 위해 기존 GDP에 부가가치를 더해야 하며, 중심계정 내의 기존 공급사용료의 일부로 기록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EG(2020b) 참조.

27) 어떤 활동이 자신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장에서 고용된) 다른 사람(제3자)이 대신 수행될 수 있는지로 구분하여 그 활동을 각각 비경제 활동과 경제 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경계를 나누는 근거가 되는 기준을 ‘제3자 기준’이라고 한다 (Hawrylyshyn, 1977).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무급 가사 서비스는 가정 또는 시장 외부에서 생산되는 활동이지만 시장에서 고용된 제3자가 가계 구성원에게 효용의 변경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경제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여가활동은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없는 비경제 활동이다.

가계서비스의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가 무급 가계서비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3〉 무급 가계서비스의 범주

• 아이 돌봄	• 성인 돌봄
• 영양	• 운송
• 가계관리 서비스	• 세탁 및 의류 서비스
• 비공식 봉사활동	• 쇼핑
• 정보 서비스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무급 가계생산

(측정 및 평가 방법)

무급 가계서비스 노동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입접근법과 산출접근법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AEG, 2020b).

우선 투입접근법(Input Approach)은 노동, 자본 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투입물의 ‘총비용’을 추정하여 무급 가계서비스를 화폐화한다. 무급 노동의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용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심계정과 일치하도록 분기 단위로 생산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근로시간의 평가는 대체 비용접근법(replacement cost approach)을 따르는데 동등한 시장 서비스를 생산한 피용자에게 적용되는 총임금율이 적용된다. 전문가 임금률을 사용하여 무급 가계서비스를 평가할 때, 특정 범주의 일부 가계생산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상인의 급여가 사용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상인에게 지급되는 시장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견습생이나 일반 노동자의 임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세금과 보조금에 대한 귀속 조정과 총영업잉여는 핵심 국민계정에서 시장생산에 대한 평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용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고 투입접근법을 쓸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산출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간이용조사(time use survey, TUS)는 제3자 기준을 충족하는 활동을 최대한 많이 수집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한편 산출접근법(Output Approach)에서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관련 가사노동 각각의 수량에 시장에서 교환되는 유사한 서비스의 가격을 곱하는 것이다. 서비스 소비는 행정자료 또는 설문조사 등의 데이터(무보수 운전자 주행거리, 무상음식 소비량 등)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특정 유형의 무급 가계서비스의 평가를 위해서는 무상 가계서비스에 대한 시장 등가 가격이 적절한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무급 가사노동에 의해

생성된 부가가치의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가계지출조사를 이용해 시장에서 구입하여 무급 가사노동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중간소비를 추정해야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무급 가사노동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에 대한 최고 품질의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전술한 투입접근법의 결과치를 산출접근법에 의한 평가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권장된다.

(확장 GDP 측정치)

무급 가계서비스 생산을 감안한 확장 GDP 측정치는 기존 GDP 측정치와 함께 산출되어야 한다. 생산의 경계 확대에 의해 양 측정치의 성장률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확장 GDP는 경제적 후생에 부합하는 경제성장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기존 공급사용표 내의 산업 분류가 무급 가계서비스 생산과 확장 GDP 추정에 최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화폐적 평가와 관련된 왜곡을 줄이기 위해 공급사용표 작성 시 부가적인 작업이 생길 수 있다. 무료 가계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확장 계정의 미래 사용자들은 물량(volume) 측면에서의 결과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 영역은 더 상세한 지침을 개발해야 하는 분야이다.

3) 교육훈련, 인적자본, 노동 : 교육훈련계정, 인적자본계정, 노동계정

오늘날과 같은 경제 및 정책 환경에서 노동과 인적자본의 측정은 매우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현행 국민계정체계는 자본 서비스, 중간재 및 서비스와 같은 생산과정과 관련한 투입물과는 달리 노동력과 인적자본에 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노동력이나 인적자본과 관련하여 경제전문가나 정책입안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계정체계에서 이러한 이슈를 다루고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노동, 교육훈련 및 인적자본 관련 세분화된 추정치 산출에 대한 지침의 기반은 세 가지이다. 첫째, 다년간의 노동계정 작성에 있어 다양한 국가들의 경험, 둘째, 최근 UNECE(2020)의 교육훈련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for Education and Training, SAEI)에 기초한 위성계정 개발 관련 경험, 셋째, 인적자본 측정에 관한 UNECE(2016) 지침 등이다.

<그림 9>는 교육훈련, 인적자본 및 노동의 각 차원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SNA 내에서 반영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각 차원은 교육훈련계정, 인적자본계정, 노동계정과 연결된다.²⁸⁾

28) 현재까지 모아진 의견은 노동계정, 교육훈련계정 및 인적자본계정은 위성계정 작성 방식이 아니라 개정 SNA의 중심 프레임워크 내 하위 계정 형태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림 9〉

교육훈련, 인적자본, 노동과 SNA 생산계정의 관계



(교육훈련, 인적자본, 노동 정보의 중요성)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자산, 즉 인적자본으로 보고 그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은 특히 웰빙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맥락에서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08 SNA에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었던 교육훈련·인적자본·노동 측정과 관련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 동 부문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면 국민계정의 유용성과 적합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AEG, 2021). 노동시장, 생산 및 소득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제고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이슈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포괄적 성장, 형평성 및 소득분배 문제, 둘째, 디지털화·세계화로 인한 생산설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의 성격(본질) 변화, 셋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한 능력 및 생산성 측정 이슈가 중요하다.

정책입안자들은 인적자본 이해 및 계량화, 국가발전경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평가, 교육부문의 생산성 측정 방법 등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는 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적자본이 총자본스톡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인적자본 스톡을 화폐적 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훈련·인적자본·노동 관련 국민계정체계 개선 방안)

교육훈련·인적자본·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8 SNA 개정에서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우선 기존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동계정(Labor Accounts)을 2008 SNA 개정안의 중심체계 내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노동력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다른 투입물(생산자본, 중간재 등)과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인적자본

에 대한 평가를 위한 계정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계정은 2008 SNA의 9장 “소득사용 계정”과 10장 “자본계정” 사이에 새롭게 추가되는 장에서 설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AEG, 2021). 노동계정은 국민계정체계의 생산 경계에 기초하며, 최소한 일자리·인력·물량(시간) 및 임금지급 등 노동영역을 포괄할 것이다. 또한 성별, 연령 및 교육 성취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분류도 포함해야 한다.

또 다른 제안은 기존 국민계정체계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즉 확장된 형태의 교육훈련 위성계정(Extended Accounts for Education and Training)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계정은 이미 개발된 ‘교육훈련 위성계정체계’(System of Accounts for Education and Training)에 기초한다(UNECE, 2020). 교육훈련계정은 국민계정체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폐 및 비화폐성 데이터와 자가계정(사내) 훈련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교육훈련 위성계정은 현재가격과 물량(volume)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확장된 인적자본계정(Extended Human Capital Accounts) 작성을 위한 단계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인적자본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 측정 역량은 많은 나라에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2008 SNA 개정의 의의 중 하나는 경제발전과 진보에 있어 인적자본이라는 주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지침에서는 인적자본계정도 노동계정처럼 인구통계학적 차원(성별, 연령 등)과 함께 현재가격 및 물량 측면에서 스톡 추정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4) 건강 및 사회 여건

건강 및 사회 여건(Health and Social Conditions) 분야에 관한 지침의 목표는 이미 존재하는 분류와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의 국민계정통계 추정치에 직접 포함하거나 국민계정체계의 확장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의료(health care) 지표 작성에 대한 옵션을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침에서는 의료와 관련한 공식적인 측정의 확장을 위해, 의료 상품과 서비스의 통계 처리와 의료 수혜자에 대한 분석 방법 등을 다룬다(AEG, 2020c).

건강관련 지출을 의료의 기능, 제공자 및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OECD 등에 의해 개발된 표준으로 ‘2011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 2011 SHA)’가 있다. 2011 보건계정체계는 2008 SNA 개정에서 보건 분야에 대한 지침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OECD, 2011).

제안된 지침에서는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개념 및 분류를 변경하는 방안과 추가 확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방안에는 (i) 국민계정체계와 보건계정체계의 분류 갱신 및 조화, (ii) 의미있는 의료 측정치 식별과 정책에 적절하게 세분화된 의료 관련

공급사용표 개발, (iii) 의료 물량의 품질조정 척도, (iv) 의료서비스 외에 유료 장기사회보장 서비스 포함 등의 옵션이 포함된다. 국민계정체계를 확장하는 후자 방안은 (i) 민간건강보험금 청구 및 보험료의 분류 구분, (ii) 의료의 무상 가계서비스까지 생산의 범위 확대 등의 제안을 포함한다. 동 방식을 통해 산출되는 지표에는 민간 의료보험, 의료 및 장기 사회돌봄서비스의 무상 가계생산의 추가 분류에 기초한 지표뿐만 아니라 고용 또는 병상 수와 같은 자산의 물리적 측정치에 기초한 지표들도 들어 있다.

의료에 대한 지표들은 보건계정체계의 지출 흐름 데이터로부터 작성될 수 있다. 기능, 제공자 및 자금조달 체계를 교차표 형태로 하여 세분화한 최종소비지출에 기초한 지표는 표준 추정치에 포함하도록 제안되었다.

건강 및 사회 여건 관련 권고사항에는 기능 분류의 갱신이 포함된다. 현재 피용자보수에 포함되는 직업 건강서비스의 자가계정 생산은 2차 산출물로 귀속되어 중간소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현행 국민계정체계 보완을 위한 주요 확장은 이러한 차원을 포함한 보조 공급사용표와 함께 무급 가계의료 및 장기 사회보장에 대한 귀속지출을 반영하기 위한 생산경계의 확장을 포함한다. 2011 보건계정체계와 2008 SNA의 조화를 위해서 2011 보건계정체계 자본계정을 수정하여 의료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을 자본형성으로 인식해야 한다. 건강용품 생산자도 보건계정체계 제공자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5) 환경경제통합계정

환경 관련 위성계정의 표준은 웰빙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계정체계 개정의 범위에 있는 다른 영역과는 달리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인 환경경제통합계정 중심체계(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Central Framework, SEEA CF)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두 통계의 표준 간 개념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관한 지침의 초점은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와 국민계정체계 간 처리기준 불일치(cross-border) 이슈에 맞춰져 있다. 2008 SNA 개정에 있어 이 지침의 목적은 일부 개념적 차이를 극복하여 환경관련 위성계정의 표준을 강화하는 데 있다. 환경경제통합계정 작성과 관련하여 주된 이슈는 천연자원 가치평가, 천연자원의 소유권 및 고갈, 생물자원계정, 배출권거래, 재생에너지 자원 등으로 각 이슈별로 지침서가 작성되고 있다. 관련 이슈는 모두 13개로 천연자원의 경제적 소유권 조정, 생물자원의 처리, 광범위한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에 대한 설명, 손실 기록 등과 같은 개념적인 것이 있고 특정 지침서에서는 이슈를 설명하고 국민계정체계 및 환경경제통합계정에 적용할 잠정적 처리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광범위한 웰빙 및 지속가능성 관련 통계에 반영해야 하는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의 요소 정의와 국민계정체계와 환

경경제통합계정체계 사이의 경계 설명 이슈의 경우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가 웰빙 측정 표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논의 결과)

제안된 지침에서 두드러진 쟁점은 천연자원 고갈의 기록이다. 이 주제는 GDP와 같은 지표와 비교했을 때, 순소득(net income) 대비 총소득(gross income), 그리고 저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옹호하는 오랜 논의와 연관되어 있다.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에서 천연자원 고갈은 고정자본소모 이외에 GDP와 국내순생산(Net Domestic Product, NDP) 간의 차이를 정의하는 추가요소로 소득발생계정(generation of income account)에 기록된다. 2008 SNA에서는 고갈이 자산량기타증감계정(other changes in the volume of assets account)에 기록된다.

2008 SNA 개정에서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 처리방식 채택이 권고되었다. 이것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천연자원의 고갈을 통해 소득 성장이 실현되지만 그 결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소득 잠재력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천연자원의 경제적 소유권을 정의하는 것이 있다. 천연자원 발굴은 종종 민간 및 공공기관의 공동책임 하에 수행된다. 이 경우 소유권의 분할에 대한 권고는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보상을 받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 소유권이 분할되면 천연자원 고갈을 제대로 기록할 수 있다.

최근의 회계처리 관행에 따르면 육성생물자원과 비육성생물자원(cultivated and non-cultivated biological resources)의 구분은 상당히 쉬울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생산물과 자산이 정의되고 기록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국민계정체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공통된 이해가 필요하며, 개정된 국민계정체계와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 간의 추가 조정도 바람직하다. 생물자원 사용 허가에 대한 현재 국민계정체계 지침은 완전히 일관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자원 임대료와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측정방법 개선을 위한 추가 지침의 필요성이 조사되었지만, 필요한 지침의 대부분은 이미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안적 비시장 평가기법의 사용은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 실험 생태계계정회계(SEEA Experimental Ecosystem Accounting, SEEA EEA) 개정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민계정체계와의 일치와 관련하여 개정 SEEA EEA에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를 포함하는 평가 개념을 도입해서는 안되고 대체 방안으로 화폐가치의 포함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SEEA EEA 개정안에는 국민계정체계와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의 화폐적 측정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적 비시장 가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이다.

경제를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는 다른 가격결정 메커니즘과 함께 환경세 및 보조금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할 수 있다. 국가간 데이터 비교는 상이한 회계 관행뿐만 아니라 정책의 차이 때문에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 영역이 확인되었지만 향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다.

재생에너지 자원은 최근 몇 년간 중요성이 확대되어 왔다. 2008 SNA와 SEEA CF는 완전하고 일관된 평가방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주제는 재생에너지 자산을 정의하는 방법, 경제적 소유 및 화폐적 가치평가 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다.

(환경 이슈에 관한 확장 계정)

환경 문제에 대한 확장 계정에 관해서 논리적인 출발점은 환경-경제계정에 대한 국제표준인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이다. 이러한 표준의 구현의 맥락에서, UN 환경경제통합계정전문가위원회(UN Committee of Experts on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UNCEEA)는 세계 전체 대상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계정을 개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특별계정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책 문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에너지 계정(SEEA-Energy), 대기배출량 계정, 환경세 및 보조금 계정 등이다. 이러한 계정 외에도, 순환경제 즉 물질플로우계정(material flow accounts)을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고 있다. 토지 면적과 토지 사용에 대한 계정도 향후 몇 년 동안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계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물에 대한 계정이다. 여기서 국민계정의 넓은 틀에서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맥락에서 위에서 언급한 계정들이 확장 계정의 출발점이 된다.

한편 생태계 서비스 및 생태계 자산의 개발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새로 개발된 표준 편제지침²⁹⁾이 2021년 3월 개최된 UN통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생태계 자산에 대한 계정은 천연자본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생산 및 자산 경계 확대가 웰빙 및 지속가능성 측정을 위한 확장계정에 어떻게, 그리고 언제 반영될 수 있을지는 실제 구현을 포함한 국제표준의 향후 발전에 달려 있다.

29)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Ecosystem Accounting.
<https://unstats.un.org/unsd/statcom/>

IV. 우리나라 삶의 질 관련 통계(위성계정 등) 개발 현황

1. 위성계정 개발 현황

본 절에서는 무급 가사노동, 건강,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성계정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국가 승인통계 형태로 작성되고 있는 위성계정에는 가계생산 위성계정, 국민보건계정, 환경보호지출계정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국가 승인통계는 아니지만 관광계정처럼 해당 부문 정책이나 분석의 필요성 때문에 개발된 통계도 있다.

가. 가계생산 위성계정

현재 가계 내에서 자가소비를 위해 공급되는 가사 및 개인서비스(식사 준비와 제공, 아동보육, 노약자 돌보기 등)는 국민계정체계의 생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의 생산이 다른 경제부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이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 서비스를 생산에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성인인구가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로 분류되어 고용통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한국은행, 2021).³⁰⁾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가소비를 위한 가사 및 개인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가사노동 시간은 적지 않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UN은 가계생산 위성계정(Household Production Satellite Account, HPSA)을 통해 기존 중심계정에서 포착하지 못하고 있던 가사 및 개인서비스의 생산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2017년부터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작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무급 가사노동가치 추계, 고정자본소모 및 중간소비 추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0월

30) 현실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계 구성원의 시간이용조사(time use survey, TUS) 실시에 상당한 조사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지속적인 조사 실시가 쉽지 않다.

개발을 완료하였다. 최초에는 4개년(1999년, 2004년, 2009년 및 2014년)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었으며 2021년에는 2019년 기준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공표하였다. 현재 통계청은 생활시간조사³¹⁾ 기준년도(4, 9자년)에 따라 작성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고 이전 발표된 수치는 새로운 통계 공표시 수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급 가계노동의 안정적 평가를 위해서는 적어도 5년마다 시간이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계정 자문전문가그룹의 권고사항을 충족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추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자가소비를 위한 가사 및 개인서비스에 해당하는 행동분류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무급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행동분류 61개에 대해 1인당 일평균 투입시간을 산출한다. 그리고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와 직종별 임금분류 포괄범위 등을 고려하여 행동분류 61개 소분류와 이에 연계된 민간부문의 직종별 대체임금(시간당)을 추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무급 가사노동시간, 인구(만15세 이상 인구)와 대체임금을 적용하여 노동의 가치를 평가한다(무급 가사노동가치 = 무급 가사노동시간 × 인구 × 직종별 대체임금)³²⁾.

나. 보건계정

보건계정(Health Accounts)은 의료비의 재원별·기능별·공급자별 의료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표이다. 보건계정은 OECD, Eurostat 및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제시하고 있는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 편제 매뉴얼에 따라 작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이라는 명칭으로 편제하고 있다.

국민보건계정은 경상의료비 지출 총액을 재원별, 기능별, 공급자별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당시 제출할 목적으로 보건의료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2005년 기준)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다. 2009년에 2007년 기준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이 발표된 이래 매년 해당 통계가 작성·공표되고 있다(<표 4> 참조). 2016년 6월 2011 보건계정체계의 실행으로 의료비 총량과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보건계정」으로 통계 명칭이 변경되었다(정형선, 2020).

31) 일반적으로 시간이용조사가 공식적인 명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시간조사’라고 지칭된다.

32) 예를 들어 가정보육 서비스에 대한 임금은 민간부문 보육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임금 수준을 추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변호사가 생산하는 보육 서비스는 변호사의 평균 임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보건계정 작성시 국내 시계열 통계의 일관성 유지는 물론 국가 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의료비 총액과 그 하위 부문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국제기준인 2011 보건계정체계에 따라 최종소비 단계에서 지출한 의료비용의 총 규모를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Health Care Functions: ICHA-HC), 공급자별 분류(Classifica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ICHA-HP), 재원별 분류(Classification of Health Care Financing Schemes: ICHA-HF)에 따라 편재하고 있다(정형선, 2020).

〈표 4〉 우리나라 보건계정 작성 연혁

시기	작성 기관/연구자	주요 특징
1997	신종각	- 의료보험 급여범위와 본인부담 실태 분석
19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6년 국민의료비 추계와 지출구조 분석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외)	- 국민의료비 산출체계 개발 및 추계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식 외)	- 국민의료비 산출체계 개발 및 추정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식 외)	- 2001년 국민의료비 추계
2006~ 2020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등 (정형선 외)	- 2003~2018년 기간 각 연도별 국민보건계정 • 2007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국가승인통계 지정 • 2016년 2011 보건계정체계에 이행에 따른 의료비 총량 및 분류 기준 변경으로 「국민보건계정」로 명칭 변경
2012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정형선 외)	- OECD ‘신보건계정체계’(2011 보건계정체계) 적용 위한 국민의료비 시범 추계

자료 : 정형선 외(2020) ; 각년도 국민보건계정

다. 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보호지출계정(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ccounts, EPEA)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기타 환경 악화를 예방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투입된 경제적 자원(환경 관련 지출)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이다. 일반적으로 환경보호서비스 생산이나 오염 감소(대기, 물, 토양 등 대상), 폐기물·폐수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활동 등과 같은 환경보호지출 항목이 있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이리

한 지출항목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경제주체별(가계, 기업 및 정부)·환경영역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한 통계이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2012년 UN통계위원회에서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된 SEEA CF의 주요 하위계정 중의 하나로서 OECD에 2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환경분야의 대표적 통계 중의 하나이다(안길효, 2018; 이광한, 2008). 또한 환경보호지출계정은 환경정책의 유효성 및 효율성 분석, 환경보호 관련 시장 규모 파악 등에 필요한 통계로 환경보호를 위해 가계, 기업, 정부가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공급 측면 통계(환경산업통계)에서 누락된 정보를 보완할 수 있고 환경산업통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환경보호 관련 일자리(예: 일반기업의 환경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정보의 파악이 가능하다(안길효, 2018).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지출계정 작성은 한국은행이 1997년 6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환경오염방지 지출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데서부터 출발한다³³⁾. 이후 편제매뉴얼 작성 등 연구과정을 거쳐 2005년 기준 시험편제를 하였으며 2008년 1월 환경보호지출계정(2004~2006년 기준) 개발을 마무리하였다.

2009년부터는 환경부로 통계 작성이 이관되었으며, 이후 수주기관을 선정하여 위탁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환경연구원(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³⁴⁾이 매년 위탁을 받아 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다. 2018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작성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으며, 2019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은 2021년 10월 작성 완료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보호지출계정은 통계청 승인통계로서 기업 표본조사 등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가공통계³⁵⁾이다. 구체적으로 통계기획, 통계설계, 조사실시, 자료수집, 자료처리, 통계추정, 통계분석, 통계공표 등 7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통계기획은 환경부가, 통계설계는 한국환경연구원이 담당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에 대한 표본조사와 자료처리는 서베이 전문업체가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관련 자료수집과 자료처리, 통계분석은 한국환경연구원이 맡으며, 통계 발표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등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환경보호지출계정 작성 역사는 상대적으로 긴 편으로 1997년 국가승인통계 지위를 부여받아 통계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품질진단을 받고 있다.

33) 1995년 한국은행은 환경경제통합계정통계 중 환경보호활동을 식별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했다.

34) 2021년 8월 이전까지는 국문 기관 명칭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었다.

35)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지칭한다(통계 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조).

〈표 5〉 우리나라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작성 연혁

시기	작성 기관	주요 특징
1996	한국은행	- OECD 가입 당시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 작성·제출
2001~2010	환경부	- SEEA 및 녹색GDP 도입 중·장기 추진계획(2001~2010) 수립·추진 • EPEA(2008년 한국은행과 공동, 2009년 이후 환경부 작성) • 환경재화 및 서비스통계(환경산업조사통계) 작성(2001년 통계청과 공동; 2006년부터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작성 • 범경제물질플로우계정, 오염물질 배출계정(대기, 수계, 폐기물), 일부 자산계정(광물, 산림)을 시범 작성(2001~2009년)
2003	한국은행	- 회원국 환경상태 조사내용 변경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가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로 확대·개편(2002년, OECD)됨에 따라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작성
2005~2008	한국은행	- 환경경제통합계정통계 편제 작업의 일환으로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기법 개발 작업 시작(2005) - 2004~2006년 기준 EPEA 편제(2006~2008년)
2007	한국은행, 환경부	- 양 기관 환경-경제 통계업무 협력을 위한 약정서 체결(12월) • 2009년부터 EPEA 편제 업무의 환경부 이관 합의
2008	환경부, 한국은행	- 2007년 기준 EPEA 편제 작업 공동 추진
2009~2010	환경부, KEI	- 2008년 기준 EPEA 편제결과 발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EPEA 편제업무 대행)
2010~2018	환경부, KEI	- 2009~2017년 기준 EPEA 편제
2018~2019	환경부, KEI, 닐슨	- 2017~2018년 기준 EPEA 편제
2013	통계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 SEEA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 1라운드(2014~16): 물질플로우계정 연구 및 개발 • 2라운드(2017~19): 에너지 및 관련 계정 연구 및 개발 • 3라운드(2020~22): 물 및 관련 계정 연구 및 개발
2019~2020	환경부, KEI, 닐슨	- 2018~2019년 기준 EPEA 편제

자료 : 통계청(2013) ; 환경부(2020)

라. 관광위성계정

관광산업은 역내 주민들에게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제공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도 기여한다(김일태 외, 2012). 하지만 관광산업은 하나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포착하기 어렵다³⁶⁾. 관광산업의 산출물은 도소매업, 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교통서비스 등 여러 산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중심계정에서의 관광산업 포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성계정 작성을 통해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 TSA)은 외국인 국내관광지출, 내국인 국내관광지출, 내국인 해외관광지출, 관광산업부가가치, 관광고용, 관광 총고정자본형성, 정부의 관광 관련 공동소비 및 투자지출, 비화폐적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통계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국내총생산 대비)을 산출하고, 관광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수를 계산하는 데 이용된다. 또한 관광위성계정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관광지출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관광위성계정을 통해 관광산업을 좀 더 정확하게 포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김일태 외, 2012). OECD, Eurostat,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WTO) 등은 세계 각국의 관광산업을 비교할 수 있는 도구로서 관광위성계정 국제 표준 개발을 주도해 왔다.³⁷⁾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산업 수요와 공급의 변화 및 경제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타국가와의 비교 등을 위해, <표 6>과 같이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였다. 2000년 4월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1998년 기준 한국관광위성계정(Korean Tourism Satellite Account, KTSA)을 처음으로 작성 발표하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5번째의 관광위성계정 개발국이 되었다. 이후 2005년에 다시 2004년 기준, 그리고 2010년에 2008년 기준으로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2년 하반기 2010년 기준 수요측면 관광 위성계정을 수정 편제·발표하였다(이동수, 2012).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 기준 한국관광위성계정을 편제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36)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이미 다른 산업부문의 계정과목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관광산업의 영역과 규모를 정확하게 구분 짓기가 어렵다.

37) 이러한 국제기구 그룹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 체계는 2000년에 UN통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표 6〉 우리나라 관광 위성계정(TSA) 작성 연혁

	작성기관	제목	주요 특징	비고
2000 (1998)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연구원	한국 관광 위성계정 개발 (KTSA 1998)	- 수요측면에서 관광산업 파악후 산업연 관표를 이용해 공급측면 분석 (관광수요계정: 민간소비지출, 수출, 정 부지출) (관광공급계정: 부가가치, 고용, 고정 자 본형성)	최초
2005 (2004)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연구원	2004년 한국 관광 위성계정 개발 (KTSA 2004)	- KTSA 1998의 기본 틀 유지 - 민간소비지출, 수입, 수출 등의 추정방법 수정 및 보완	
2010 (2008)	문화관광부 · 한국관광연구원	2008년 기준 한국 관광 위성계정 (KTSA 2008)	- TSA: RMF 2008 기준 관광산업의 소비 지출 규모, 부가가치 및 고용, 고정자본형 성 등 산출(수요측면)	
2012	통계청 통계개발원	관광 위성계정(TSA) 작성방안 연구	- TSA: RMF 2008에 의거 관광위성계정 편제 - 이를 위해 필요한 관광통계 현황과 내 용 고찰, 문제점과 보완내용 파악(2000~ 2010년 대상)	
2015	한국관광연구원	한국 관광 위성계정 개발 방법에 관한 연구	- TSA: RMF 2008 기준 관광위성계정 작 성체계 구축 - KTSA 구축을 통해 산업연관표와 연계 된 관광부가가치 및 관광 GDP 도출 방 법과 KTSA 발전 방안 제시	
202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관광 위성계정 (KTSA) 개발 및 구축방안 연구	- 한국 관광산업의 경제적 규모와 관광산 업 총부가 가치 등 관광산업이 한국경 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결과 미공표
2021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한국 관광 위성계정(KTSA) 산출 및 고도화 연구	- 2020년 수행한 “한국관광위성계정(KTSA) 개발 및 구축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기 초자료 보완 및 산출방식 고도화 - 한국관광위성계정(KTSA)의 연속적 생산 및 신뢰 제고	진행중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연구보고서 등

2. 위성계정 평가

본 절에서는 앞 소절에서 파악한 위성계정 개발 현황에 기초하여 계정별 의의, 통계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가. 가계생산 위성계정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는 국가 핵심계정인 국민계정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데 있다. 현행 국민소득 편제 국제기준에서는 생산에 있어 가사노동을 제외하지만 위성계정은 이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가사노동을 포함하도록 생산의 경계를 확장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평가를 통해 성장 및 복지정책 수립·평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술했듯이 실제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시장 가계생산 활동의 화폐화를 통해 소득 측정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소득(GDP) 통계를 보완할 수 있다.³⁸⁾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위성계정’이라는 명칭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승인통계(2018년 지정)로 편제 역사는 짧은 편이다. 그러나 국가통계 전담 정부기관인 통계청에서 직접 작성하고 있고 승인통계로서 정례화되어 편제·발표되고 있다.

또한 대상통계의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일관성 등의 면에서 정기적인 품질진단을 받고 있다. 따라서 통계의 품질 수준이나 국민계정과의 정합성 등의 면에서 전문성에 기초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보건계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20여년 이상의 보건계정 편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민보건계정을 통해 우리나라 총량 의료비 지출 규모를 OECD 회원국 간에 비교할 수 있다. 보건계정의 경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소비 등 경제적 성장 측면을 평가하는 2008 SNA의 개념 및 체계를 차용(지출, 거주민 개념 등)하고 있지만 작성방법 및 자료처리 방식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자가소비생산(own-account production)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에서 ‘생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건계정에서는 재가보건의료서

38)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내용이 국민계정통계와 병행되어 발표된다면 현행 지표인 GDP보다 실제 경제성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스티글리츠 보고서, 2009).

비스(home health care services)에 대한 보상으로 민간 가계에 주어지는 현금 이전소득(transfer)은 의료의 가계생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건계정도 국가승인통계이므로 통계청으로부터 정기적인 품질진단을 받고 있어 통계의 품질 수준, 국민계정과의 정합성 등의 면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보호지출계정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여 1년 단위로 편제되고 있다. EPEA의 최초 개발 당시 한국은행이 직접 담당하였던 통계이고, 편제 역사가 길다는 점에서 국민계정과의 정합성 및 보완성 측면에서 다른 위성계정과는 차별화되는 통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종목표라 할 수 있는 환경-경제계정(SEEA) 편제로 완전히 이행하지는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이행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한국은행에서 SEEA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표(김영태, 2000)하는 등 계정의 편제 필요성을 주장한 적도 있으나 기초자료 부족, 여건 미조성 등으로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또한 환경부도 2001년부터 SEEA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나 일부 계정³⁹⁾의 시험작성에 그쳐, 종합적인 계정 편제에 이르지는 못하였다(통계청, 2013). EPEA도 국가승인통계이므로 통계청으로부터 정기적인 품질진단을 받고 있어 통계의 품질 수준, 국민계정과의 정합성 등의 면에서 일정한 관리를 받고 있다.

라. 관광위성계정

우리나라는 관광위성계정 작성 면에서 20여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다른 위성계정에 비해서는 편제 역사가 긴 편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총량 개념의 관광 위성계정이 아직은 정례적으로 편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20년 기준 한국관광위성계정(KISA) 산출 및 고도화 연구” 용역 과제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기초자료 보완 및 작성방식 고도화를 통해 계정 편제의 정례화를 고려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한편, 문화위성계정(Culture Satellite Account, CSA)은 문화, 예술, 유산 등의 경제적 기여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계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문화 위성계정은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된 여행 및 관광위성 계정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대체로 동일한 방식을 따라 작성된다. 문화 위성계정은 한 나라 경제의 일부로서 문화의 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국민계정은 국

39) 예를 들면, 범경제물질플로우계정, 오염물질배출계정(대기, 수계, 폐기물), 자산계정(광물, 산림) 등이다.

가경제를 설명하는 핵심 통계이며 문화 위성계정은 그것의 일부 명세서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위성계정은 다른 위성계정과 마찬가지로 생산량(GDP) 및 고용에서 문화의 기여도, 민간 및 공공 소비지출 중 문화의 비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광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국제적 분류기준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는 등 유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문화위성계정의 미래를 간접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은 관광위성계정이다. 왜냐하면, 관광위성계정은 문화계정 작성에 필요한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관광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문화위성계정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편제된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위성계정이 작성된 사례가 없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 위성계정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 채용 과정을 거쳤으나 현재 연구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표 7>은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위성계정의 현황을 간단히 정리한 자료(명칭, 국가통계 승인시기, 작성 목적, 조사항목 등 포괄범위)이다.

〈표 7〉 우리나라 위성계정 또는 유사 통계 현황

통계명 (작성기관)	승인 (시기)	작성 목적	조사 항목	작성대상 범위	주기
가계생산 위성계정 (통계청)	승인 통계 (2018)	무급 가사노동의 적절한 평가를 통해 성장 및 복지 정책 수립·평가에 기여 하고 소득측정 대상 영역을 확대	○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계정 항목 - 피용자보수(무급 가사노동 가치), 고정자본 소모, 중간 소비, 총산출	○ 가계생산 범위 중 SNA 생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계 내에서 가사 및 개인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활동수행 가계	5년
국민보건 계정 (보건 복지부)	승인 통계 (2007)	국제비교 가능한 국민 의료비 재원, 공급, 기능별 지출규모를 파악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지출수준 파악 및 비교가 가능하며 보건 의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보건으로 비용을 기능별, 재원별 및 공급자별 분해 작성 - 최종결과표 3종 · 기능-재원별, 기능-공급자별, 공급자-재원별 의료 비지출 규모	○ 국민 의료비 지출	1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¹⁾ (보건 복지부)	승인 통계 (2009)	국가 사회복지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및 OECD 회원국으로서의 자료 제출 목적	○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적 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 사회 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 규모	○ 정부(중앙, 지방) ○ 민간(법정, 자발적 민간)	1년
환경보호 지출계정 (환경부)	승인 통계 (1997)	경제활동과정중 발생한 환경오염 예방, 완화/제거 위해 경제주체(정부, 기업, 가계 등) 부담 환경지출액을 파악하여 환경계정 편제 기초통계로 활용 * 2012년 UN통계위원회에서 국제통계 표준으로 채택된 환경-경제통합계정 핵심체계(SEEACF)의 주요 하위 계정의 하나	○ 중앙 및 지방정부: 예·결산서의 환경관련 지출 항목 ○ 일반기업: 일반현황, 경상지표·투자 관련항목, 환경오염 방지 투자 및 경상지출 관련 항목(인건비, 위탁처리비 등) ○ 기타: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 장치가격, 정화조 판매가격,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비용 등	○ 중앙 및 지방정부: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시, 군, 구(전수 조사) ○ 일반기업 - 전수: 환경오염사업 중 종사자수 300인 이상 - 표본: 3,520개 (제조업: 2,464개, 비제조업: 1,056개)	1년
관광위성 계정 (문화체육 관광부)	-	관광산업의 경제 규모와 관광산업 총부가가치 등 파악 및 정책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	○ 관광소비자 대상 관광 상품/서비스 조사 ○ 관광목적용품(내구재) 구매자 조사 ○ 단기 유학생 및 전자 상거래의 관광목적 지출 조사 등	○ 관광 수요 및 공급 범위, 구축방법 개발 ○ 공공부문의 관광 관련 지출 계상 ○ 지출구조 조사 및 고용 지표 고도화 등	비정기적, 연구목적

주 : 1) 위성계정은 아님
자료 : 통계청 “작성기관 및 승인통계” 내용을 저자가 정리

V. 시사점

본 연구는 국민계정통계와 관련하여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 및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GDP 등 국민계정통계는 한 국가의 경제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구로서 그 유용성을 널리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웰빙, 지속가능성 등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선 논의는 크게 위성계정 개발 등을 통한 국민계정체계 내에서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Extended GDP’, 새로운 삶의 질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Beyond-GDP’,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OECD의 통합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2020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현행 국민계정통계 국제표준(2008 SNA) 개정 작업에서는 ‘Extended GDP’ 접근법에 기반하여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 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UN 등 국민계정실무그룹은 웰빙 및 지속가능성을 디지털화, 세계화와 함께 주요 개정 과제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웰빙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세부 이슈들을 파악하고 각 이슈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2025년에 공표될 새로운 국제표준(2025 SNA)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위성계정을 통해 무급가사노동, 교육훈련·인적자본·노동, 건강·사회적 여건,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삶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위성계정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각국은 자국의 통계 환경과 수요에 맞게 위성계정을 작성해왔다. 2008 SNA에도 위성계정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통계 편제역량이 높은 유럽 및 북미국가들을 중심으로 위성계정 개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삶의 질 등 기존 중심계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계정통계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2025 SNA에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위성계정 활용 방안이 포함될 계획임에 따라 각국의 통계작성기관들은 삶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위성계정을 개발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관에서 삶의 질 관련 일부 위성계정을 개발·작성해왔다. 먼저 환경보호지출계정은 1997년 한국은행에서 개발되어 2009년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인 환경경제통합계정 수준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계정을 2007년 이후 매년 작성해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통계

청은 2018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하였고 향후 5년 주기로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계정을 개발하였으나 아직까지 정기적으로 작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위성계정들이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되어 정기적인 품질진단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삶의 질 관련 국민계정통계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우리나라 위성계정 작성 현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삶의 질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국제적으로 위성계정 개발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논의가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삶의 질과 관련한 좀 더 다양한 위성계정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인적자본 형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시간적 투입 및 비용 지출 등을 포함하는 교육훈련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 for Education and Training) 작성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확장하여 환경경제통합계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디지털위성계정을 개발하여 디지털화가 우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확히 포착해야 한다.

둘째, 삶의 질 관련 위성계정 개발 및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행이 중심계정을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위성계정의 경우 기초자료 확보 용이성, 해당 부문에 대한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들이 편제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8 SNA 개정 작업에서는 경제통계 간 정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계정체계와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 등 여타 국제통계표준 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2025년에 공표될 SNA는 17년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새로운 개념 도입, 기존 추계방식의 변경 등 상당폭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위성계정을 개발하고 기존 위성계정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심계정 작성에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은행과 해당 부문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셋째, 삶의 질 관련 통계에 대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통계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계정통계는 일반 대중에게 생소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 및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위성계정통계는 GDP 등 중심계정통계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UN 등 국민계정워킹그룹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새롭게 공표되는 SNA에는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독립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통계작성기관들도 이용자들에게 위성계정에 포함된 삶의 질 관련 정보를 어떻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를 빠른 시간에 습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점차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수행이 중요해지고 있다. 2025 SNA에는 국민계정 핵심지표인 GDP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기후변화 등 삶의 질 관련 경제여건의 측정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 학계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국민계정통계 개선 및 새로운 통계 개발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기초자료 수집, 편제시스템 개선 등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상민·김현호(2019),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사회적 관계망 및 공동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19, 1-221.
- 김영태(2000), “UN의 환경경제통합계정(SEEA)과 우리나라의 도입방향”, 계간 국민계정, 제3호
- 김영태·박진호(2012), “소득계정으로 본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국민계정리뷰, 4th.
- 문화체육관광부(2020), “한국관광위성계정(KTISA) 개발 및 구축방안 연구”, 한국관광위성계정(KTISA) 개발 및 구축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
- _____(2021), “2020년 한국관광위성계정(KTISA) 산출 및 고도화 연구”, 2020년 한국관광위성계정(KTISA) 산출 및 고도화 연구 제안 요청서.
- 손종철·임시영(2016),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민소득통계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경제 및 가계의 삶의 질 측정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계정리뷰, 4th.
- 안길효(2018), 환경보호지출계정, 2018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통계청, 11월
- 이광원(2021), “국민계정에 대한 최근 국제적 논의 현황: OECD 국민계정관련 실무그룹(WPNA) 회의(2020.11월) 결과를 중심으로, 국민계정리뷰 1st, 2021.
- 이광환(2008),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개발결과”, 분기국민계정, 1분기
- 이상호(2020), 『빅데이터 워크샵: 개념, 통찰력, 활용』, 시(示) 커뮤니케이션, 2020.
- 이승준·김지원·조주령·구교준(2021), “대안GDP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도시·국가·국제기구의 사례 분석”, 안사이트2050 08, LAB2050.
- 이희길·심수진(2014), “제1장 국민 삶의 질 측정 2014: 삶의 질 측정지표 개발결과 보고”. 2014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V권, 통계개발원.
- 정형선(2020), 「2018년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의료복지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통계청(2013), “환경경제계정 중·장기 개발계획”,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의안번호 제2013-07호, 10월 8일
- _____(2021),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보도자료
- 한국은행(201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15』, 1월
- _____(2021),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20』, 1월
- 환경부(2020), “2018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연구”, 2018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결과 보고서, 7월

- AEG (2019). “Review of Satellite Accounting”, Agenda item: 5.2, 13th Meeting of the Advisory Expert Group on National Accounts, 1-3 October 2019, Washington D.C., USA
- ____ (2020a). “A broader framework for wellbeing and sustainability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genda item: 6.5, 14th Meeting of the Advisory Expert Group on National Accounts, 5-9 October 2020, Virtual Meeting
- ____ (2020b). “Unpaid Household Service Work”, Agenda item: 6.7, 14th Meeting of the Advisory Expert Group on National Accounts, 5-9 October 2020, Virtual Meeting
- ____ (2020c). “Health and Social Conditions”, Agenda item: 6.8, 14th Meeting of the Advisory Expert Group on National Accounts, 5-9 October 2020, Virtual Meeting
- ____ (2021). “Labour Accounts, Education and Human Capital”, Agenda item: 8.3, 15th Meeting of the Advisory Expert Group on National Accounts, 6-8 April 2021, Remote Meeting
- Cobb, C. W., and Daly, H. (1989), “The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For the Common Good—Redirecting the Economy toward Community, the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Future”, Beacon Press, Boston, 401-457.
- Cobb, C., Ted Halstead and Jonathan Rowe (1995), “The Genuine Progress Indicator: Summary of data and methodology”, *Redefining Progress*.
- Daly H.E. and Cobb J.B. (1989), “For the Common Good: Redirecting the Economy toward Community, the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Future”, Boston: Beacon Press.
- Doughnut, Raworth K. (2017), “Economics: Seven Ways to Think Like a 21st-Century Economist”, Penguin Random House.
- Hawrylyshyn, Oli (1977). “Towards a definition of non-market activities”, *Review on Income and Wealth*, vol. 23, No. 1 (March), pp. 79-96.
- Hoekstra R. (2019), “Replacing GDP by 2030: Towards a common language for the well-being and sustainability commu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____ (2020a), “Measuring the Wellbeing Economy-How to Go Beyond-GDP”, Wellbeing Economy Alliance, October.
- ____ (2020b), “SNA and beyond: Towards a broader accounting framework that links the SNA, SDGs and other global initiatives”, *Statistical Journal of the IAOS* 36, pp. 657–675.
- Lange G-M, Carey K and Wodon Q. (2017), “The Changing Wealth of Nations 2017”, World Bank.
- Nicolaides, Andreas (2018), “Measuring the ‘Free’ Digital Economy”, 16 January.

- Nordhaus W.D. and Tobin J. (1972), “Is Growth Obsolete? In: Economic Growth”,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Economic Research: Retrospect and Prospect; vol. Volume 5).
- OECD (2011), *A System of Health Accounts*, OECD Publishing, Paris, France.
- ____ (2020), “How’s Life in 2020?: Measuring Well-being - Highlights”, March.
- Pearce D.W., Atkinson G.D.(1993), “Capital theory and the measur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 indicator of ‘weak’ sustainability”. *Ecol Econ*. Oct 1;8(2):103–8.
- Porter, Michael E., Scott Stern and Michael Green (2015), “Social Progress Index,” *Social Progress Imperative*.
- Sachs, J., Schmidt-Traub, G., Kroll, C., Lafortune, G., Fuller, G., Woelm, F.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OVID-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n A. (1985),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Amsterdam, New York and Oxford: North-Holland; (Professor Dr. P. HEnnipman Lectures in Economics)
- STATISTICS CANADA (2020), “Satellite Accounting in Canada”, August 13, Catalogue No. 13-605-X.
- Stiglitz, J. E., A. Sen and J-P.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Paris, France.
- Talberth, J., Cobb, C., and Slattery, N. (2007), “The Genuine Progress Indicator 2006: A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akland, CA: Redefining Progress.
- The World Bank (2018), “The Changing Wealth of Nations”, January 30.
- UN (2015), *Human Development Index Report*.
- ____ (1996),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 and Methodologies”, New York: United Nations Sales Publication; August.
- UNECE (2016), *Guide on Measuring Human Capital*, New York, United States and Geneva, Switzerland.
- ____ (2017), *Guide on Valuing Unpaid Household Service Work*, New York, United States and Geneva, Switzerland.
- ____ (2019), “In-depth Review of Satellite Accounting, Prepared by Canada”, ECE/CES/BUR/2019/FEB/2, 7 February, Geneva, Switzerland.
- ____ (2020), “Satellite Account for Education and Training: Compilation Guide”, New York, United States and Geneva, Switzerland.

-
- UNEP (2018), “Inclusive Wealth Report 2018: Measuring Sustainability and Well-Being”
 - UNSTATS (2020), “A broader framework for wellbeing and sustainability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 14th Meeting of the Advisory Expert Group on National Accounts, 5-9 October:
 - Van de Ven, P. (2019), “Measuring Economic Wellbeing and Sustainability: a Practical Agenda for the Present and Future”, *Eurostat Review on National Account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Vanoli, A. (2017), “The Future of the SNA in a Broad Information Perspective”,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ume 63 s2, pp. S238-S265.

상세자금순환표를 통해 본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

원 영 진*

상세자금순환표는 기존 자금순환표에 거래상대방 정보를 더하여 금융상품별로 경제부문간 채권-채무(creditor-debtor) 관계를 행렬 형태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부문간 자금흐름의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미시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은 2018년부터 현금 및 예금, 대출금, 채권, 보험 및 연금 준비금 등 주요 채무성 금융상품에 대해 상세자금순환표를 시험편제하고 있다.

상세자금순환표 시험편제 결과를 이용하여 경제부문간 익스포저를 살펴본 본 결과 현금 및 예금과 대출금은 부문간 익스포저 형태가 유사하나 자금흐름의 방향은 서로 반대인 모습을 보이며, 채권은 부문간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은 단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금융상품을 합한 상세자금순환표에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을 측정된 결과 금융기관은 자금 중개자로서 다른 부문의 자금조달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계는 자금 공급자로서 다른 부문의 자금조달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성 금융상품에 한해서는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유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상세자금순환표가 경제부문간 자금흐름 구조 파악 및 파급효과 분석 등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앞으로 상세자금순환표의 속보성 등을 보완하는 한편 미시분석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표통계로서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I. 검토 배경

II. 개황 및 시험편제 결과

1. 개황
2. 시험편제 결과

III.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IV.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 과장(email: wonday@bok.or.kr, phone: 02-759-4337)

** 논고 작성에 도움을 주신 자금순환팀 문혜정 팀장, 정채은 조사역, 허성혁 조사역, 김명동 조사역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I. 검토 배경

상세자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는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상환의무를 지닌 경제부문을 채무자(debtor), 자금을 운용하여 상환받을 권리를 지닌 경제부문을 채권자(creditor)로 하여 각 금융상품별로 채권-채무 관계를 행렬 형태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상세자금순환표는 기존의 자금순환표¹⁾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상품별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금융상품을 매개로 한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경제부문간 자금흐름의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상세자금순환표는 통화정책효과 분석, 금융안정성 측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화가 각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자금운용 및 자금조달 경로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경제부문간 상호 익스포져 규모 및 구조를 파악하여 금융시스템 내 위험발생영역을 모니터링 하거나 위기의 잠재적 확산경로를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미시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08 SNA와 같은 국제통계표준이나 G20 DGI-2 같은 국제통계사업에서 상세자금순환표의 작성을 권고해 오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통계 수요 및 필요성에 부응하여 2018년부터 내부적으로 시험편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거래상대방 식별이 가능한 주요 채무성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편제하고 있다. 시험편제에 포함된 금융상품은 금과 SDR, 현금 및 예금, 대출금, 채권, 보험 및 연금 준비금 등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기타금융상품 등은 거래상대방 식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시험편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상세자금순환표 작성이 가능한 금융상품이 제한적이지만, 주요 채무성 금융상품에 대해서 시험편제 결과가 축적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상세자금순환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현금 및 예금, 대출금, 채권, 보험 및 연금 준비금 4가지 주요 상품에 대한 상세자금순환표 시험편제 결과를 살펴본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상세자금순환표를 이용하여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을 분석하는 방법과 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1) 자금순환표는 경제부문(가계, 기업, 정부, 금융, 국외)별로 자금 운용 및 조달을 위한 금융거래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이다. 금융거래표는 일정기간 중 각 경제부문의 금융자산·부채의 취득 및 처분액을 기록한 유량(flow) 통계이고, 금융자산·부채잔액표는 일정시점에 각 경제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부채의 잔액을 기록한 저장(stock) 통계이다.

II. 개황 및 시험편제 결과

1. 개황

본 절에서는 상세자금순환표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 소개한다. 상세자금순환표는 현행 한국은행의 공표통계인 자금순환표³⁾에 거래상대방 정보를 더한 확장된 자금순환표에 해당한다. 먼저 자금순환표는 <그림 1> 개념도에서 보듯이 경제부문별로 예금, 대출금,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들을 자산 또는 부채로 보유한 규모를 행렬형태로 정리한 표이다. 통상 행에는 금융상품, 열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보유 주체를 표시한다.

<그림 1> 자금순환표 개념도

	〈자산잔액표〉			〈부채잔액표〉			
예금	860	616	9	예금	0	0	1,486
대출금	0	0	2,117	대출금	1,114	974	29
채권	55	21	154	채권	0	57	173
	가계	기업	은행		가계	기업	은행

자금순환표를 보면 개별 경제주체들의 금융상품별 익스포저를 알 수 있어 특정 금융상품 시장의 과열 또는 교란 상황에 대해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시장의 불안이 감지되었을 때 <그림 1>의 정보를 통해 가계와 기업 중 가계가 상대적으로 해당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계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자금순환표에 거래상대방 정보를 더할 경우 이러한 자금순환표의 유용성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의 채권시장 불안 예시에서 채권 상품의 투자 익스포저가 높은 가계에 대해 거래상대방 측면에서 어떤 부문이 가장 익스포저가 높은지를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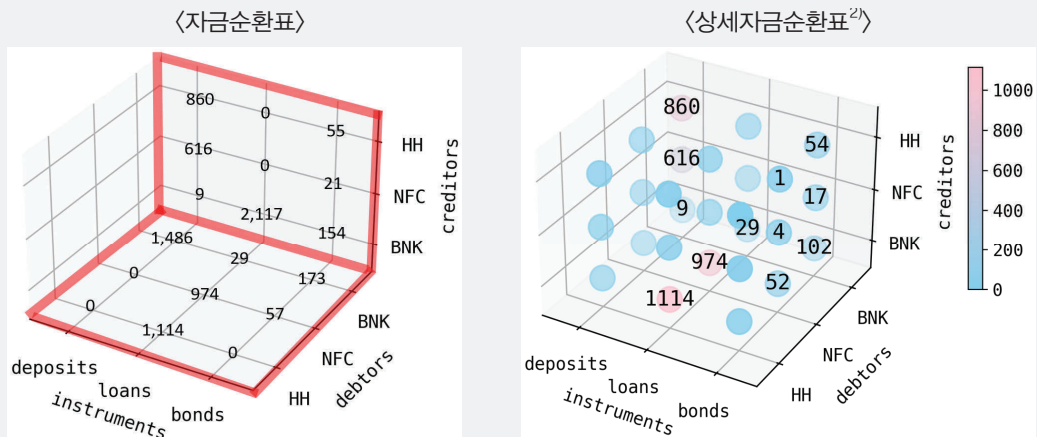
3) <그림 1>은 자금순환표의 저장(stock) 통계인 금융자산·부채잔액표의 예시에 해당한다. 유량(flow) 통계인 금융거래표도 <그림 1>과 동일한 형식으로 행에 금융상품, 열에 해당 금융상품의 보유부문을 표시하며, 금융자산의 거래적 변동인 운용액과 금융부채의 거래적 변동인 조달액 기준의 두 가지 표로 나타낸다.

있다면 채권시장 불안의 여타 부문으로의 잠재적 전이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개별 부문의 각 ‘금융상품’에 대한 익스포저를 파악하는 것에서 개별부문의 여타 ‘부문’에 대한 익스포저를 파악하는 방향으로의 정보 확장이 상세자금순환표가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를 반영하여 국제기구 등에서는 상세자금순환표를 From-Whom-To-Whom Tables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림 1>의 자산잔액표와 부채잔액표는 세로축은 금융상품, 가로축은 자산으로서의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채권자(creditor)) 또는 부채로서의 해당 상품 보유자(채무자(debtor))를 표기한 두 개의 2차원 평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채권자의 거래상대방은 채무자, 반대로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은 채권자이므로 자금순환표에 거래상대방 정보를 추가한다는 것은 <그림 1>에서 자산잔액표에 채무자 축을 추가하고 부채잔액표에는 채권자 축을 추가하여 정보를 표시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산잔액표에 추가된 채무자 축은 부채잔액표의 본래 가로축(채무자 축)에 해당하며 부채잔액표에 추가된 채권자 축은 자산잔액표의 본래 가로축(채권자 축)에 해당하므로 결국 두 표는 <그림 2>의 좌측과 같이 동일한 3차원 공간의 각 면을 점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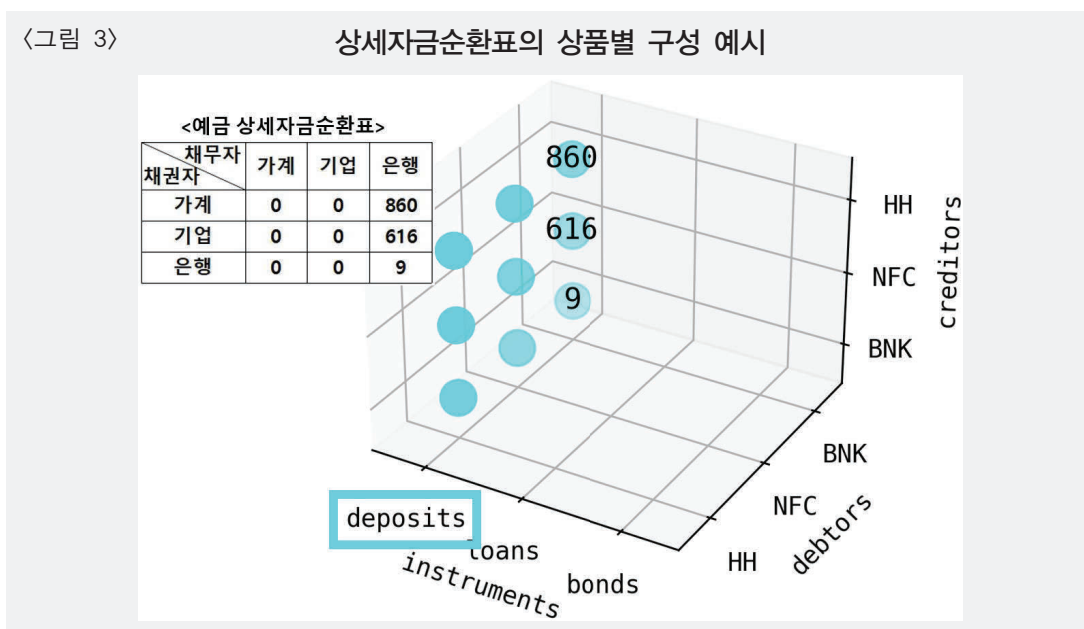
상세자금순환표 개념도¹⁾



주 : 1) HH: 가계및비영리단체, NFC: 기업, BNK: 은행
 2) 가독성을 위해 값이 0인 경우 수치 미표시

<그림 2>에서 3차원 공간의 x축은 금융상품, y축은 채무자, z축은 채권자로 표시되어 있다. 상세자금순환표는 이들 각 면에서 공간 내부로 나아가 <그림 2>의 우측에서처럼 세 개 축을 동시에 활용한 정보를 공간 상에 나타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의 우측을 보면 채권 상품의 채무자 즉 발행자가 기업인 경우 채권자 별로 각각 가

계가 1조원, 기업이 4조원, 은행이 52조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1>의 자금순환표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상세자금순환표를 통해 추가로 얻게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림 2>의 우측과 같이 3차원 공간상에 한꺼번에 정보를 나타낼 경우 숫자들이 포개지면서 정보 가독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개별 금융상품별로 2차원 평면에 담긴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상세자금순환표를 행렬형태로 표시하게 된다.



2. 시험편제 결과

본 절에서는 현금 및 예금³⁾, 대출금, 채권, 보험 및 연금 준비금⁴⁾ 4개 주요 채무성 금융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2021년말 잔액표 기준 상세자금순환표 결과를 소개한다.

가. 현금 및 예금

2021년말 현금 및 예금 잔액에 대한 상세자금순환표는 <표 1>과 같다. 여기서 합계 행

3) 현금은 한국은행권(지폐)과 주화를 가리킨다.

4)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 적립금과 개인 퇴직연금 준비금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 적립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국민연금의 자본으로 인식되어 자금순환표에 나타나지 않음).

과 합계 열은 기존 자금순환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즉 합계 행은 각 경제부문이 현금 및 예금을 부채로 얼마씩 보유하고 있는지를, 합계 열은 자산으로 얼마씩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어 경제부문별 금융상품 보유정보를 담고 있는 자금순환표 내용과 일치한다. 이 합계 행과 합계 열 내부의 행렬 부분이 상세자금순환표를 구성함으로써 드러나는 정보이다. <표 1>에서 “채권자-채무자” 조합을 보면, “가계-비은행” 조합이 924조원으로 가장 크고 “가계-은행” 조합이 860조원, “기업-은행” 조합이 616조원 등으로 크게 나타난다.

<표 1> 현금 및 예금 상세자금순환표¹⁾²⁾

(조원)

채권자	채무자								
	은행	비은행 ³⁾	보험연금	기타금융 ⁴⁾	정부	기업	가계	국외	합계
은행	9	0	0	178	0	0	0	0	188
비은행	161	23	0	230	0	0	0	0	414
보험연금	127	32	0	15	0	0	0	0	173
기타금융	168	85	1	158	0	0	0	0	412
정부	173	20	0	85	0	0	0	0	278
기업	616	252	0	57	0	0	0	0	925
가계	860	924	0	259	96	0	0	0	2,139
국외	33	0	0	9	0	0	0	0	43
합계	2,147	1,336	1	991	96	0	0	0	4,572

주 : 1) 2021년말 잔액 기준

2) 합계 열과 합계 행을 제외한 셀들을 대상으로 최대값에 녹색을 지정한 다음 나머지 값들은 최대 최소값(0) 사이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분위수가 높아질수록 녹색에 근접하도록 표시

3) 은행을 제외한 예금취급기관으로서 금전신탁,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으로 구성

4) 은행, 비은행, 보험사·연금기관을 제외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앙은행, 투자펀드, 증권사, 카드사, SPC 등으로 구성

<그림 4>는 <표 1>과 동일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네트워크 도표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 어떤 부문의 상대 부문에 대한 익스포저는 해당 부문이 상대 부문에 대해 특정 금융상품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합계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gross exposure는 자산과 부채의 합계 기준으로, net exposure는 자산과 부채의 상계 기준(부채를 음수로 취급)으로 익스포저를 측정한다. 네트워크 그림에서 원은 각 부문이 다른 부문 전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 선은 연결된 개별 부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를 나타내며 원의 크기와 선의 굵기는 익스포저의 크기에 비례한다. 한편 net exposure의 경우 익스포저가 가장 큰 세 개 선에 대해서는 특정 부문의 상대 부문에 대한 익스포저 값이 양수(자산>부채)일 경우 화살표가 자부문에서 상대 부문으로 향하게, 음수(부채<자산)일 경우 화살표가 상대 부문에서 자부문을 향하게 표시한다.

gross exposure와 동일하게 2,139조원이다. 그러나 비은행은 -922조원으로, <표 1> 합계 열의 비은행 자산 합계 414조원에서 합계 행의 비은행 부채 합계 1,336조원을 차감한 값이다. 이와 같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순부채 부문은 네트워크 그림에서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다. 2021년말 현금 및 예금 금융상품 기준으로 순부채 부문은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은행, 비은행, 기타금융인 반면 순자산 부문은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가계, 기업, 정부, 보험연금, 국외 부문이다. net exposure 그림의 장점은 주요 순자산 부문(가계, 기업)으로부터 주요 순부채 부문(은행, 비은행)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이 화살표 형태로 나타나 해당 금융상품을 경유하여 나타나는 경제부문간 자금흐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대출금

대출금 상세자금순환표는 현금 및 예금 상세자금순환표와 대칭적인 구도를 보인다. 즉 현금 및 예금에 대하여 주요 채권자였던 가계와 기업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주요 채무자로 나타난다. <표 2>에서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높은 조합은 “은행-가계” 1,114조원, “은행-기업” 974조원, “비은행-가계” 462조원 순으로 나타난다.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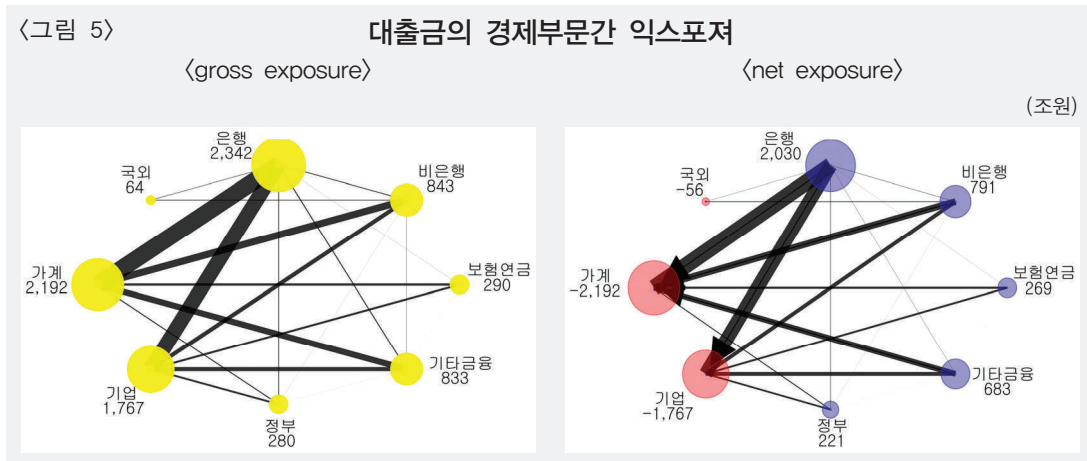
대출금 상세자금순환표

(조원)

채권자 \ 채무자	은행	비은행	보험연금	기타금융	정부	기업	가계	국외	합계
은행	29	15	0	25	8	974	1,114	20	2,186
비은행	36	0	0	8	0	267	462	44	817
보험연금	5	0	0	1	0	134	150	0	290
기타금융	38	7	0	41	1	270	401	0	758
정부	39	4	0	1	20	122	64	0	251
기업	0	0	0	0	0	0	0	0	0
가계	0	0	0	0	0	0	0	0	0
국외	9	0	0	0	0	0	0	0	9
합계	156	26	0	75	30	1,767	2,192	64	4,310

<그림 5>를 보면 현금 및 예금과 대칭적인 대출금의 “채권자-채무자” 관계 구도가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net exposure를 보면 현금 및 예금에서 순자산 부문인 파란색 원으로 표시되었던 가계와 기업이 대출금에서는 순부채 부문인 붉은색 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금 및 예금에서 순부채 부문인 붉은색 원으로 표시되었던 은행과 비은행은 대출금에서는

순자산 부문인 파란색 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대출금의 자금흐름 방향은 현금 및 예금과 반대로 은행 및 비은행 부문에서 가계 및 기업 부문으로 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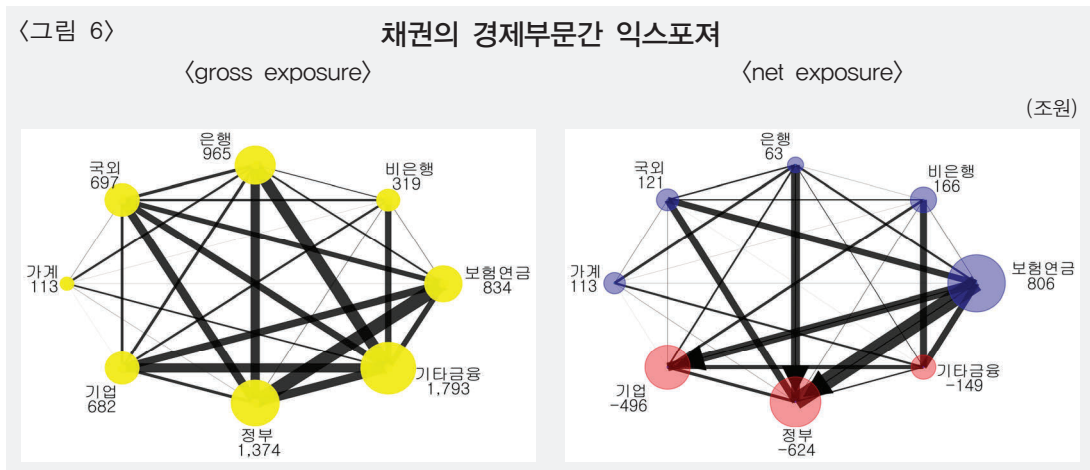
다. 채권

채권의 상세자금순환표는 현금 및 예금, 대출금에 비해 보다 복잡한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채권의 경우 채권의 발행자인 동시에 투자자 역할을 하는 경제부문이 많기 때문이다. <표 3>을 보면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녹색 셀의 분포가 <표 1>과 <표 2>에 비해 많이 분산된 모습이며, 이중 “보험연금-정부” 333조원, “은행-정부” 196조원, “보험연금-기업” 178조원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

〈표 3〉 채권 상세자금순환표 (조원)

채권자 \ 채무자	은행	비은행	보험연금	기타금융	정부	기업	가계	국외	합계
은행	102	10	0	131	196	52	0	23	514
비은행	13	4	1	144	9	55	0	16	242
보험연금	44	9	3	129	333	178	0	125	820
기타금융	145	7	3	294	120	172	0	81	822
정부	22	1	0	91	163	67	0	31	375
기업	17	1	2	57	6	4	0	5	93
가계	54	2	3	42	4	1	0	6	113
국외	54	42	1	83	169	60	0	0	409
합계	451	76	14	971	999	589	0	288	3,388

<그림 6>에서도 네트워크 관계가 이전보다 복잡하게 나타나 각 경제부문이 채권자이자 채무자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gross exposure와 net exposure를 비교해 보면 “은행-기타금융” 부문이 현금 및 예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자산 부채가 상계되면서 net exposure의 부문간 연결선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기타금융에 소속된 투자펀드가 은행채에 투자하고 있는 동시에 은행들이 중앙은행 발행 채권(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외기타금융” 부문 역시 net exposure 기준으로는 부문간 연결선이 사라지는데, 이는 국외 부문이 중앙은행 발행 채권(통화안정증권)을 투자하고 있는 동시에 국내 투자펀드가 국외 부문 발행 채권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표 3>과 <그림 6>을 통해 채권시장에서 가장 큰 자금흐름은 보험연금 부문이 정부 발행 채권에 투자하는 방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보험 및 연금 준비금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은 채권과 반대로 “채권자-채무자” 구도가 매우 간단하다. <표 4>에서 보면 “가계-보험연금” 조합이 1,498조원으로 자금순환표 상의 전체 보험 및 연금 준비금 1,568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7>을 보면 다른 금융상품들과 달리 여타 경제 부문간 익스포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가계에서 보험연금 부문으로의 자금흐름만이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4〉 보험 및 연금 준비금 상세자금순환표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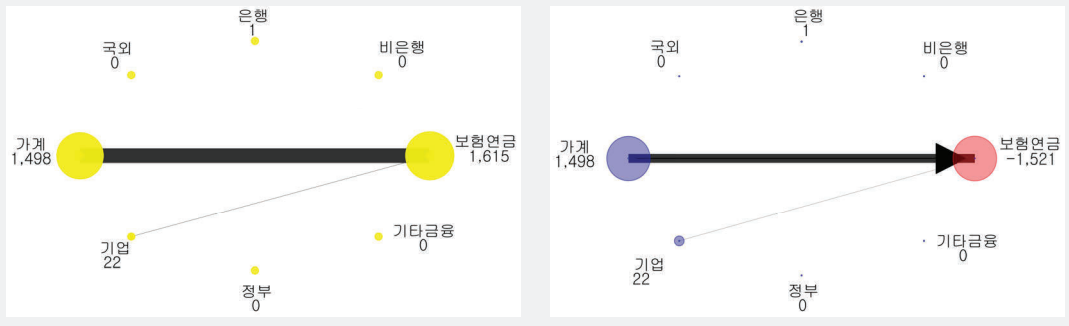
채권자 \ 채무자	채무자								
	은행	비은행	보험연금	기타금융	정부	기업	가계	국외	합계
은행	0	0	1	0	0	0	0	0	1
비은행	0	0	0	0	0	0	0	0	0
보험연금	0	0	47	0	0	0	0	0	47
기타금융	0	0	0	0	0	0	0	0	0
정부	0	0	0	0	0	0	0	0	0
기업	0	0	22	0	0	0	0	0	22
가계	0	0	1,498	0	0	0	0	0	1,498
국외	0	0	0	0	0	0	0	0	0
합계	0	0	1,568	0	0	0	0	0	1,568

〈그림 7〉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의 경제부문간 상호익스포저

〈gross exposure〉

〈net exposure〉

(조원)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규모, ρ 는 총부채를 초과하는 자산 규모로, 각각 $\sum_{j=1}^m y_{ij} + \varepsilon_i = t_i$

과 $\sum_{i=1}^m y_{ij} + \rho_j = t_j$ 을 만족한다. 따라서 부문 k 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할 경우에

$\varepsilon_k = 0$ 이고 $\rho_k = t_k - \sum_{i=1}^m y_{ik}$ 이 된다. 반대인 경우에는 $\varepsilon_k = t_k - \sum_{j=1}^m y_{kj}$ 이고 $\rho_k = 0$ 이 된다.

상세자금순환표가 산업연관표 형태로 변환되면 다음과 같이 투입계수행렬 C 를 정의한다.

$$C = \begin{bmatrix} c_{은행,은행} & c_{은행,비은행} & \cdots & c_{은행,국외}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c_{국외,은행} & c_{국외,비은행} & \cdots & c_{국외,국외} \end{bmatrix} = \begin{bmatrix} \frac{y_{은행,은행}}{t_{은행}} & \frac{y_{은행,비은행}}{t_{비은행}} & \cdots & \frac{y_{은행,국외}}{t_{국외}}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frac{y_{국외,은행}}{t_{은행}} & \frac{y_{국외,비은행}}{t_{비은행}} & \cdots & \frac{y_{국외,국외}}{t_{국외}} \end{bmatrix}$$

그러면 산업연관표 구조 및 투입계수행렬 정의에 따라 $Y + \varepsilon = T$, $Y = CT$ 이므로 $CT + \varepsilon = T$ 이 되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T = (I - C)^{-1} \varepsilon$$

여기서 $\Gamma = (I - C)^{-1}$ 가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 matrix)이라 불리는 유발계수행렬이다. $(I - C)^{-1} = I + C + C^2 + C^3 + \cdots$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유발계수행렬 Γ 의 특정 셀 값 γ_{ij} 는 부문 i 의 자금조달 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부문 j 의 자금조달 단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발계수를 통해 자금조달 수요 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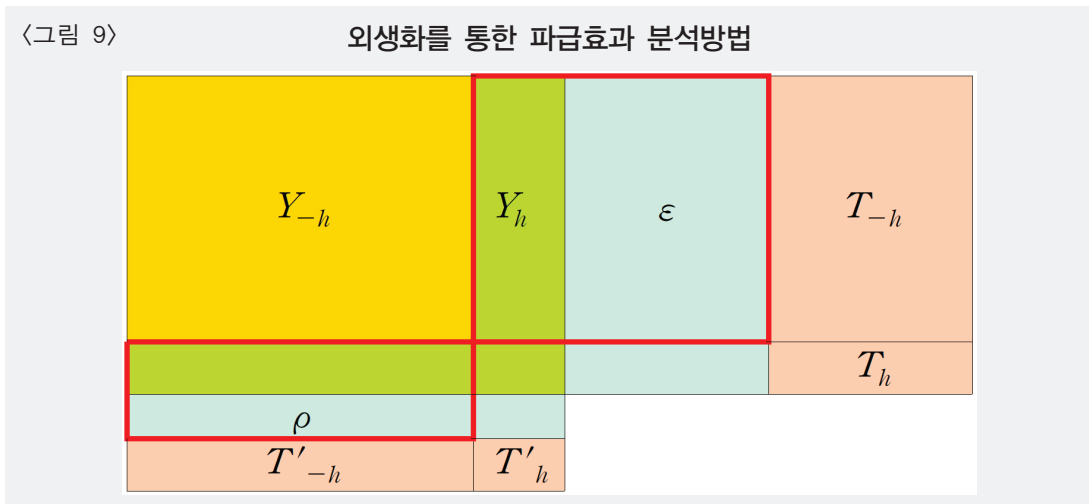
한편 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경제부문간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부문 평균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 영향력계수(power of influence)와 감응도계수(sensitivity of dispersion)이다.

$$p_j = \frac{\sum_{i=1}^m \gamma_{ij}}{\frac{1}{m} \sum_{i=1}^m \sum_{j=1}^m \gamma_{ij}}, \quad s_i = \frac{\sum_{j=1}^m \gamma_{ij}}{\frac{1}{m} \sum_{i=1}^m \sum_{j=1}^m \gamma_{ij}}$$

여기서 영향력계수 p_j 는 부문 j 의 자금조달 수요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자금조달 수요를 합한 열합계를 전부문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영향력계수는 특정 부문의 자금조달 수요가 여타 모든 부문의 자금조달 수요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상대적 정도를 나타낸다. 반면 감응도계수 s_i 는 모든 부문의 자금조달 수요가 한 단위씩 증가했을 때 부문 i 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자금조달 수요를 합한 행합계를 전부문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감응도계수는 특정 부문의 자금조달 수요가 여타 모든 부문의 자금조달 수요로부터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의 상대적 정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특정 부문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문의 행과 열을 내생부문에서 제외하여 외생부문으로 다루는 형태로 표를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9>는 원래 상세자금순환표 Y 에서 외생부문 h 의 행과 열을 제외하여 Y_{-h} 를 구성하고, 제외된 행과 열은 빨간선으로 표시된 외생부문에 포함시킨 형태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전체 부문의 투입계수행렬 C 도 외생화한 부문 h 를 제외한 부문의 투입계수행렬인 C_{-h} 와 외생화 부문 h 의 투입계수벡터인 C_h 로 분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begin{aligned}
 Y_{-h} + Y_h + \varepsilon &= T_{-h} \\
 C_{-h}T_{-h} + C_hT_h + \varepsilon &= T_{-h} \\
 T_{-h} &= (I - C_{-h})^{-1}(\varepsilon + C_hT_h)
 \end{aligned}$$

따라서 $(I - C_{-h})^{-1}C_hT_h$ 가 바로 외생화한 부문 h 의 파급효과계수가 된다.

2. 분석결과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 분석은 II장에서 보여준 2021년 말 현금 및 예금, 대출금, 채권, 보험 및 연금 등 4개 금융상품에 대한 상세자금순환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5>는 4개 금융상품의 상세자금순환표를 합하고 각 경제부문의 전체 금융상품 기준 금융자산 및 부채 정보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표 형태로 변환한 표이다. 예를 들어 <표 5>에서 빨간선으로 표시한 기업의 금융부채 구성내역을 보면, 기업이 가계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1조원으로 값이 작아 II장의 네트워크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희미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선으로 표시될 것이다.

<표 5> 산업연관표 형태로 변환한 상세자금순환표¹⁾ (조원)

채무 \ 채권	은행	비은행	보험 연금	기타 금융	정부	기업	가계	국외	ε	T
은행	140	25	2	334	204	1,026	1,114	44	495	3,384
비은행	211	27	1	381	9	322	462	60	244	1,717
보험 연금	176	41	50	144	333	312	150	125	505	1,835
기타 금융	351	100	4	494	121	441	401	81	1,421	3,414
정부	234	25	0	176	183	189	64	31	1,311	2,214
기업	633	253	24	115	6	4	0	5	5,646	6,686
가계	914	926	1,502	301	101	1	0	6	1,174	4,924
국외	96	42	1	92	169	60	0	0	2,116	2,577
ρ	629	279	251	1,377	1,089	4,331	2,733	2,224		
T'	3,384	1,717	1,835	3,414	2,214	6,686	4,924	2,577		

주 : 1) 2021년말 잔액 기준이며, 상세자금순환표 부분은 4개 금융상품의 합으로 구성

다음 <표 6>은 <표 5>로부터 도출한 유발계수행렬이다. 빨간선으로 표시한 기업 부문의 유발계수를 보면 기업에 대한 가계의 영향이 0.21로, 자부문을 제외하면 은행 다음으로 높다. 이것은 자금조달 수요 파급과정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가 발생하면 기업은 1차적으로 은행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은행은 다시 가계, 기업, 기타금융, 비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비은행은 다시 가계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이러한 파급과정이 계속되면서 가계의 간접효과가 더해져 기업의 자금조

달에 대한 가계의 영향이 커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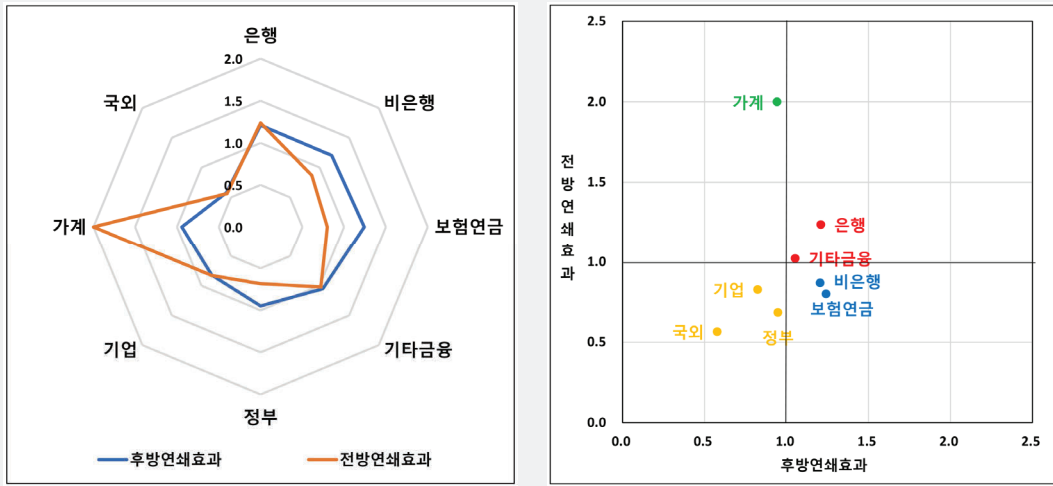
〈표 6〉 유발계수행렬

채무 채권	은행	비은행	보험 연금	기타 금융	정부	기업	가계	국외	행 합계	감응도 계수
은행	1.27	0.27	0.29	0.25	0.21	0.24	0.34	0.05	2.94	1.24
비은행	0.18	1.15	0.15	0.20	0.07	0.11	0.17	0.04	2.07	0.87
보험 연금	0.14	0.10	1.10	0.11	0.21	0.09	0.09	0.06	1.90	0.80
기타 금융	0.25	0.21	0.16	1.27	0.14	0.14	0.19	0.06	2.43	1.02
정부	0.13	0.07	0.05	0.10	1.12	0.06	0.06	0.02	1.63	0.68
기업	0.27	0.23	0.10	0.12	0.06	1.07	0.10	0.02	1.97	0.83
가계	0.58	0.79	1.08	0.39	0.33	0.21	1.27	0.10	4.76	2.00
국외	0.06	0.05	0.02	0.06	0.10	0.03	0.02	1.01	1.34	0.56
열합계	2.88	2.87	2.95	2.51	2.26	1.96	2.24	1.37	19.04	8.00
영향력 계수	1.21	1.20	1.24	1.05	0.95	0.82	0.94	0.58	8.00	

<그림 10>에서 경제부문별 전·후방연쇄효과의 분포를 보면, 가계의 전방연쇄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가계가 자금공급 주체로서 다른 부문의 자금조달 수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후방연쇄효과, 즉 다른 부문의 자금조달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나타나며, 국외는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가장 작게 나타난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후방연쇄효과가 큰 모습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자금중개 주체로서 다른 부문의 자금조달 수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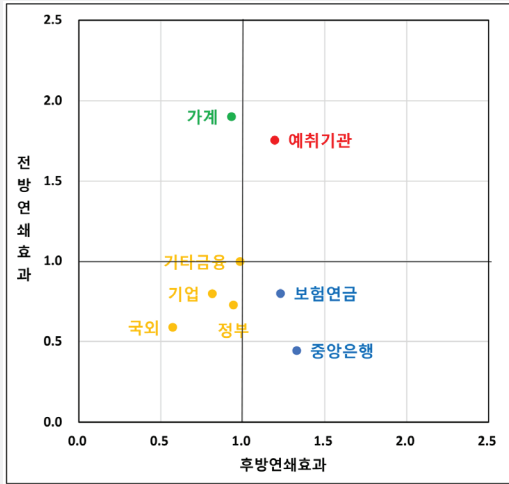
경제부문별 전·후방연쇄효과 분포



한편 부문분류를 달리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먼저 금융기관의 부문분류를 달리하여 은행과 비은행을 예금취급기관으로 합하고 중앙은행을 기타금융에서 분리한 결과 <그림 11>과 같이 중앙은행은 후방연쇄효과가 큰 반면 전방연쇄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문의 자금조달 수요에 반응하기 보다는 자금조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기업을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나누어 본 결과, <그림 12>에서 후방연쇄효과는 공기업이, 전방연쇄효과는 민간기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은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 조달액 대비 4개 금융상품 자금조달 비중이 공기업에 비해 작다. 따라서 주식 보유에 대한 상세정보가 추가된다면 동일한 분석 방법론에서 민간기업의 후방연쇄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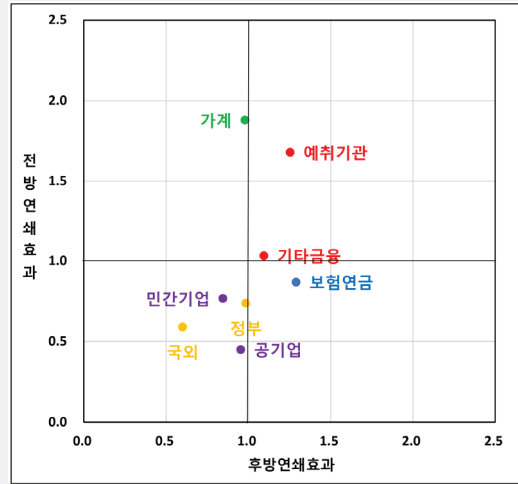
<그림 11>

중앙은행과 예취기관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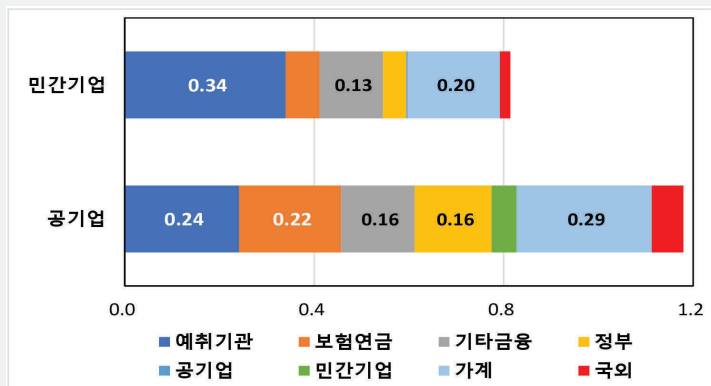
공기업과 민간기업



다음으로 특정 부문의 파급효과를 외생화 과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림 13>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파급효과를 각각 외생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공기업의 자금조달 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 가계, 예금취급기관, 보험연금 등 여타 부문에 총 1.18 단위의 자금조달 수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예금취급기관, 가계, 기타금융 등 여타 부문에 총 0.81 단위의 자금조달 수요를 유발하였다. 공기업은 유리한 여건에서 높은 신용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으므로 채무성 금융상품 시장 안에서 민간기업보다 다른 부문에 자금조달을 유발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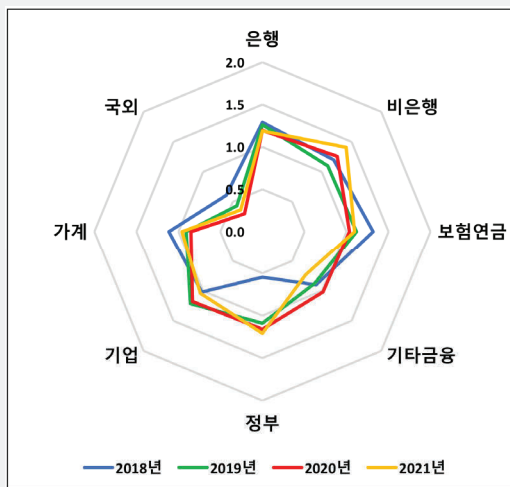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파급효과



지금까지 2021년말 잔액표를 기준으로 구조적 특징을 살펴 보았는데, 거래표를 이용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4>와 <그림 15>를 보면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정부와 비은행의 전후방연쇄효과가 최근 들어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의 경우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하는 한편 채권 투자, 정부용자로 운용한 자금의 규모도 커지면서 전방과 후방으로 모두 영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도 특히 2021년에 가계 및 기업 예금으로 조달한 규모 뿐만 아니라 가계 및 기업 대출로 운용한 자금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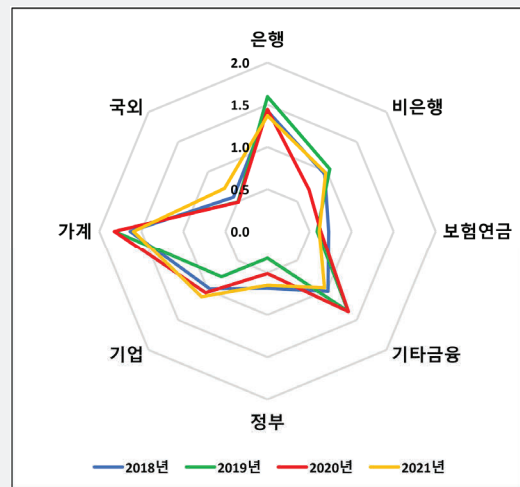
<그림 14>

후방연쇄효과



<그림 15>

전방연쇄효과



IV.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본고에서는 상세자금순환표 시험편제 결과를 소개하고 네트워크 분석 및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통해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을 측정해 보았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현금 및 예금과 대출금은 은행·비은행과 가계·기업 간에 익스포져 비중이 높다는 유사성을 보이는 가운데 자금의 흐름은 서로 반대인 대칭적인 양상을 보였다. 채권은 경제부문이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경우가 많아 현금 및 예금, 대출금에 비해 경제부문간 익스포져 구조가 복잡한 반면, 보험 및 연금 준비금은 가계와 보험연금간 익스포져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4개 금융상품을 종합하여 직·간접 파급효과까지 감안하여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을 분석해 본 결과 금융기관은 자금 중개자로서 다른 부문의 자금조달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계는 자금 공급자로서 다른 부문의 자금조달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성 금융상품에 한해서는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유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세자금순환표는 자금흐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미시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 자금순환표의 정합성을 제고해주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반면 적시성이 낮고 주식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 식별이 어려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작성이 어려워 이러한 금융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기업이나 국외 부문을 매개로 한 연계구조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행 상세자금순환표도 기존 자금순환표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부문간 자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세지도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도를 활용하면 자금흐름의 전반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상호연관관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시계열이 축적되면 자금흐름에 대한 연계구조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상세자금순환표를 미시데이터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부문간 자금흐름의 구조적 특징 및 연관관계를 좀더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통계의 유용성 및 정합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세자금순환표의 작성 시점 및 주기의 속보성을 제고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세자금순환표의 통계로서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예금, 대출금, 채권 등 일부 주요 채무성 금융상품에 대한 상세자금순환표의 공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김성준, 이은국 (2017), “상세자금순환통계 관련 국제기구 표준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국민계정리뷰, 2017년 제2호.
- 정유성, 고승환 (2011), “상세자금순환표의 의의와 작성방법,” 국민계정리뷰, 2011년 제1호.
- 최유진 (2019), “상세자금순환표의 작성 의의 및 개발 계획,” 국민계정리뷰, 2019년 제1호.
- 한국은행 (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
- IMF and FSB (2016), “Second Phase of the G20 Data Gaps Initiative (DGI-2) First Progress Report,” IMF and FSB Secretariat.
- OECD (2017), “G20 Thematic Workshop on Institutional Sector Accounts,” OECD Manuscript.
- Okuma, Ryoich (2013), “Sectoral Interlinkages in Balance Sheet Approach,” BIS IFC Bulletin, No. 36, pp. 387-404.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¹⁾ 관련 국제적 논의내용

최정윤*

GDP를 비롯한 국민계정 통계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이용되어 왔다. 국민계정 통계는 한 국가경제 내 다양한 규칙, 상호관계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서로간의 연결을 일관된 체계하에 나타낸다는 점에서 우월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총량지표로서의 국민계정 통계는 각기 다른 개별 경제주체들이 직면하는 경제상황을 복합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이러한 한계가 더욱 부각되면서, 집단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 2011년, OECD와 Eurostat은 국민계정체계에 부합하는 가계그룹별 불균형 측정을 위해 전문가그룹(EG DNA)을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국민계정과 미시자료를 결합한 가계그룹별 소득·소비·저축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가계 부문 분배 정보는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국제적 통계개선 사업인 DGI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는 등 해당 통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국민계정체계 내 가계부문 분배정보는 소득수준, 연령 등 다양한 특성정보별 가계 경제상황의 변화를 체계적,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분석을 위한 데이터 영역을 한층 더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분배 관련 기존 미시통계에 비해 국제비교가 용이하다는 이점도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제적 통계개선 노력에 동참하고 GDP통계의 유용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실험적 통계로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계정체계에 부합하는 가계 분배정보(이하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방법론 개발, 전문가 의견수렴 등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분배국민소득반 과장(e-mail: blink@bok.or.kr, phone: 02-759-5358)

1) 해당 통계의 공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고 다양하게 지칭(OECD-「Household distributional results in line with national accounts」, Eurostat-「Distributional national account estimates for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등)되고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으로 명명

- I. 배경
- II. 개발 경과
- III. 통계 작성방법 및 방법론상 주요 이슈
- IV. 통계의 활용
- V. 시사점

I. 배경

1930년대 사이먼 쿠즈네츠가 GDP의 개념을 고안한 이래, GDP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이용되어 왔다. 총량지표로서의 GDP는 일국 경제상황을 시간에 걸쳐 비교하거나 국가간 비교하는 데 유용한 반면, 개별 경제주체들이 직면하는 경제 상황을 복합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구성원의 경제적 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량지표로부터 도출되는 평균소득이 아닌, 가계 관점의 그룹별 정보가 보다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특히 GDP 통계의 취약점과 보완 과제를 제시한 스티글리츠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서(Stiglitz-Sen-Fitoussi Report)²⁾ 이후 통계 개선 논의는 더욱 구체화 되었다. 스티글리츠위원회는 새로운 통계지표에 대한 12가지 권고사항 중 하나로 소득·소비·부의 분배에 집중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가급적 소득·소비·부의 총량지표와 각각의 분배지표가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통계의 현실화를 위해 통계 생산시 직면하는 개념, 정의 및 실무적 문제를 해결할 협의체를 결성하였다. 이에, 지난 2011년 OECD와 Eurostat³⁾ 등이 주축이 되어 국민계정체계에 부합하는 불균형 측정을 위해 전문가그룹, EG DNA(Expert Group on Disparitie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가 출범하였다. 이후 EG DNA는 국민계정체계 내에 가계그룹별 분배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고 있다. 그간 수 차례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각국이 실제 시험편제에 참여하고 이를 국가간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본 자료에서는 EG DNA가 주도하는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내용을 살펴본다.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의 개발 경과를 살펴보고 III장에서 EG DNA의 방법론에 근거한 통계 작성방법과 함께 방법론상의 핵심 이슈에 대해 정리한다. IV장에서는 동 방법론을 이용한 주요국의 작성결과를 통해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이 경제적 불균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 V장에서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2) Joseph E. Stiglitz, Amartya Sen and Jean-Paul Fitoussi(2009)

3) 다만, 2014년 OECD가 동 작업을 모두 이어받음으로써 표면적으로는 OECD가 단독 추진주체가 되었음

II. 개발 경과

1. 미시-거시 통계간 연결

EG DNA는 가계 분배 통계 작성시 경제이론에 부합하고 국가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국민계정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미시자료(예: 가계동향조사 등)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사실 EG DNA 이전부터 미시통계와 거시통계 간에 작성방법이나 이용하는 기초자료가 달라 동일한 변수⁴⁾라 하더라도 실제 통계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양 통계를 연계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력이 있어왔다.

1996년 미시소득 통계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결성된 캔버라그룹은 2001년 최종보고서에 소득 구성요소를 일부 변경함으로써 국민계정 총합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득 개념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미시소득 통계의 국제비교 및 SNA 통계 등과의 비교작업을 수행해 온 LIS(Luxembourg Income Study)⁵⁾의 연구결과에 기초를 두고 있다. LIS는 미시-거시 통계의 연계와 관련한 방법론에 최초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8SNA도 ‘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정의 및 분류가 가능한 한 미시 및 거시 수준에서 동일할 수 있도록 두 종류의 자료가 상호조정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등 미시통계와의 연계 분석 및 상호 조화를 강조하였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양 통계를 연계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졌는데, 초기에는 세부 구성요소간 조정을 통해 작성 통계를 평가하고 추계방법을 개선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여러 시도 결과, 개념상 차이 등 양자간 차이가 규명되는 항목들을 제외하면 차이 정도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미시-거시통계의 연계 접근방식을 각 통계의 정도 제고 뿐 아니라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확충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임금은 두 통계간 높은 일치도를 보여 분배의 불균등 분석 자료로서의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미시-거시통계 연계 관련 연구는 세부 수준에서의 개념적 연결, 불일치 야기 원인 탐구, 불일치 조정 방법론 모색 등으로 더욱 구

4) 예컨대 거시통계에서의 소득은 생산 측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총액에 대응하여 여러 경제주체에 분배되는 총량으로, 미시통계에서의 소득은 개인 입장에서 자신에게 직접적 편익을 주는 수입으로 정의

5) 1983년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이래 미시소득 통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국제비교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체화 되었다.

2.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 대두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시-거시 연계 통계 개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의 정책 패러다임이 금융위기 이전 성장 중심에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 즉, 가계 관점을 중시하고 개인과 사회의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통계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부문 통계의 가용성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국민계정 총계와 일치하는 분배지표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국민계정과 미시자료의 연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EG DNA이며 다른 하나는 DINA(Distributional National Accounts)이다. EG DNA와 DINA는 각기 다른 배경⁶⁾으로 독자적인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국민계정과 결합한 미시정보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에 유용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공통의 동인이 있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가계분배계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 이후 다양한 경제주체간 충격과 위험 전달 메커니즘을 토대로 한 금융안정 분석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미시통계와 거시통계의 연계가 긴요하였다. 금융불안예의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2009년 G20국가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한 회의에서 IMF와 FSB 주도의 국제적 통계 개선사업 DGI(Data Gaps Initiative)가 출범하였다.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어려웠다는 반성에 따라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고안이 마련되었다. 그중에는 외부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취약성 모니터링을 위해 가계부문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위험평가를 위해 거시정보와 미시정보의 병합으로 부문별 분배 정보를 생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결론은 스티글리츠위원회 보고서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DGI는 가계부문 분배 정보를 정기적으로, 적시에 생산할 것, 이를 위해 OECD가 국민계정과 분배정보의 연계작업을 주도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6) <참고 1> EG DNA와 DINA의 비교' 참조

3. ‘가계그룹별 소득·소비·저축’ 통계 개발을 위한 EG DNA의 활동

EG DNA는 최초 과제로 가계그룹별 경제적 여건 비교, 측정 및 이와 관련된 지표 개발 가능성 검토 등을 내세웠다. 가계부문의 실제 경제여건을 보여주고자 소득·소비·부와 같은 물질적 복지(material well-being)에 관한 자료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며, 부(wealth)보다는 소득과 소비 관련 지표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2011~13년중에는 최초 시험편제를 시도하면서 각국의 미시-거시 통계간 정합성을 비교하고, 미시-거시통계 연계의 기초방법론 개발 작업을 추진하였다. 2015~17년중 2차 시험편제를 거치면서 방법론을 보다 정교히 하는 한편, 추계방법상의 주요 이슈에 대해 국가간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2차 시험편제 종료 후에는 통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템플릿을 마련하였다. 2017년까지 주로 방법론을 개발하고 동 방법론을 이용한 회원국들의 시험편제를 거치는 과정이었다면 2018~21년중에는 통계의 강건성을 검증하고 최근 연도 중심의 정기적 분배지표 산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0년에는 3차 시험편제의 결과물을 OECD와 Eurostat의 통계DB에 실험적 통계⁷⁾로 공표하기도 하였다. 최근까지도 EG DNA는 참여국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정보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4. ‘가계그룹별 부의 분배’ 통계 개발 추진

그간 EG DNA는 ‘소득·소비·저축의 분배’ 통계 개발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의 분배⁸⁾’ 통계 편제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가계 소득과 지출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소득과 지출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는 상대적으로 조사가 미진하거나, 별도의 조사체계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계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소득·소비·부의 분배에 관한 포괄적인 통계는 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 및 연금제도의 적정성 평가, 마이크로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개별 가구의 행태 예측, 경제적 성과

7)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시의성 높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작성 이후 신뢰성 및 타당성의 확인·점검이 필요한 통계

8) DGI의 3단계 사업인 New DGI의 과제에는 가계부문 ‘소득, 소비 및 저축의 분배(Income, Consumption, and Saving Distribution)’ 외에 ‘부의 분배(Wealth Distribution)’ 통계도 포함

분배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이미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부의 분배계정 개발에 상당한 진척을 보인 바 있으며, OECD는 부의 분배계정 개발을 유럽 이외의 국가까지 확대하고자 EG DHW(Expert Group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를 2023.3~4월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OECD는 유럽중앙은행의 전문가그룹인 EG DWA(European Central Bank's Expert Group on Distributional Wealth Accounts)와 협력하여 국제 표준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1〉

EG DNA와 DINA의 비교

DINA는 국민계정과 미시통계간 연계를 통해 보다 개선된 분배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EG DNA와 기본 방법론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 다만 세부 기술적 측면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각각의 배경 차이에 기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EG DNA의 활동은 통계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한 거시 및 미시 통계의 개선 연구에서 시작되어 정책기반이 되는 새로운 통계 작성 목적의 국제협력사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와 달리 DINA는 피케티 등 불평등 역학(inequality dynamics) 분야의 연구자들이 가계소득중 고소득층에 대한 통계 정도를 높이고자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기존 미시통계가 고소득층을 과소포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를 대신하기 위한 과세자료 이용 방법론 개발에 집중하였다.

EG DNA와 DINA는 세부목표에도 차이가 있는데 EG DNA가 포괄적·체계적으로 가계 부문을 분석하고자 국민계정체계와 동일한 체계하에 각종 수치를 생산하는 반면 DINA는 보다 세분화된 수준(백분위, 상위 0.1% 등)으로 분배결과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다. 또 EG DNA가 가구를 기본 분석단위로 하는 반면 DINA는 20세 이상 개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본다. DINA는 소득·부의 상위 분위 비중을 중시하여 과세자료로 균질한 결과를 얻는데 역점을 두었다. 작업의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는데 DINA는 당초부터 소득과 부에 관한 연구를 동시에 시작하였으며 EG DNA는 우선 소득·소비·저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작업하다가 최근에는 부의 분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EG DNA와 DINA는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나 별개의 목적에서 독자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계정과 미시통계를 연계한 분배통계가 적용과정과 기초자료의 품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두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력해 방법론 모색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III. 통계 작성방법 및 방법론상 주요 이슈

1. 추계방법 개요

본 절에서는 EG DNA가 각국에 제시한 가계분배계정 작성 가이드라인⁹⁾을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가계분배계정 작성을 위한 절차는 총 5단계로 구성된다.

〈표 1〉 국민계정상 가계그룹별 소득·소비 측정 방법

Step1. 국민계정 총액 조정
Step2. 국민계정 항목에 대응되는 미시자료 항목 결정
Step3. 미시자료에서 누락된 항목을 의제처리(imputation)하고, 조정된 국민계정에 맞게 미시자료 총액을 조정
Step4. 가계그룹별 배분
Step5. 가계그룹별 분석을 위한 지표 도출

자료 : OECD(2020)

첫 번째 단계로, 미시자료와의 일관성을 위해 국민계정 가계부문의 세부 포괄범위와 총액을 조정한다. 통상 가계소득 관련 미시자료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와 의무복무군인, 재소자 등 시설수용가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계정과 해당 미시자료간 포괄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계정에서 이들 가구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차감할 필요가 있다.

2단계에서는 국민계정에 대응되는 미시자료 항목을 결정한다. 국민계정 항목과 직접 대응되는 미시자료 항목이 있고 직접 연결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 동 미시자료 항목은 해당 국민계정 항목에 직접 연결한다. 예를 들어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 항목은 미시자료(예: 가

9) EG DNA는 동 가이드라인 외에 국제기구 등이 개별국가의 통계를 일괄 추계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편제방법(Centralized Approach)을 추가로 마련하여 두 가지 방법론의 개발·개선을 동시에 진행

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소득과 개념적으로 맞닿아 있으므로 양자를 연결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직접 대응되는 미시자료가 없거나, 직접 연결이 적절치 않은 항목에 대해 간접적인 정보로 의제처리(imputation)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간접대체법, 외생대체법, 비례 배분법 등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간접대체법은 대상항목이 국민계정상의 특정 요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다른 구성요소의 배분결과를 누락된 정보의 대응치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외생대체법은 개인 및 가구 수준에서 이용가능한 별도의 외생자료로 배분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간접대체법이나 외생대체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이용 가능한 정보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이 주요 배분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비례배분법을 이용한다.

이후에는 직접대응한 항목에 대해 미시자료 항목 총액과 대응되는 국민계정 항목 총액이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이상적으로는 미시자료 항목 총액과 국민계정 항목 총액이 일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갭이 발생하는데, 갭을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원인에 부합하도록 갭을 할당한다. Eurostat은 갭 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들은 기존 미시자료상의 분배구조를 유지하는 방법과 변경하는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갭을 모든 가구에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는 비례할당법(Proportional allocation)으로, 항목별로 포괄비율(CR, Coverage Ratio, 미시자료 총액/조정된 국민계정 총액)의 역수를 미시자료의 모든 가구에 가구별로 일괄 곱하여 갭을 제거한다. 비례할당법이 미시자료의 분배구조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면 파레토조정법은 고소득분위에 더 많은 갭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즉, 소득분포의 상위 꼬리부분이 파레토분포¹⁰⁾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미시자료를 조정한다. 소득 5분위별 점유율 할당법¹¹⁾도 미시자료의 분배구조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을 항목별로 적절히 조합하는 결합접근법도 사용할 수 있다.

10)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고안한 확률모형으로 사회 부의 많은 부분을 소수의 사람들이 소유하는 상황 설명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형상(shape) 모수인 α 와 위치(position) 모수인 β 에 의하여 형태가 결정

$$P(X > x) = \begin{cases} \left(\frac{\beta}{x}\right)^\alpha & x \geq \beta \\ 1 & x < \beta \end{cases}$$

11) 고소득층(저소득층)에 대한 과소 포괄 및 보고를 가정하여 상위(하위) 중심으로 할당(상승 점유율 할당법 : 1, 2, 3, 4, 5분위에 대해 각각 0%, 10%, 20%, 30%, 40% 할당, 하강 점유율 할당법 : 1, 2, 3, 4, 5분위에 대해 각각 40%, 30%, 20%, 10%, 0% 할당)하는 방법

〈표 2〉 미시자료를 국민계정에 연결하는 방법

구분	내용
① 직접대응법	국민계정 항목과 직접 대응되는 미시자료 항목이 있을 경우(그리고 직접 연결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 이를 직접 연결
② 간접대체법	국민계정 항목과 직접 대응되는 미시자료 항목이 없을 경우(또는 직접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국민계정 항목의 배분 결과를 이용
③ 외생대체법	국민계정 항목과 직접 대응되는 미시자료 항목이 없을 경우(또는 직접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사회인구학적 정보 등 별도의 자료를 활용
④ 비례배분법	직접대응법, 간접대체법, 외생대체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체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분

자료 : OECD(2020)

4단계에서는 동 결과를 세부그룹별로 취합한다. 가계그룹별 분석을 위해 소득수준,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등 미시자료상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EG DNA는 소득 기준을 가장 우선적인 통계 작성의 목표로 삼고 있다. 추가로 유용성 측면에서 가구구성형태별¹²⁾, 주소득원별¹³⁾ 정보 작성도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 5단계는 가계그룹별 분석을 위해 관련 지표를 도출하는 작업으로 여기에는 최고·최저배율(ratio of highest to lowest), 평균대비배율(ratio to the average),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등이 있다. 최고·최저배율은 그룹별 최저 소득(소비) 대비 최고 소득(소비)의 배율로서 동 배율이 클수록 불균형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평균대비배율은 전체 평균대비 각 그룹별 소득(소비) 배율로서 각 그룹간 소득(소비) 수준을 비교하는 데 적합한 지표이다. 변동계수는 전체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로, 해당 지표값이 클수록 그룹간 소득(소비) 불균형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2. 방법론상 주요 이슈

EG DNA는 이와 같은 방법론 개발로 국가들이 시험편제 할 수 있는 기초여건을 조성하였으나 통계의 품질, 결과의 적정성 면에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12) EG DNA의 가구구성형태별 가계그룹은 65세 미만 성인 1인, 65세 이상 성인 1인, 성인 1인과 어린이 1인 이상, 65세 미만 성인 2인, 65세 이상 성인 1인을 포함한 성인 2인, 성인 2인과 어린이 3인 미만, 성인 2인과 어린이 3인 이상, 기타의 8가지 유형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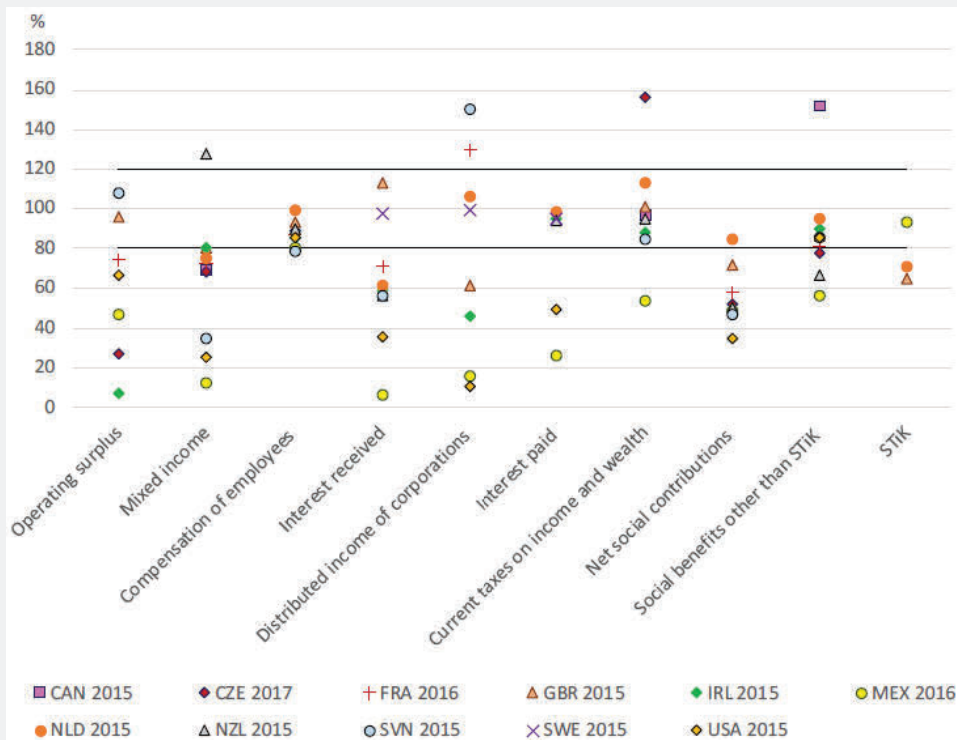
13) EG DNA의 주소득원별 구분은 가구소득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4가지로 구분

우선 미시-거시자료간 매칭 과정에서 통계작성자의 자의적인 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민계정 통계와 개념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미시통계 항목이 없는 경우 개념 및 분류를 조정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미시통계와 직접 연결이 어려워 의제처리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 거시자료와 미시자료의 연결시 통계작성자의 주관에 반영되거나 실제와 다른 가정이 적용될 경우 결과가 크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시통계 항목에 가장 잘 부합하는 미시자료 항목을 이용하더라도 미시자료들이 복수의 출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미시자료간 연결작업을 별도로 수행하여야 하며 연결작업에도 다양한 가정이 개입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각국은 의제처리 모형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미시통계를 도입하는 등 미시-거시 통계간 매칭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시통계와 미시통계 항목을 직접 연결한 경우에도 겹 배분방식의 선택 문제가 남아있다. 겹은 국민계정 총합의 품질, 미시-거시 자료간 개념과 분류 차이에 대한 가정상의 문제, 미시자료상의 각종 오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겹 발생 원인에 부합하는 겹 배분 방식을 이용하여 겹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겹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겹이 크고 겹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울수록 겹 배분 방법에 따른 전체 분배 결과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통계적 강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과 관련하여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시험편제 결과 EG DNA 참여국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재산소득, 자영업자 소득 등에 대한 낮은 포괄비율이었다. 이들 항목들에서 상대적으로 큰 겹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시자료가 고소득층의 소득 누락(undercoverage)이나 과소 보고(underreporting) 문제에 취약한 데 원인이 있으며, 이처럼 누락된 소득이나 부를 조정하기 위해 파레토조정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소득분배의 상위 꼬리 부분에서 소득이 임계값을 초과하는 모든 가구가 파레토분포를 따르도록 미시자료 항목을 조정하면 후 나머지 겹은 모든 가구에 비례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EG DNA는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파레토조정법의 세부 적용방안을 개발중에 있다.

(그림 1) 국가별 주요 소득항목 포괄비율



자료 : OECD(2021)

한편 OECD와 Eurostat은 각기 다른 겹 배분 방법이 결과값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정량화하여 불확실성의 범위를 추정하는 민감도분석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차 시험편제 결과에 대한 Eurostat의 분석에 따르면 겹 배분방식에 따라 불균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Eurostat은 파레토조정법을 모든 소득항목에 적용할 경우 불균등이 과도하게 크게 나타날 수 있으나 고소득분위에 집중된 거래에는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조합하는 결합접근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한다고 결론지었다. Eurostat은 겹을 유발하는 정확한 요인 식별과 그에 맞는 정교한 겹 배분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현재의 추세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하였다. 이에, EG DNA, Eurostat과 각국 담당자들은 향후 국가간 협력으로 더욱 정교화된 방법론 관련 논의를 전개하고, 민감도분석 및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IV. 통계의 활용

본 절에서는 EG DNA가 지난 2020년 발표한 3차 시험편제 결과를 통해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이 경제적 불균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¹⁴⁾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 추계방법상 많은 가정이 적용되고 국가별로 개발 진척 상황이 다르므로 국가간 단순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계분배계정에 포함된 정보를 해석하는 데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1. 소득의 분배

EG DNA는 평균대비배율, 최고·최저배율, 변동계수 등을 통해 사회인구학적 분류중 소득분위 기준에 중점을 두어 소득이나 소비의 불균형 현상을 파악한다. 우선 평균대비배율은 다양한 가계그룹의 평균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나타낸다. EG DNA는 소득의 여러 개념중 처분가능소득¹⁵⁾에 사회적현물이전¹⁶⁾을 고려한 조정처분가능소득에 더 많은 초점을 두어 소득 불균등을 측정한다. <그림 2>에서 대상국가들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조정처분가능소득은 1분위의 경우 전체 평균의 0.3~0.6배, 5분위는 1.5~3.0배로 나타난다. 모든 국가들에서 배율이 1~4분위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5분위에서 이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소득분위의 중간에 위치하는 3분위의 소득은 모든 국가에서 전체 평균소득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4분위 평균소득이 전체 평균소득보다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

가계분배계정의 수치들을 이용하여 각 소득항목별로 소득의 분배를 나누어 분석할 수 있으며, 소득분위가 아닌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도 이러한 분석틀을 적용할 수 있다. 가구 구성형태별로 보면¹⁷⁾ 자료를 제출한 모든 나라에서 65세 미만 성인 1인 가구의 평균소득은

14) OECD 보고서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saving in line with national accounts-Methodology and results from the 2020 collection round(2021)」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해당 통계수치는 OECD와 Eurostat의 통계DB에 수록

15) 각 제도부문이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으로 본원소득잔액에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수혜금 등 순수취 경상이전을 더한 값

16) 정부 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현물이전의 형태로 가계에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예 : 정부의 건강보험 지급액, 무상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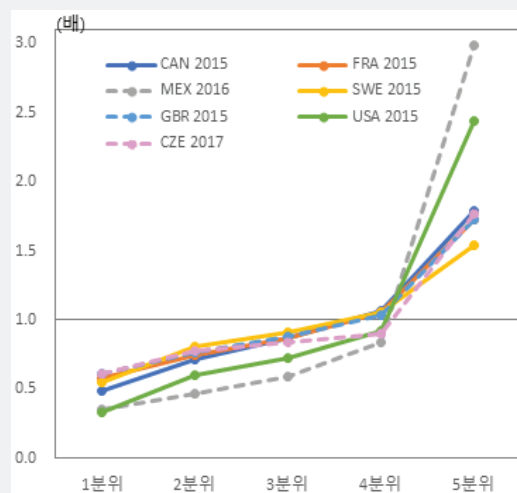
17) OECD(2021)의 AnnexC: Additional graphs and tables, Figure 3 참조

전체 평균 소득을 하회하는 반면, 성인 2인과 어린이 3인 이하로 구성된 가구그룹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전체 평균소득을 상회하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최고·최저배율은 각 국가의 최고와 최저 소득분위간 소득격차를 간명하게 드러낸다. 2015년(예외: 체코 2017년, 멕시코 2016년) 기준 국가별 총조정처분가능소득 최고·최저 배율을 보면 멕시코(8.6배)와 미국(7.4배)이 큰 소득격차를 보인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이보다 낮고,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평균대비배율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며, 변동계수 크기의 국가별 순서와도 일치하였다¹⁸⁾.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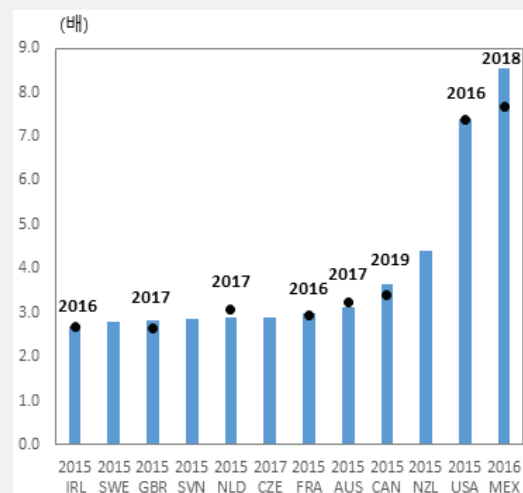
소득분위별 소득의 평균대비배율¹⁾



주 : 1) 균등화 총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자료 : OECD(2021), OECDstat

<그림 3>

소득 최고·최저배율¹⁾²⁾



주 : 1) 균등화 총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2) 막대그래프는 2015년(체코 2017년, 멕시코 2016년),
표식은 최근 연도 수치임
자료 : OECD(2021), OECDstat

그리고 주요 소득 항목별 평균대비배율을 이용하면 경상세, 사회부담금¹⁹⁾, 사회수혜금²⁰⁾, 기타경상이전, 사회적현물이전 등의 순경상이전이 각각의 가계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총조정처분가능소득의 평균대비배율에서 총본원소득의 평균대비배율을 차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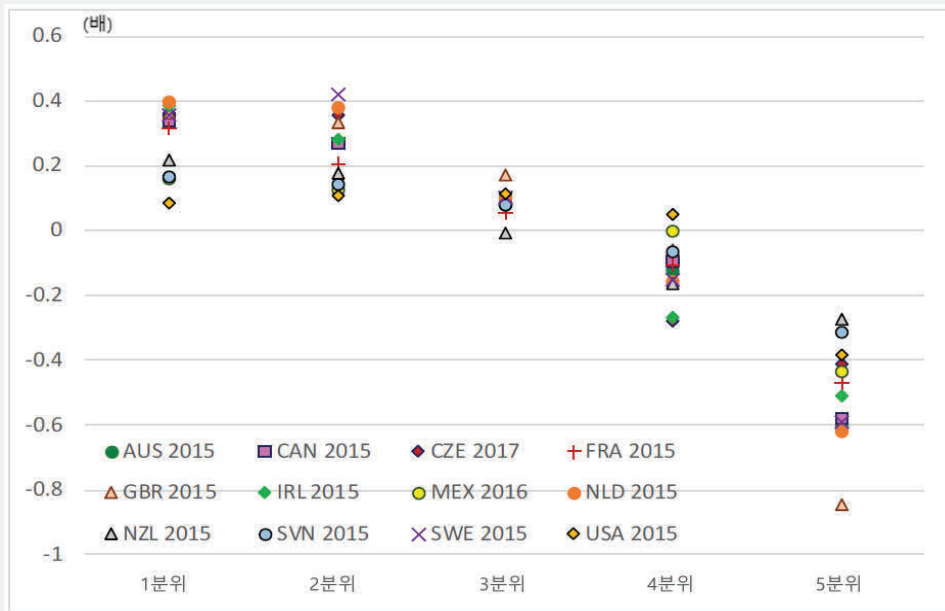
18) OECD(2021)의 Figure 5.3 참조

19) 사회수혜금의 지급에 상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실제 및 의제 부담금으로 피고용자 또는 자영업자나 비취업자 등이 자신을 위해 지불하거나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위해 사회보험기구에 납부하는 금액

20) 가계가 특정한 사건이나 환경에 처할 경우(예: 질병, 실직, 정년 등) 수취하게 되는 경상이전. 사회보장수혜금(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수혜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등), 사회부조수혜금(기초연금 등)으로 구성

면 이는 경상이전으로 소득의 평균대비배율이 변화된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4>에서 보면 모든 국가에서 소득 1분위는 양(+)의 결과를, 소득 5분위는 음(-)의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분위별로 미치는 영향의 크기로 보면 영국의 소득 5분위가 가장 큰 음(-)의 이전 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소득 1분위보다 2분위 가구에 대한 양(+)의 이전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분위의 노인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금 수령 등에서 더 큰 이전 효과를 보는 사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본원소득에 대한 불균형지표와 처분가능소득, 조정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불균형지표를 함께 이용하여 현금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현물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그림 4> 경상이전에 의한 소득분위별 평균대비배율 변동¹⁾



주 : 1) 총조정처분가능소득 평균대비배율 - 총본원소득 평균대비배율
 자료 : OECD(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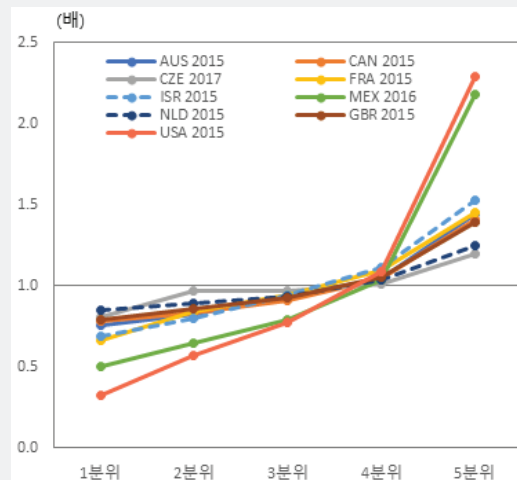
2. 지출의 분배

EG DNA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지출과 관련해서도 최종소비지출에 사회적현물이전을 포함한 실제최종소비에 보다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비는 소득에 비해 분위별 격차가 크지 않다. 시험편제 결과를 국가별로 보면 소득과 동일하게 멕시코와 미국이 불균등도가 높았으나 그 정도는 소득 보다 훨씬 낮았다. 국가별로 실제최종소비의

최고·최저배율을 보면 미국이 가장 높고 다음이 멕시코, 아일랜드 순이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3배를 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최종소비와 최종소비지출의 최고·최저배율을 보면 최종소비지출 기준으로는 슬로베니아가, 실제최종소비 기준으로는 스웨덴의 소비 불균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의 경우 두 지표의 차이가 가장 커 사회적현물이전으로 소비의 불균형이 크게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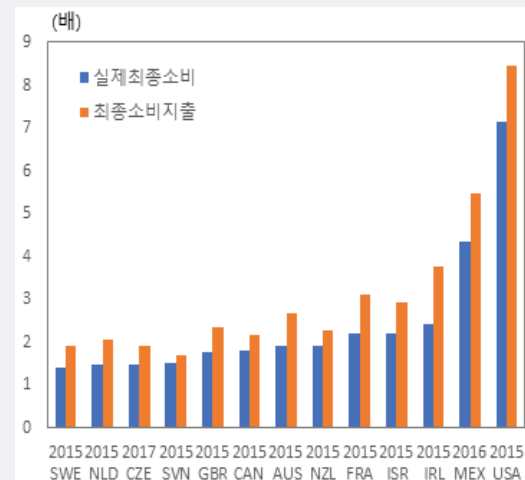
소비항목별 불균등 정도²¹⁾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주류 및 담배, 임대료 및 수도광열, 정보통신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가계시설 및 운영, 의료보건, 교통, 오락, 스포츠 및 문화, 교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실제최종소비 평균대비배율



자료 : OECD(2021), OECDstat

〈그림 6〉
실제최종소비 및 최종소비지출 최고·최저배율



자료 : OECD(2021), OECDstat

3. 저축의 분배

국민계정상 저축은 조정처분가능소득에서 실제최종소비를 차감하고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²²⁾을 반영하여 도출된다. 즉, 전술한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 측정 결과가 모두 반영되고 여기에 연금기금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의 분배 효과가 추가로 반영된다. 측정 결

21) OECD(2021)의 AnnexC: Additional graphs and tables의 8. Relative position of each household group compared to the average, overview for main consumption items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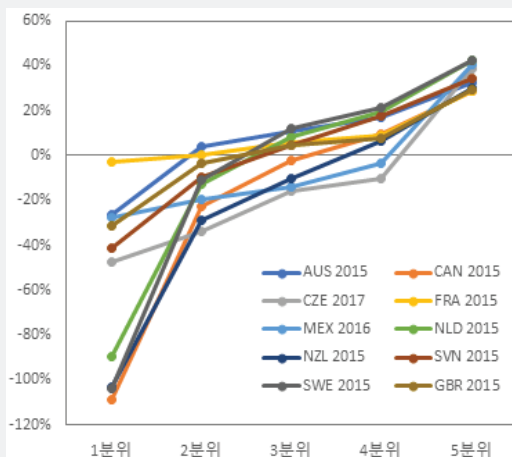
22) 금융계정에서는 민간연금의 준비금을 연금가입자 가계가 소유한 것으로 처리하는 반면 경상계정에서는 연금 납부액 및 수취액을 경상이전으로 계상하면서 이들 두 계정간 발생하는 괴리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조정항목

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총저축)를 보면 이는 소득과 소비의 분포와 다르게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소득 1분위 그룹이 큰 음(-)의 저축률을 기록하고, 소득 2분위 저축률부터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호주는 소득 1분위가 비교적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소득 2분위 그룹부터 양(+)¹⁾의 저축률을 나타내었다. 한편 체코의 경우 5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가 음(-)의 저축률을 보였고, 프랑스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 소득분위별 저축률 격차가 가장 작은 모습을 나타내었다.

한편 소득분위별 저축률은 각 분위의 소득 규모가 다르므로 저축의 절대수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데 <그림 8>을 통해 각 소득분위의 전체 저축에 대한 기여를 파악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1~3분위가 큰 폭의 음(-)의 저축을 시현하면서 전체 저축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캐나다와 체코도 저축률이 낮은 편에 속하였는데 체코의 경우 1~4분위에서 고른 음(-)의 저축을 나타낸 반면 캐나다는 1분위 가구의 음(-)의 저축 규모가 큰 점이 특징적이다. 반대로 높은 저축률을 기록한 국가중 멕시코는 5분위 가구가 저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스웨덴, 네덜란드는 3, 4분위 가구도 상당한 양(+)¹⁾의 저축을 보이고 있는 점이 대조적이다. 가구구성형태별²³⁾로 보면 자료를 제출한 모든 국가에서 65세 미만 성인 2인 가구에서 10% 이상의 고른 저축률을 보였고, 성인 2인과 어린이 3인 이하로 구성된 가구는 모두 양(+)¹⁾의 저축률을 보였다.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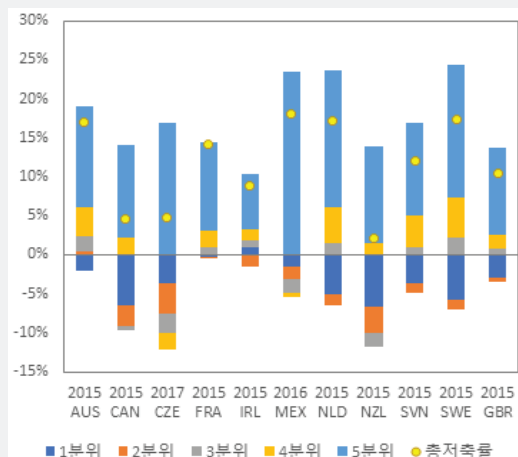
소득분위별 총저축률¹⁾



주 : 1) 총저축/총처분가능소득
자료 : OECD(2021), OECDstat

<그림 8>

가계 총저축률¹⁾의 소득분위별 구성



주 : 1) 총저축/총처분가능소득
자료 : OECD(2021), OECDstat

23) OECD(2021)의 AnnexC: Additional graphs and tables, Figure 16 참조

V. 시사점

이상에서는 가계부문의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고자 진행되어 온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 개발 관련 국제적 논의와 통계 작성방법 및 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은 소득수준, 연령 등 다양한 특성정보별 가계 경제상황의 변화를 체계적,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통계로, 기존의 소득 분배 지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득 분배와 관련한 기존 미시통계와 달리 소득, 소비, 저축으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흐름하에 분배정보를 결합시켰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거시경제지표와 정합성을 갖추도록 작성되므로 GDP 등의 거시지표와 연계한 분석이 가능한 데다, 서베이통계에서 포착되지 않는 최상위층의 분배 결과까지 포함함에 따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영역이 한층 더 확장될 수 있다. 국민계정체계라는 확고한 프레임 하에서 만들어지므로 다른 미시통계들에 비해 국제비교가 용이한 측면도 중요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통계 작성에 여러가지 가정이 적용되고 다양한 경우별로 적합한 방법론의 체계가 아직 확고히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계의 강건성, 국가간 비교가능성 관련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참여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통계작성자에 따른 선택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최대화하는 통계 개선이 요청된다.

최근 EG DNA의 활동목표²⁴⁾는 New DGI 과제의 이행을 위한 참여국 확대, 추계방법 개선 등에 맞춰져 있다. 이에 힘입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가계분배계정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25SNA 개정안에도 가계분배계정 작성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당 통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제적 통계 개선 노력에 동참하고 GDP통계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적 통계로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가계분배계정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소득, 소비, 저축에 대한 분배계정 개발을 1차 목표로 추진하고, 부의 분배계정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법론 개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통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24) <참고 2> EG DNA의 향후 활동 목표' 참조

〈참고 2〉

EG DNA의 향후 활동 목표

최근 EG DNA는 New DGI 과제 이행을 위한 2022~2026년의 운영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였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참여국가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가계분배계정의 국제적 비교 대상 확대를 위한 한 방안으로 Eurostat과 OECD는 미시통계DB인 LIS의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사용해 일괄적으로 해당 국가의 분배 결과를 추계하기 위한 표준편제방법(Centralised Approach)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보다 신뢰성 있는 통계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자국 상황에 대한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통계를 자체생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편제방법을 더욱 개선하는 것도 EG DNA의 주요한 목표중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활동으로 미시자료를 국민계정과 연결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정기적 시험편제를 시도함으로써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세밀하게 통계적 방법론을 확립시켜 나가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시-거시 자료간 갭을 더욱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파레토조정법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데이터 세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작업은 주로 소득 5분위별 구분에 초점이 놓여 있었지만 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 10분위별이나 100분위별, 또는 연령 및 성별 등 특정한 사회인구학적 그룹별 데이터까지 공표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OVID19 등을 계기로 가계부문 분배와 관련해 보다 적시성 있는 정보에의 요구가 촉발되었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도 계속 진행된다. 가계분배계정은 추계방법의 복잡성, 기초자료의 가용성 등으로 상당히 긴 공표시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차 축소를 위해 나우캐스팅²⁵⁾ 기술 개발 등의 다양한 노력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25) 공표 주기가 짧은 경제 변수를 이용하여 공표 주기가 긴 경제 변수의 현재 상태를 추정·예측하는 것을 의미

참고문헌

- 한국은행(202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 Eurostat(2013), “European household income by groups of households”
- Eurostat(2022), “Distributional national account estimates for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 methodological issues and experimental results”
- Ilja Kristian Kavonius and Veli-Matti Törmälehto(2003), “Household income aggregates in micro and macro statistics”
- IMF·FSB(2009), “Report to the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 Joseph E. Stiglitz, Amartya Sen and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OECD(2020), “Distributional information on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saving in line with national accounts – guidelines”
- OECD(2021),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saving in line with national accounts-Methodology and results from the 2020 collection round”
- OECD(2022), “Income, Consumption, Saving and Wealth distributions”, The 19th Meeting of the Committee on Statistics and Statistical Policy(22-23 June 2022)
- The Canberra Group(2001),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

한국은행 경제통계 안내

Information on Statistics of Bank of Korea

경제통계시스템(ECOS) 수록 통계

No	통계명칭	내 용
1	통화/금융	
1.1	통화/유동성	
	본원통화	본원통화 구성내역
	M1(협의통화)	M1(협의통화) 상품별 구성내역
	M2(광의통화)	M2(광의통화) 상품별 구성내역 M2(광의통화) 경제주체별 보유현황 M2 기관별 구성내역
	L(금융기관 유동성) 관련통계	L(금융기관 유동성) 상품별 구성내역 L 기관별 구성내역
	L(광의유동성) 구성내역	L(광의유동성) 구성내역(말잔, 계절조정계열) L(광의유동성) 구성내역(말잔, 월계열)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예금취급기관 개관표(말잔) 중앙은행 개관표(말잔) 기타예금취급기관 개관표(말잔)
1.2	금융기관 여수신	
	수신	예금은행 수신 비은행예금기관 수신
	여신	예금은행 대출금(말잔) 비은행금융기관 여신(말잔)
	지역별 여수신	예금은행 지역별 수신(말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지역별 수신(말잔) 생명보험회사 지역별 수신(말잔) 예금은행 지역별 대출금(말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지역별 여신(말잔) 생명보험회사 지역별 여신(말잔) 예금은행 지역별 연체율
	가계신용	가계신용(분기)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월)
	산업별대출금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예금은행 산업별대출금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기타 여수신 관련 통계	예금은행 예금회전을 금융기관 점포/인원 현황 은행대출금 연체율 보험계약실적 예금규모별 계좌수 및 금액
1.3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시장금리	시장금리(일별)

No	통계명칭	내 용
		시장금리(월, 분기, 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수신금리 대출금리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고정 및 특정금리연동 대출 비중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1.4	한국은행 주요계정	
	한국은행 주요계정(말잔)	한국은행 주요계정(말잔)
	화폐발행잔액	화폐발행잔액
	예금은행 지급준비액	예금은행 지급준비액(신기준, 평잔) 예금은행 지급준비액(구기준, 평잔)
	한국은행 원화대출금	한국은행 원화대출금
1.5	주식/채권/재정	
	주식거래/주가지수	주식시장(일) 주식시장(월, 년) 투자자별 주식거래 증시주변자금동향 주가지수선물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
	채권거래	채권거래
	주요 국공채 발행액/잔액	주요 국공채 발행액/잔액
	재정	통합재정수지 조세징수액
2	국민계정	
2.1	국민소득통계(2015년 기준년)	
	주요지표	주요지표(연간지표) 주요지표(분기지표)
	생산 및 지출 GDP, GDP 디플레이터	경제활동별 GDP 및 GNI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GDP 디플레이터
	종합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자본거래 국외거래
	제도부문별 계정	제도부문별 생산계정(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 연간) 제도부문별 자본계정(명목, 연간)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실질, 분기)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실질, 분기)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No	통계명칭	내 용
	총자본형성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주체별 총자본형성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
		경제활동별 설비투자
	민간최종소비지출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 (명목, 연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계정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최종소비지출(명목, 연간)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명목, 연간)
		일반정부의 부문별 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명목, 연간)
		공공부문의 부문별 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명목, 연간)
	총저축과 총투자	총저축과 총투자(계절조정, 명목, 분기)
		총저축과 총투자(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정보통신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정보통신산업(계절조정, 실질, 분기)	
	정보통신산업(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2.2	산업연관표	
2.3	자금순환표	
	2009- (2008 SNA 기준)	금융거래표(2009~)
		금융자산부채잔액표(2008~)
	2002-2013 (1993 SNA 기준)	금융거래표(2003~2013)
		금융자산부채잔액표(2002~)
	1975-2005 (1968 SNA 기준)	금융거래표(1975~2005)
		금융자산부채잔액표(1975~2005)
	1969-1974 (1968 SNA 기준)	금융거래표(1970~1974)
		금융자산부채잔액표(1969~1974)
	1962-1970 (1953 SNA 기준)	금융거래표(1963~1970)
		금융자산부채잔액표(1962~1970)
2.4	국민대차대조표(2015년 기준년)	
자산별 자본스톡	자산별 순자본스톡	
	자산별 생산자본스톡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명목, 연말기준)	
	자산/부채의 증감(명목)	
	순자산 증감(명목)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보유손익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명목보유손익(명목)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중립보유손익(명목)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실질보유손익(명목)	
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	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제도부문별 생산자본스톡(실질, 연말기준)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제도부문별 연쇄라스파이레스 자본서비스물량지수	

No	통계명칭	내 용
		제도부문별 연쇄통크비스트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제도부문별 자본사용자비용 비중(명목, %)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실질, 연말기준)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실질, 연말기준)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경제활동별 연쇄라스파이레스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경제활동별 연쇄통크비스트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경제활동별 자본사용자비용 비중(명목, %)
	주택 시가총액(명목, 연말기준)	주택 시가총액(명목, 연말기준)
	시도별 토지자산 순자본스톡 (명목, 연말기준)	시도별 토지자산 순자본스톡(명목, 연말기준)
2.5	국제수지표	
	국제수지	국제수지
		경상수지(계절조정)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
		지역별 경상수지
		지역별 자본수지/금융계정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0~2020)
2.6	국제투자대조표/대외채권채무	
	국제투자대조표	국제투자대조표(IIP)
		지역별 국제투자대조표
		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무/채권	대외채무
		대외채권
		순대외채권
3	환율/통관수출입/외환보유액	
3.1	환율	
	일일환율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환율
		원화의 대미달러, 원화의 대위안/대엔 환율
	평균환율/기말환율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환율
		원화의 대미달러, 원화의 대위안/대엔 환율
3.2	통관기준 수출입	
	국가별 수출입	국가별 수출
		국가별 수입
	결제통화별 수출입	결제통화별 수출
		결제통화별 수입
3.3	무역지수/교역조건지수(2015=100)	
	수출입 금액/물량지수	수출 금액/물량지수

No	통계명칭	내 용
		수입 금액/물량지수
	교역조건지수	교역조건지수
3.4	해외투자/차관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
	외국인투자(신고기준)	외국인투자(신고기준)
3.5	외환보유액	
4	물가	
4.1	생산자물가지수(2015=100)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 생산자물가지수(특수분류) 생산자물가지수(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1910~1964)
	국내공급물가지수	국내공급물가지수
	총산출물가지수	총산출물가지수
4.2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특수분류)	소비자물가지수(특수분류)
4.3	수출/수입물가지수(2015=100)	
	수출물가지수	수출물가지수(기본분류) 수출물가지수(특수분류) 수출물가지수(품목별)
	수입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기본분류) 수입물가지수(특수분류) 수입물가지수(품목별) 수입물가지수(용도별)
4.4	부동산 가격지수	
	주택가격지수(KB)	주택매매가격지수(KB) 주택전세가격지수(KB)
	지역별 지가변동률	지역별 지가변동률
	유형별 주택가격지수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유형별 주택전세가격지수 유형별 주택월세통합가격지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상권별 임대가격지수	상권별 오피스임대가격지수 상권별 중대형 상가 임대가격지수
5	기업경영분석	
5.1	기업경영분석지표(연)	
	기업경영분석지표	기업경영분석지표(2009~, 전수조사) 기업경영분석지표(2007~2010) 기업경영분석지표(~2007)
	성장성 지표	성장성 지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성장성 지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No	통계명칭	내 용
		성장성 지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성장성 지표(2007~2010, 표본조사)
		성장성 지표(1998~2007, 표본조사)
		성장성 지표(1990~1997, 표본조사)
	수익성 지표	수익성 지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수익성 지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수익성 지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수익성 지표(2007~2010, 표본조사)
		수익성 지표(1998~2007, 표본조사)
		수익성 지표(1990~1997, 표본조사)
	자산/자본 지표	자산/자본 지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자산/자본 지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자산/자본 지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자산/자본 지표(2007~2010, 표본조사)
		자산/자본 지표(1998~2007, 표본조사)
		자산/자본 지표(1990~1997, 표본조사)
	자산/자본 회전율	자산/자본 회전율(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자산/자본 회전율(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자산/자본 회전율(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자산/자본 회전율(2007~2010, 표본조사)
		자산/자본 회전율(1998~2007, 표본조사)
		자산/자본 회전율(1990~1997, 표본조사)
	생산성 지표	생산성 지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생산성 지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생산성 지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생산성 지표(2007~2010, 표본조사)
		생산성 지표(2002~2007, 표본조사)
		생산성 지표(1998~2006, 표본조사)
생산성 지표(1990~1997, 표본조사)		
생산성 지표(1990~1997, 표본조사)		
5.2	기업경영분석지표(분기)	
	성장성 지표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	수익성 지표
	자산/자본 지표	자산/자본 지표
	자산 회전율	자산 회전율
5.3	재무상태표(연)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재무상태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재무상태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재무상태표(2008~2010, 표본조사)
		재무상태표(2000~2007, 표본조사)
		재무상태표(1999, 표본조사)
		재무상태표(1997~1998, 표본조사)
		재무상태표(1990~1996, 표본조사)

No	통계명칭	내 용
5.4	손익계산서(연)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손익계산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손익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손익계산서(2008~2010, 표본조사) 손익계산서(2000~2007, 표본조사) 손익계산서(1999, 표본조사) 손익계산서(1997~1998, 표본조사) 손익계산서(1990~1996, 표본조사)
5.5	제조원가명세서(연)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제조원가명세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제조원가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제조원가명세서(2007~2010, 표본조사) 제조원가명세서(2000~2007, 표본조사) 제조원가명세서(1990~1999, 표본조사)
5.6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2007~2010, 표본조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2000~2007, 표본조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1990~1999, 표본조사)
5.7	부가가치 구성(연)	
	부가가치 구성	부가가치 구성(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부가가치 구성(중소기업기본법, 2015~2016) 부가가치 구성(조세특례제한법, 2009~2014) 부가가치 구성(2007~2010, 표본조사) 부가가치 구성(2002~2007, 표본조사) 부가가치 구성(1998~2006, 표본조사) 부가가치 구성(1990~1997, 표본조사)
5.8	현금흐름표(연)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2012~) 현금흐름표(2008~2011) 현금흐름표(1995~2007)
	현금흐름관련 기타 주요 재무항목	현금흐름관련 기타 주요 재무항목(2012~) 현금흐름관련 기타 주요 재무항목(2008~2011) 현금흐름관련 기타 주요 재무항목(1995~2007)
	현금흐름비율	현금흐름비율(2012~) 현금흐름비율(2008~2011) 현금흐름비율(1995~2007)

No	통계명칭	내 용
5.9	분위수(연)	
	분위수	분위수(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13~) 분위수(2013~2016)
5.10	지역별 기업경영분석	
	기업경영분석(10차한국표준산업분류)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 자산/자본 지표 자산/자본 회전을 생산성 지표 부가가치 구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기업경영분석(9차한국표준산업분류)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 자산/자본 지표 자산/자본 회전을 생산성 지표 부가가치 구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6	심리지수	
6.1	기업경기실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실적) 기업경기실사지수(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매출액가중 실적) 기업경기실사지수(매출액가중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구)실적(~2012.6)) 기업경기실사지수((구)전망(~2012.7))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2009.8~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2009.8~(실적)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2009.8~(전망)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2009.8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2009.8(실적)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2009.8(전망)
	지역별 기업경기실사지수	지역별 기업경기실사지수(실적(2013.1~)) 지역별 기업경기실사지수(전망(2013.2~)) 지역별 기업경기실사지수(실적(~2012.12)) 지역별 기업경기실사지수(전망(~2013.1))
6.2	소비자동향조사	
	소비자동향조사	소비자동향조사(전국, 월, 2008.9~)

No	통계명칭	내 용
		소비자동향조사(전국, 분기, 1995.3/4~2008.2/4)
		기대인플레이션율(전국, 월)
		소비자동향조사(지역, 월)
6.3	경제심리지수	
6.4	뉴스심리지수(실험적 통계)	
6.5	대출행태서베이	
	대출행태서베이	대출행태서베이(대출태도)
		대출행태서베이(신용위험)
		대출행태서베이(대출수요)
7	지급결제	
7.1	어음교환 및 부도	
	어음교환 및 부도	어음교환 및 부도
	지역별 어음부도율	지역별 어음부도율
7.2	한은금융망 통계	
	한은금융망	한은금융망
	회계결제시스템 통계	한은금융망결제통계표
		지급결제동향
7.3	지로서스템 및 금융공동망	
	지로서스템	지로서스템
	금융공동망	금융공동망
7.4	BIS기준통계	
	결제시스템별 통계	결제시스템별 통계
	지급수단별 통계	지급수단별 통계
7.5	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가맹점(여신금융협회)	가맹점(여신금융협회)
7.6	전자금융통계/금융정보화통계	
	전자금융통계	인터넷뱅킹
		전자어음
		전자화폐
		전자지급서비스
	금융정보화 통계	은행
		증권
		보험
		기타
8	산업/기타	
8.1	경제일반/경기	
	경제일반/경기	산업별 사업체수/종사자수
		경기종합지수
		설비투자지수
		전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제외)

No	통계명칭	내 용
8.2	농림어업	
	농림어업	농어가 인구/가구수 농림생산지수 경지면적 어획량 농어가 자산 및 부채
8.3	광업/제조업	
	광업/제조업	산업별 생산/출하/재고 지수 재별 제조업생산지수 설비용 기계류 생산지수 품목별 광공업 생산·출하·재고·내수·수출량 제조업 재고율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 지수 제조업 평균가동률 기계수주액
8.4	건설/에너지	
	건설/에너지	국내건설수주액 건설기성액 건축물착공현황 건축허가현황 미분양주택현황 주택건설인허가실적 주택보유수/주택보급률 발전전력량 부문별전력사용량 에너지소비량 석유제품수급
8.5	서비스업	
	서비스업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재별 및 상품군별 판매액지수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도소매업 재고액지수 여객수송실적 자동차등록대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실적 소비재 수입액
8.6	인구/노동/가계	
	인구/노동/가계	추계인구/고령인구비율/합계출산율 경제활동인구 직종별평균임금 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노동생산성지수

No	통계명칭	내 용
		단위노동비용지수 시간당 명목임금지수 고용보험가입현황 실업급여수급실적 소득분배지표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이상) 농가가계수지
9	해외/북한	
9.1	주요국제통계	
	통화·금융	국제 주요국 본원통화 국제 주요국 광의통화 국제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금리
	물가	국제 주요국 생산자물가지수 국제 주요국 소비자물가지수
	국제수지/외환	국제 주요국 경상수지 국제 주요국 상품수지 국제 주요국 서비스수지 국제 주요국 수출(통관기준) 국제 주요국 수입(통관기준) 국제 주요국 외환보유액
	국민소득	국제 주요국 경제성장률 국제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국제 주요국 국내총생산(PPP적용) 국제 주요국 국민총소득(GNI) 국제 주요국 1인당 GDP
	산업/고용	국제 주요국 산업생산지수(계절변동조정) 국제 주요국 실업률(계절변동조정) 국제 주요국 취업자수(계절변동조정)
	주요시장지표	주요국제금리 국제 주요국 주가지수 국제상품가격
9.2	북한 관련 통계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	총량 한국/북한 배율
	북한의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총생산	북한의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총생산

2023년 4~6월중 통계공표일정

* 통신/방송/인터넷 매체에서 취급 가능한 일자 및 시각

	공표일	시각	대상통계	담당팀
4월	6일(목)	12:00	2022년 자금순환(잠정)	자금순환팀
	7일(금)	08:00	2023년 2월 국제수지(잠정)	국제수지팀
	13일(목)	06:00	2023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물가통계팀
	14일(금)	12:00	2023년 2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금융통계팀
	14일(금)	12:00	2023년 2월 통화 및 유동성	금융통계팀
	20일(목)	12:00	2022년 결제통화별 수출입(확정)	국제수지팀
	21일(금)	06:00	2023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5일(화)	08:00	2023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국민소득총괄팀
	26일(수)	06:00	2023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통계조사팀
	26일(수)	12:00	2023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물가통계팀
	27일(목)	06:00	2023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기업통계팀
	28일(금)	12:00	2023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금융통계팀
5월	10일(수)	08:00	2023년 3월 국제수지(잠정)	국제수지팀
	12일(금)	12:00	2023년 3월 통화 및 유동성	금융통계팀
	16일(화)	06:00	2023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3일(화)	06:00	2023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통계조사팀
	23일(화)	12:00	2023년 1/4분기 가계신용(잠정)	금융통계팀
	24일(수)	06:00	2023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기업통계팀
	24일(수)	12:00	2023년 1/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국외투자통계팀
	25일(목)	06:00	2023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물가통계팀
	30일(화)	12:00	2023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금융통계팀
	31일(수)	12:00	2023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물가통계팀
6월	2일(금)	08:00	2021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2년 국민계정(잠정)	국민소득총괄팀
	2일(금)	08:00	2023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국민소득총괄팀
	9일(금)	08:00	2023년 4월 국제수지(잠정)	국제수지팀
	9일(금)	12:00	2023년 1/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금융통계팀
	13일(화)	12:00	2022년 기업경영상태 분석 결과(속보)	기업통계팀
	14일(수)	06:00	2023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물가통계팀
	14일(수)	12:00	2023년 4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조사팀
	14일(수)	12:00	2023년 4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금융통계팀
	20일(화)	12:00	2023년 1/4분기 기업경영상태 분석 결과	기업통계팀
	21일(수)	06:00	2023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2일(목)	12:00	2023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국제수지팀
	27일(화)	12:00	2023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국외투자통계팀
	28일(수)	06:00	2023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통계조사팀
	28일(수)	12:00	2023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물가통계팀
	29일(목)	06:00	2023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기업통계팀
30일(금)	12:00	2023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금융통계팀	

2023년 7~9월중 통계공표일정

* 통신/방송/인터넷 매체에서 취급 가능한 일자 및 시각

공표일	시각	대상통계	담당팀
7월	6일(목) 12:00	2023년 1/4분기 자금순환(잠정)	자금순환팀
	7일(금) 08:00	2023년 5월 국제수지(잠정)	국제수지팀
	13일(목) 06:00	2023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	물가통계팀
	14일(금) 12:00	2023년 5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금융통계팀
	14일(금) 12:00	2023년 5월 통화 및 유동성	금융통계팀
	20일(목) 12:00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국민B/S팀
	21일(금) 06:00	2023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5일(화) 08:00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국민소득총괄팀
	26일(수) 06:00	2023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통계조사팀
	27일(목) 06:00	2023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기업통계팀
	27일(목) 12:00	2023년 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물가통계팀
	28일(금) 12:00	2023년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금융통계팀
8월	8일(화) 08:00	2023년 6월 국제수지(잠정)	국제수지팀
	11일(금) 12:00	2023년 6월 통화 및 유동성	금융통계팀
	17일(목) 06:00	2023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2일(화) 06:00	2023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통계조사팀
	22일(화) 12:00	2023년 2/4분기 가계신용(잠정)	금융통계팀
	23일(수) 06:00	2023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기업통계팀
	23일(수) 12:00	2023년 2/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국외투자통계팀
	24일(목) 06:00	2023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9일(화) 12:00	2023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금융통계팀
	29일(화) 12:00	2023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물가통계팀
30일(수) 12:00	2023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금융통계팀	
9월	5일(화) 08:00	2023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국민소득총괄팀
	7일(목) 12:00	2023년 2/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금융통계팀
	8일(금) 08:00	2023년 7월 국제수지(잠정)	국제수지팀
	12일(화) 12:00	2023년 2/4분기 기업경영상태 분석 결과	기업통계팀
	13일(수) 06:00	2023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물가통계팀
	13일(수) 12:00	2023년 7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금융통계팀
	13일(수) 12:00	2023년 7월 통화 및 유동성	금융통계팀
	20일(수) 06:00	2023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0일(수) 12:00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	지출국민소득팀
	22일(금) 06:00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통계조사팀
	26일(화) 12:00	2023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물가통계팀
	27일(수) 06:00	2023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기업통계팀
	27일(수) 12:00	2023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금융통계팀
27일(수) 12:00	2023년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물가통계팀	

『국민계정리뷰』 투고 안내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은 국민계정 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계정과 관련된 동향과 분석자료, 새로운 통계 및 분석기법 등에 대한 연구자료를 종합·수록하여 『국민계정리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 책자에 게재되는 원고는 한국은행 직원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원고 게재를 희망하는 분은 다음의 요령에 의거 원고를 작성·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주제〉

- 국민소득, 산업연관, 국제수지, 자금순환, 계절변동조정, 초단기예측, 지수이론, 표본설계 등 국민계정의 편제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원고 투고요령 및 게재〉

- 본지의 발간기준일(3월, 9월 말일)을 참고하여 발간 2개월 전까지 원고 및 파일을 제출
- 원고 제출시 저자의 이력서 및 영문성명, 소속기관 및 그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자택주소와 전화번호를 별지에 기재하여 송부
- 제출된 원고는 행내외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 후 『국민계정리뷰』 편집위원회가 수록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수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원고작성 요령〉

- 원고는 A4용지에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글씨 크기는 본문 11, 각주 9의 크기로 하여 행간은 160으로 설정하고 분량은 A4용지 30매 내외로 작성
- 원고의 처음은 제목, 저자명, 요약, 목차 등을 포함하고 요약은 첫 장을 넘지 않도록 작성
- 본문의 장·절 구분은 I, 1, 가, (1), (가)의 순으로 하며, 원고 작성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 사용
- <표> <그림>의 일련번호는 장절 구분하지 않으며 글씨체는 돋움(표 제목 10, 표 내용 10, 표 주석 9)으로 설정

- 참고문헌은 동양문헌의 경우 가나다순, 서양문헌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기재순서는 저자명, 논문명, 서명, 호, 발행처, 연도, 인용쪽의 순으로 기재하며 이중 논문명은 “ ”로, 서명은 동양문헌의 경우 『 』, 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

〈문의처〉

(0453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5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국민소득총괄팀 『국민계정리뷰』 담당자 앞

전화 : (02)759-4378, 4320 팩스 : (02)759-4387 E-mail : bokstat3@bok.or.kr

『국민계정리뷰』 수록 원고 목록 안내

『국민계정리뷰』 각 호에 수록된 원고의 목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의 ①조사·연구-②간행물-③발간주기별 검색-④반기-⑤국민계정리뷰에 게시되어 있으며 매반기마다 갱신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Bank of Korea website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국민계정리뷰' (National Accounts Review). Below the title, there is a breadcrumb trail: '조사·연구 > 간행물 > 발간주기별 검색 > 반기 > 국민계정리뷰'. A search bar is visible with the text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and a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한국은행', '통화정책', '금융안정', '외환·국제금융', '화폐', '조사·연구', '경제통계', '경제교육', and '커뮤니케이션'. The '조사·연구' tab is selected. On the left side, there is a sidebar menu with categories like '주요 보고서', '간행물', '연구자료', '정보·동향자료', '지역본부자료', and '국외사무소자료'. The '간행물' category is expanded, showing sub-items like '주제별 검색', '발간주기별 검색', '단행본', '기타', and '발간순지 간행물'. The main content area shows a table of search results for '국민계정리뷰' under the '반기' category. The table has columns for '수시' (Issue), '주간' (Volume), '호간' (Issue), and '계간' (Page Cou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수시	주간	호간	계간
반기	연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남북한정보보고서 국민계정리뷰 </div>			
Total : 382건 [1/39 pages]			
2022년 제1호	경제일반		2022.03.25 921
2021년 제4호	경제일반		2021.12.27 480
2021년 제3호	경제일반		2021.09.24 1623
2021년 제2호	경제일반		2021.06.25 1614

국민계정리뷰

NATIONAL ACCOUNTS REVIEW

발행일 | 2023. 3.

발행인 | 이창용

편집인 | 황상필

발행처 |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110)

인쇄처 | (주)동화인쇄공사

- 본 책자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은행 『국민계정리뷰』
○년 ○호 ○페이지에서 인용” 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본 책자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759-4378, 4320)

